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0504-250025-13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 발간사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이 탄핵되고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실시한 쟁위선거로서 극도의 정치적 혼란 속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건국 이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두 번째로 인용됨에 따라 무엇보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공약 등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후보자 검증 채널로서의 역할을 굳건히 수행하였습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04년 3월 설치된 이후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자토론회 및 정책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무를 절차에 따라 묵묵히 추진하였습니다. 선거 실시가 확정된 즉시 전문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의제선정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주제·질문을 발굴하였고, 질문사항을 결정한 후 질문내용 전체를 후보자에게 공개하여 내실 있는 토론을 도모하는 동시에 다양한 토론방식을 활용하여 유권자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공약검증토론’을 새롭게 도입하여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유권자가 시청할 수 있도록 법정 중계 의무 방송사(KBS, MBC, SBS) 외에도 국회방송, KTV, 복지TV 및 온라인(유튜브, 네이버TV)을 통해 후보자토론회를 생중계하였고,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을 동시 실시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 또한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만 실시하던 복지TV의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을 초청의 후보자토론회까지 확대하였고, 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채널에서 모든 토론회 영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언제든지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록 토론회 편성 및 중계방송 등 방송사 협력 과정, 초청 대상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부 후보자의 불만 제기, 후보자토론회에서 일부 주제를 벗어나거나 불편한 발언 등 난제가 있었으나 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으로 대과 없이 토론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토론위원회는 이러한 선거방송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사료로 보존하고자 선거방송 토론의 준비과정, 진행상황, 개최결과 등을 집약하고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수록하여 백서를 발간하여 오고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고민과 성과가 담긴 본 백서도 관련 지식으로 활용되어 선거방송토론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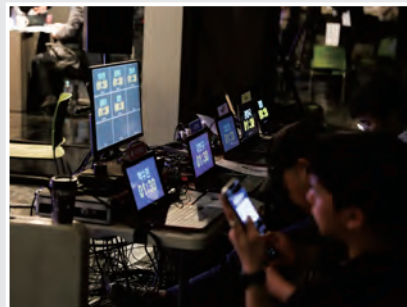
2025년 10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조영구

사진으로 보는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선거방송토론 관리 회의 개최



▲ 제2차 위원회의(2025. 4. 10.)



▲ 전문위원회의(2025. 4. 21.)



▲ 준비소위원회의(2025. 4. 22.)



▲ 제3차 위원회의(2025. 4. 23.)



▲ 정책토론회 설명회(2025. 4. 25.)



▲ 정책토론회 설명회(2025. 4. 25.)



▲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 설명회(2025. 5. 14)



▲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 설명회(2025. 5. 14)



▲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설명회(2025. 5. 14)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3차)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개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목차

발간사	2
사진으로 보는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5
제1장 개 관	33
제1절 들어가는 말	34
제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	38
제2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43
제1절 토론회 관리체제 정비	44
1.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44
2.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 정비	46
가. 위원 관리 및 위원회의 운영	47
1) 위원 관리	47
2) 위원회의 운영	47
나. 전문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48
1) 전문위원회의 운영	48
2) 준비소위원회의 운영	50
제2절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51
1.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51
2.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	54
제3절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55
1. 후보자토론회 기획방송 제작	55
2. 의제선정 여론조사 실시	56
3. 일대일 수어통역(복지TV) 확대 실시	56
4. 포털사이트 등 생중계 확대 실시	56
5. 다시보기 서비스 운영	57

제3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59

제1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60

1. 개 요	60
2. 개최현황	60
3. 위원회의 등 운영	62
가. 전문위원회의	62
나. 준비소위원회의	63
다. 전체위원회의	64
4.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	65
5. 초청대상 정당 선정	66
6. 토론주제 결정	68
가. 토론의제 수집	69
나. 토론주제 결정	71
7.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72
8. 사회자 선정	74
9. 질문사항 선정	75
10. 설명회 개최 및 토론회 개최 홍보	76
11.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78
12.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자막방송	81
13. 시청률 현황	82

제2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84

1. 개 요	84
2. 개최현황	85
3. 위원회의 등 운영	86
4. 개최 일시·장소 등 결정	88
5. 초청대상 후보자 등 선정	90
가. 여론조사 공표결과 수집	90
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91
6. 토론주제 결정	93
가. 토론의제 수집	93
나. 토론주제 선정	104
7.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106
8. 사회자 선정	113
9. 질문사항 선정	115

목차

10. 설명회 개최 및 토론회 개최 홍보	119
가. 설명회 개최	119
나. 토론회 개최 홍보	121
11. 토론회장 설비 및 안전관리	125
가. 토론회장 설비	125
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129
12. 토론회 진행	132
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	132
나.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	134
13.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136
가.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136
나. 일대일 수어통역 방송	137
14. 시청률 등 현황	138

제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141

제1절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	142
1. 개요	142
2. 주요 결과	144

제2절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156
1. 개요	156
2. 용역 결과 요약 보고서	168

제3절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181
1. 개요	181
2. 발제문	183

부록	
1. 주요업무 추진 연표	240
2. 토론진행표	242
가. 정책토론회	242
나. 후보자토론회	243
3. 언론보도 현황	247
가. 보도자료	247
나. 주요 언론보도 현황(신문기사 등)	276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283

〈표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및 의사결정 구조	46
〈표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47
〈표 2-3〉	위원회의 개최 현황	48
〈표 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구성 현황	49
〈표 2-5〉	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49
〈표 2-6〉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50
〈표 2-7〉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50
〈표 2-8〉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52
〈표 2-9〉	정책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결정 순서	52
〈표 2-10〉	후보자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결정 순서	52
〈표 2-11〉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 현황	53
〈표 2-12〉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현황	54
〈표 2-13〉	후보자토론회 홍보 기획방송 유튜브 채널 조회수 현황	55
〈표 2-14〉	의제선정 국민여론조사 실시 현황	56
〈표 3-1〉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61
〈표 3-2〉	정책토론회 관련 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63
〈표 3-3〉	정책토론회 관련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64
〈표 3-4〉	정책토론회 관련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64
〈표 3-5〉	정책토론회 관련 위원회의 개최 현황	65
〈표 3-6〉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67
〈표 3-7〉	정당별 직전선거 득표율 현황(100분의 3 이상인 정당)	67
〈표 3-8〉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68
〈표 3-9〉	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 개요	69
〈표 3-10〉	의제선정 여론조사 주요 결과① ‘가장 관심 있는 분야’	69
〈표 3-11〉	의제선정 여론조사 주요 결과② ‘분야별 주제’	70
〈표 3-12〉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현황	72
〈표 3-13〉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73
〈표 3-14〉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76
〈표 3-15〉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결과	77
〈표 3-16〉	정책토론회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 현황	78
〈표 3-17〉	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82
〈표 3-18〉	정책토론회 유튜브 등 조회수 현황	83
〈표 3-19〉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85

표 목차

〈표 3-20〉	후보자토론회 관련 위원회의 등 개최 현황	87
〈표 3-21〉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현황	89
〈표 3-22〉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 결과	91
〈표 3-23〉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91
〈표 3-24〉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현황(100분의 3 이상인 정당)	92
〈표 3-25〉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등 선정	92
〈표 3-26〉	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총괄표	94
〈표 3-27〉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 개요	95
〈표 3-28〉	경제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96
〈표 3-29〉	사회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99
〈표 3-30〉	정치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101
〈표 3-3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103
〈표 3-32〉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105
〈표 3-33〉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106
〈표 3-34〉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108
〈표 3-35〉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양자토론)	110
〈표 3-36〉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양자토론)	112
〈표 3-37〉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115
〈표 3-38〉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양자토론) '주도권토론' 사회자 도입 문안	117
〈표 3-39〉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3인 토론안)	118
〈표 3-40〉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2인 양자토론안)	118
〈표 3-41〉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1인 대담안)	119
〈표 3-42〉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120
〈표 3-43〉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좌석 및 발언 순서 추첨 결과	121
〈표 3-44〉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좌석 및 발언 순서 추첨 결과	121
〈표 3-45〉	후보자토론회 보도자료 제공 현황	122
〈표 3-46〉	후보자토론회 기획방송 제작 현황	122
〈표 3-47〉	후보자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현황	125
〈표 3-48〉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138
〈표 3-49〉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138
〈표 3-50〉	후보자토론회 유튜브 조회수 현황(다시보기 포함)	139
〈표 4-1〉	토론의제 개발 연구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142
〈표 4-2〉	경제분야(고용·노동·연금) 토론의제 개발 현황	144

〈표 4-3〉	경제분야(조세 및 부동산) 토론의제 개발 현황	145
〈표 4-4〉	경제분야(산업 및 에너지) 토론의제 개발 현황	146
〈표 4-5〉	경제분야(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토론의제 개발 현황	147
〈표 4-6〉	사회분야(사회통합) 토론의제 개발 현황	148
〈표 4-7〉	사회분야(복지 및 여성) 토론의제 개발 현황	149
〈표 4-8〉	사회분야(환경 및 안전) 토론의제 개발 현황	150
〈표 4-9〉	사회분야(교육 및 문화) 토론의제 개발 현황	151
〈표 4-10〉	정치분야(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의제 개발 현황	152
〈표 4-11〉	정치분야(정치개혁) 토론의제 개발 현황	153
〈표 4-12〉	정치분야(외교 및 대외전략) 토론의제 개발 현황	154
〈표 4-13〉	정치분야(안보·북한·통일) 토론의제 개발 현황	155
〈표 4-14〉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설문조사 설계	157
〈표 4-15〉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필요성)	158
〈표 4-16〉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개최 횟수의 적정성)	158
〈표 4-17〉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적정 개최 횟수)	159
〈표 4-18〉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사후설문조사 결과(토론시간의 적절성)	159
〈표 4-19〉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설문조사 결과(후보 초청 범위에 대한 선호 추이)	160
〈표 4-20〉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사후 설문조사 결과(구성에 대한 만족도)	161
〈표 4-21〉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사후 설문조사 결과(진행방식에 대한 선호도)	161
〈표 4-22〉	후보자토론회 주제 사후설문조사 결과(토론주제 개수의 적절성)	161
〈표 4-23〉	후보자토론회 주제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분야별 토론주제의 적절성)	162
〈표 4-24〉	후보자토론회 주제 사후설문조사 결과(논의되지 않아 아쉬운 주제)	162
〈표 4-25〉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관심도 비교)	163
〈표 4-26〉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유용성)	163
〈표 4-27〉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공정성 비교)	163
〈표 4-28〉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흥미도 비교)	164
〈표 4-29〉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결과(시청 여부)	164
〈표 4-30〉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결과(시청 횟수)	164
〈표 4-31〉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내용과 범위	170
〈표 4-32〉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 문항 내용(사전/사후조사)	171
〈표 4-33〉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173
〈표 4-34〉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참석자 현황	182

그림 목차

〈그림 2-1〉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현황	45
〈그림 2-2〉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현황	54
〈그림 2-3〉	후보자토론회 홍보 기획방송 유튜브 채널 구성 현황(썸네일)	55
〈그림 2-4〉	다시보기 서비스 페이지 구성 현황	57
〈그림 3-1〉	정책토론회 관련 회의 개최 현황	62
〈그림 3-2〉	정책토론회 관련 위원회의 개최 현황	65
〈그림 3-3〉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75
〈그림 3-4〉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77
〈그림 3-5〉	정책토론회 개최 홍보 배너	78
〈그림 3-6〉	정책토론회 스튜디오 설비 현황	79
〈그림 3-7〉	정책토론회 관련 구조물 등 설비 현황	80
〈그림 3-8〉	정책토론회 진행	81
〈그림 3-9〉	정책토론회 수어통역 등 실시 현황	82
〈그림 3-10〉	후보자토론회 관련 회의 개최 현황	86
〈그림 3-11〉	후보자토론회 경제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96
〈그림 3-12〉	후보자토론회 경제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98
〈그림 3-13〉	후보자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98
〈그림 3-14〉	후보자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100
〈그림 3-15〉	후보자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101
〈그림 3-16〉	후보자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103
〈그림 3-17〉	후보자토론회 공약발표 화면	108
〈그림 3-18〉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114
〈그림 3-19〉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 현장 안내자료 배포 설비 현황	120
〈그림 3-20〉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121
〈그림 3-21〉	후보자토론회 기획방송 화면 자료	123
〈그림 3-22〉	후보자토론회 특집 페이지 노출	123
〈그림 3-23〉	후보자토론회 관련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현황	124
〈그림 3-24〉	후보자토론회 개최장소 방송사 로비 기자석 설비 현황	125
〈그림 3-25〉	후보자토론회 스튜디오 설비 현황	126

〈그림 3-26〉 후보자토론회 구조물 및 소품 활용 현황	127
〈그림 3-27〉 후보자토론회 관련 설비 현황	128
〈그림 3-28〉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장 출입 통제 현황	130
〈그림 3-29〉 후보자토론회 외부 선거운동 구역 질서유지 현황	131
〈그림 3-30〉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SBS)	133
〈그림 3-31〉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KBS)	133
〈그림 3-32〉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MBC)	134
〈그림 3-33〉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SBS)	135
〈그림 3-34〉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 등 실시 현황	136
〈그림 3-35〉 후보자토론회 일대일 수어통역방송 현황	137
〈그림 4-1〉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개최 횟수의 적정성 추이)	158
〈그림 4-2〉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적정 개최 횟수에 대한 인식 추이)	159
〈그림 4-3〉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토론 진행 시간에 대한 선호 추이)	160
〈그림 4-4〉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설문조사 결과(초청 범위에 대한 선호 추이)	160
〈그림 4-5〉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	165
〈그림 4-6〉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선거 관련 대화	165
〈그림 4-7〉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능력 비교에 미친 영향	166
〈그림 4-8〉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사전/사후조사)1	166
〈그림 4-9〉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	167
〈그림 4-10〉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지지 변경에 미친 영향	167
〈그림 4-11〉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진행 현황	182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01장

개 관

제1절 들어가는 말

제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



제1절

들어가는 말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고 국내외의 불안한 정세 속에 2025년 4월 4일(금),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2024. 12. 14. 국회 가결)을 재판관 8명이 만장일치로 인용결정하였다.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과 동시에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²⁾하였고, 그로부터 나흘 뒤인 4월 8일(화), 정부는 대통령의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한다는 「헌법」제68조제2항³⁾ 및 「공직선거법」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제1항⁴⁾의 규정에 따라 그 마지막 날인 6월 3일(화)을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확정 공표하였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기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주요 일정⁵⁾을 공식화하였다.⁶⁾

선거일까지 통상 3~4개월을 앞두고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는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와 달리, 이번 대선에서는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자가 확정된 시점⁷⁾을 고려할 때에 유권자들의 지지와 선택을 호소하는 후보자들은 물론 후보자 검증을 원하는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기간은 매우 짧았다.

1)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전원재판부 결정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4. 4.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공보과(2025. 4. 4.)

3)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4) ①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5) 후보자등록신청일(5. 11. ~ 5. 12.), 공식선거운동기간(5. 12. ~ 6. 2.), 재외투표(5. 20. ~ 5. 25.), 사전투표(5. 29. ~ 5. 30.) 등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제21대 대선, 선거일 확정에 따른 주요 선거사무일정 안내”. 공보과(2025. 4. 8.)

7) 주요 4개 정당의 후보자 최종 확정일: 2025. 4. 8. 개혁신당 이준석, 4.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5. 1. 민주노동당 권영국, 5. 11. 국민의힘 김문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미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조기 실시한 경험이 있었으나 탄핵 관련 공방이 계속되고 있어 공정선거를 기대하는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었기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위원회의 책무는 짧은 준비기간에 비하여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선거 실시 사유를 두고 정당 간 격한 논쟁이 이어지면서 후보자의 자격 문제로 논란이 심화되어 역대 어느 대통령선거보다 후보자 검증이 필요하다는 강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⁸⁾가 개최되지 않았으므로 금번 후보자토론회는 여러 후보자를 한자리에 모아 유권자가 각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공약 및 정책 등을 비교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후보자 선택의 최대 변수로 부상하게 되었다. 그간의 토론회가 후보자에게 있어 자신의 비전, 정책, 정치적 신념 등을 유권자에게 알리면서 다른 후보자와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이번 토론회는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의 도덕성과 대통령이라는 직무에 대한 적합성 등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무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5년 5월 2일(금)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⁹⁾에 따른 정책토론회 1회를 비롯하여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¹⁰⁾에 따라 5월 18일(일) 초청대상 1차 후보자토론회, 5월 19일(월)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5월 23일(금) 초청대상 2차 후보자토론회, 5월 27일(화) 초청대상 3차 후보자토론회에 이르기까지 총 4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사전투표 실시 전까지 개최하였다.

8) 「공직선거법」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명을 초청하여 소속 정당의 정당·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9)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당·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0) 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하면서 선거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18조(자문위원등)¹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짧은 준비기간에 맞춰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초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같은 규칙 제17조(소위원회)¹²⁾에 따라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주제·진행방식, 사회자 등을 검토하여 전체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지난 선거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 전체 위원회의 등의 검토와 의결을 거쳐 ‘공약검증토론’¹³⁾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비중 있게 다루었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론주제와 질문사항을 수집하기 위하여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의제선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고, 질문사항 결정 직후 질문 전체를 정당과 후보자측에 공개하여 토론자의 토론 역량 강화 및 토론회 수준 향상에 기여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계 의무 방송사(KBS, MBC, SBS)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처음으로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을 주시청 시간대인 22시부터 24시까지로 편성하였으며, 유권자의 시청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중계 의무 방송사 외에 타 방송사에서도 유튜브 중계영상을 허용하도록 중계 의무 방송사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책토론회는 국회방송과 KTV, 복지TV(온라인),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카카오TV(KBS뉴스)로도 생중계하였고, 후보자토론회는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 및 보도전문편성채널(YTN, 연합뉴스)로도 생중계하였다. 아울러 중계방송사에 토론회 영상 사용 동의를 받아 저작권 문제로 다시보기 서비스(유튜브 게시)가 제한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유권자가 언제든지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계정), 네이버TV 등 다양한 시청 채널을 운영하였다. 유튜브 중계 영상 총 조회수가 11.6백만 회에 달하여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을 방증하기도 하였다.

11)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12)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13) 모든 후보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 후 같은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모든 토론회에서 수어통역과 자막방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한 ‘일대일 수어통역 방송’을 예산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책토론회 및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뿐만 아니라 초청의 후보자토론회까지 확대하였다.

이렇듯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공정한 토론회 진행을 위해 매진한 결과, 위원회 추진 사무에 관한 직접적인 이의제기는 없었다. 그러나 일부 후보자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고, 다수의 유권자가 일부 후보자의 주제와 상관 없거나 네거티브한 발언 및 특정 후보자의 불편감을 주는 신체 관련 발언에 대하여 제지하지 않은 위원회 및 방송사를 상대로 항의와 비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회는 향후 후보자토론회가 정책과 공약에 대한 공론의 장으로서 순기능할 수 있도록 위원회 또는 방송사(사회자)의 개입 범위 등 역할과 한계에 대하여 고찰하고 개선하고자 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우선 모든 후보자의 공정한 토론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초청의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및 합동방송연설회의 개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규칙」을 일부 개정¹⁴⁾하여 토론회 등의 1회 개최시간을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¹⁵⁾ 등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제1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개관하였고 제2장은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의 내용을 담았다. 제3장에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관리 및 개최 전반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였고, 제4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및 효과분석 연구와 평가 세미나 개최 결과 및 발제문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백서의 부록에는 후보자토론회 등의 개최 및 언론보도 현황, 관련 법규 등 다양한 실증적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14)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633호). 관보 제21077호 (2025. 9. 12. 공포)

1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제2절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종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의 ‘대담·토론회’ 및 정당의 ‘정책토론회’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해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기관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독립기관으로 설치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선거방송토론을 주관·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정당법」 제39조에 따라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정당정책토론회’(임기만료에 의한 선거가 있는 해의 경우,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제외)에 관한 직무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다.
- 17개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된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교육감 선거의 대담·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 252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설치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 개최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한 법적 직무의 공정한 수행 이외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원주의 시대에서 요구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가치에 입각한 건전한 토론문화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방선거 대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실무자 교육 및 연수, 그리고 선거방송토론 제도연구반 및 관련 연구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보다 유용한 후보자 판단의 기제로서의 토론회 운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토론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는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등을 통해 건전한 토론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2. 선거방송토론의 개념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의 개념은 같은 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른 공직선거 ‘후보자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른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¹⁶⁾

‘선거방송토론’의 개념 정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백서에서는 공직선거에 앞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개최되는 후보자토론회와 정책토론회에 공통된 사항을 특징적으로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기로 한다. 즉, ‘선거방송토론’은 각종 공직선거에 앞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복수의 후보자 또는 정당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정강·정책 및 정견 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기간에 개최하는 선거방송의 한 유형이다.¹⁷⁾

16) 넓은 의미에서 ‘선거방송토론’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에 의해서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도 포함되지만, 이 백서에서 ‘선거방송토론’의 개념은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양자를 포함하는 「공직선거법」상의 개념으로 한정지어 사용하기로 한다.

17)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선거방송’은 “...선거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방송”으로 정의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 3의 규정 이외에 같은 법에 명시된 선거방송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70), 후보자 또는 그가 지명하는 연설원의 방송연설 (§71),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72), 경력방송 (§73),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81).

3. 선거방송토론의 기능적 의의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Juergen Habermas)의 ‘공론장 이론’(1990)에 따르면 계몽된 국민의 의사에 기초하는 정치적 결정은 민주 정치에 있어서 더 높은 가치와 더 안정된 정당성을 갖는다.¹⁸⁾ 오늘날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그러한 정치적 결정을 위한 판단 형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 라디오와 텔레비전 등 고전적 유형에서 디지털 시대의 첨단 유형에 이르기까지 - 대개의 경우 다양한 대중매체들을 통해서 얻는다.¹⁹⁾ 따라서 대중매체는 그 다양성과 도달 범위에 비추어볼 때, 정치와 국민을 연결시켜주는 근본기제이며, 그 중에서도 여전히 가장 보편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는 텔레비전이다. 이는 오늘날 텔레비전을 통한 선거방송토론이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요 공직선거를 위한 유권자의 후보자 비교 판단의 기제인 동시에 후보자들이 진지하게 여기는 선거운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 결정에 가장 많이 참고한 매체가 후보자토론회였다는 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높은 국민적 관심 속에 유권자 선택에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해 주는 주요 기제로 정착되었다.²⁰⁾

우리나라 「헌법」 제116조에 기초하는 선거공영제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법정 선거방송토론은 다른 나라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이자 필수 구성 요소의 하나이며, 궁극적으로는 정책 중심의 토론과 공명선거를 통하여 「공직선거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한편으로는 유권자와 국민, 다른 한편으로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무엇보다 아래와 같은 기능적 의의를 갖는다.

18) 위르겐 하버마스, 《공론장의 구조변동》, 한승완 역, 나남, 1990.

19) 니콜라스 루만, 《대중매체의 현실》, 김성재 옮김, 커뮤니케이션 북스, 2006.

20) 한국갤럽이 2017년 5월 10~11일 전국 투표자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휴대전화 RDD 조사 “제19대 대통령 선거 사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TV토론을 투표할 후보를 결정하는 데 가장 많이 참고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신문/방송보도’(23%), ‘인터넷 뉴스’(17%) 등으로 나타났다.

■ 유권자에게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및 자질·비전 등을 한자리에서 비교 판단하여 국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원이다. 이 관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고취·강화할 수 있다. 또한, 선거방송토론의 유용성은 선거결과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유일한 잣대로 평가될 수 없으며, 정치와 선거에 대한 사회적 평균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기능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자아내며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능을 충족시키는데, 그것은 정당·후보자의 정강·정책 등에 대한 지식이 유권자의 숙고적 판단과 선택을 위한 근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 정당·후보자의 관점에서 선거방송토론은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그 어느 유세현장에서보다 광범위한 유권자들에게 정강·정책 등을 명확하고 신뢰감 있게 주장하여 다른 정당·후보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기존 지지층의 표심을 강화하며 잠재적 득표 대상인 부동층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이다.

위에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듯이 선거방송토론은 관점에 따라 유권자의 투표결정을 위한 후보자 비교 판단의 수단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의 한 유형으로서 선거방송토론의 근본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02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제1절 토론회 관리체제 정비
제2절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제3절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제1절

토론회 관리체제 정비

1.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방송토론팀·토론기획팀의 기존 2팀 체제에 대외협력팀을 추가하여 3팀 체제로 개편하고 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을 2025년 4월 8일(화)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인 6월 3일(화)까지 운영하였다.

지난 2004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상설화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²¹⁾은 제17(2007)·제18대(2012) 대통령선거의 공직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를 2팀 체제로 관리하면서 어려움을 겪은 이래 제19대(2017) 대통령선거 시 대외협력TF팀을 추가 편성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토론팀이 토론회 개최 관련 업무, 토론기획팀이 위원회의 운영 등 기획 및 지원업무, 추가 설치한 대외협력팀이 토론회 공보·홍보업무와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업무를 전담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 사유 확정 당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 현원은 10명으로서 선거관리인력 5급 직원 1명을 파견받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존 장기사무보조 1명에 추가로 단기사무보조 1명을 채용함으로써 제19대 대통령선거 시

2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등 법정 토론회의 개최 및 진행과 관련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사무국은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검토될 각종 자료와 전체위원회의에 상정될 의안을 준비하며,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15명, 제20대 대통령선거 시 16명이었던 관리단보다 축소된 총 13명이 이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관리와 실무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²²⁾

대통령선거의 실시 시기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토론회 관련 사무를 공정하고 차질 없이 관리하기 위하여 중계주관방송사 및 유관기관들과 지속적으로 업무연락 및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토론회에 관한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후보자 검증에 효과적인 토론진행방식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등 만전을 기하였다. 특히 이번 대선은 지지자 등이 극렬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기에 후보자 신변보호와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대외협력팀이 보강된 사무국 조직은 매우 효율적이었다.

〈그림 2-1〉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 현황



22) 2025년 1월 현재, 사무국의 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일반직·전문임기제 공무원 10명이며 조기 대선을 대비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일반직공무원 1명과 추가로 채용된 계약직 사무보조 2명이 증원되어 총 13명이 이번 대선에서 공식선거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관리의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 밖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 명시되어 있다.

2. 자문 및 의사결정기구 정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법정 방송토론회의 개최와 관련된 모든 주요 사안은 「규칙」에 따라 전문위원²³⁾회의의 자문, 이를 토대로 하는 준비소위원회²⁴⁾의 심층적 검토 이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²⁵⁾” 전체위원회에서 의결된다.

〈표 2-1〉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문 및 의사결정 구조

구 분	구성 요건 / 법적 근거	분 야
전체위원회의	토론회 관리일정에 따라 법정의결사항 또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최(「규칙」 제13조)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 사무국: 의안 상정안 등 작성 및 준비		
준비소위원회의	전체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검토·심의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구성(「규칙」 제17조)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사회자 등 사전 검토
↑ 사무국: 회의자료 작성 및 준비		
전문위원회의	토론회 진행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받기 위해 필요에 따라 구성(「규칙」 제18조)	주제 및 질문사항, 진행방식 등 자문
↑ 사무국: 회의자료 작성 및 준비		
사 무 국	「규칙」 제19조	법정 토론회 관련 실무

23) 제18조(자문위원 등)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4) 제17조(소위원회) ① 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이하 생략)

25)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위원 관리 및 위원회의 운영

1) 위원 관리

「공직선거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 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방송통신심의위원회²⁶⁾·학계·법조계·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 11명 이내로 구성된다.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되기 전에 일부 위원이 임기만료되고 사직원 제출이 있었던 바, 추천 기관에 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정비를 완료하였다. 대통령선거일 기준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기준일: 2025. 6. 3., 표기순서: 위촉일자 순)

구 분	성명	경력	추천기관
위원장	조용구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신광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시민단체
	오정환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힘
	김철우	KBS 시사제작국장	공영방송사(KBS)
	박경미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계
	최장호	법률사무소 자유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여홍규	MBC 아침뉴스센터 국장	공영방송사(MBC)
	송요훈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조정	SBS 논설위원실장	한국민영방송협회
	신경철	법률사무소 로앤퍼스트 대표변호사	법조계

2) 위원회의 운영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초청 후보자, 사회자, 주제 및

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2025. 10. 1 시행)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로 명칭 변경

진행방식, 질문사항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규칙」 제16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준비과정에서 총 6회의 위원회의를 개최하였고, 처리안건 등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2-3〉 위원회의 개최 현황

회의차수	일시	처리안건 등	
		구 분	내 용
제2차	2025. 4. 10.(목) 09:30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위원장 호선 •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제3차	2025. 4. 23.(수) 09:40	의결사항	•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 후보자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제4차	2025. 4. 30.(수) 09:40	의결사항	•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제5차	2025. 5. 9.(금) 09:30	의결사항	•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제6차	2025. 5. 12.(월) 09:40	보고사항	• 주요업무추진상황
		의결사항	•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등 선정 •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추가 결정
제7차	2025. 5. 16.(금) 09:30	의결사항	•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나. 전문위원회 및 준비소위원회 운영

1) 전문위원회의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제18조(자문위원 등)에 따라 전문위원을 두고,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전문위원은 토론회 준비 및 진행,

평가 등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방송전문가,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등 관련 분야의 교수 등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선거일 기준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구성 현황

(기준일: 2025. 6. 3.)

성명	경력
이 영 배	전 JTBC 보도제작국 부국장
정 철 진	경제평론가
장 혜 영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이 인 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
이 지 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
한 성 일	성균관대 학부대학 교수
박 영 득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 성 민	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
강 연 곤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 민 홍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위원회회의는 아래와 같이 총 2회 개최하였다.

〈표 2-5〉 전문위원회회의 개최 현황

회의차수	개최일시	회의내용
제1차	2025. 4. 21.(월)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토론회 토론주제·진행방식 검토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제2차	2025. 5. 7.(수) 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검토

2) 준비소위원회의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제17조(소위원회)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지명으로 상임위원, 학계, 방송사 추천 위원 5명으로 구성하였고,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사회자 등 토론회 진행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다. 대통령선거일 기준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준비소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2-6〉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구성위원	직무
신광호(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김철우(KBS 시사제작국장)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여홍규(전 MBC 저널리즘 책임실 국장) 조정(SBS 논설위원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주제 검토 • 진행방식 검토 • 사회자 검토 • 질문사항 검토 • 그 밖에 토론 진행 관련 사항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와 후보자토론회 준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준비과정에서 2025년 4월 10일(목)에 구성한 준비소위원회를 후보자토론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였다. 준비소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고, 이 중 질문사항을 검토하는 회의 시에는 사회자도 참석하였다.

〈표 2-7〉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회의차수	개최일시	회의내용
제1차	2025. 4. 22.(화)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주제, 진행방식, 사회자 검토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제2차	2025. 4. 29.(화)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등 검토 • 후보자토론회 여론조사 설문문항 검토
제3차	2025. 5. 8.(목)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 차수별 토론주제 등 검토
제4차	2025. 5. 15.(목)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등 검토

제2절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제2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1.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도 선거방송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방송관계자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토론회 개최 홍보 및 제작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제1차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이후에는 제2차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개최를 위한 추진일정을 공유하고 진행방식 관련 개선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1차 회의에서는 탄핵심판이 기각되는 경우와 인용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각각 실시하게 되는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개최안을 방송3사(KBS, MBC, SBS)에 안내하고 협의를 진행하였다. 개최장소는 2022년 양대선거 실시 당시 방송3사가 합의한 대로 순차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표 2-8〉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개최 현황

구분	제1차	제2차
개최일시	2025. 3. 5.(수) 10:00	2025. 4. 18.(금) 10:00
개최장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KBS, MBC, SBS 선거방송토론 관계자 4명 • 사무국: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토론기획팀장, 담당 주무관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KBS, MBC, SBS 선거방송토론 관계자 4명 • 사무국: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대외협력팀장, 담당 주무관 2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일반사항 안내 • 중계방송 시간에 관한 협의 • 중계방송 확대(타방송사, 유튜브) 등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토론회 수중계 관련 사항 • 초청 대상 후보자 선정 결과 안내 • 사회자 선정 관련 후보군 안내 • 토론회장 설비 관련 요청 • 화면 구성 및 자막 관련 협의 • 기타 토론회 진행 관련 협의

〈표 2-9〉 정책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결정 순서

구 분	제20대 대선	제8회 지선	제22대 국선	제21대 대선	제9회 지선
1차	KBS	MBC	SBS	KBS	MBC
2차	MBC	SBS	KBS	MBC	SBS
3차	SBS	KBS	MBC	SBS	KBS

〈표 2-10〉 후보자토론회 중계주관방송사 결정 순서

구 분	제20대 대선	제21대 대선	제22대 대선	제23대 대선
초청1차·초청외	MBC	SBS	KBS	MBC
2차	SBS	KBS	MBC	SBS
3차	KBS	MBC	SBS	KBS

제2차 회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실시 일자가 확정된 이후에 개최하여 선거사무일정에 따라 토론회 중계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작 방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제1차 회의에 참석하였던 방송3사의 중계방송 및 제작 담당자가 참석하여 스튜디오 설비 등 준비부터 토론회 진행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으며, 후보자토론회 방송 제작 실무회의의 일정을 확정하고 유관기관 안전관리 대책회의의 일정을 조율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이 결정된 이후에 중계주관방송사 관계자와 방송제작 실무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여 토론회장 세트설비, 대기실 등 부대시설 사용 협의, 토론회 개최 당일 시간계획, 출입자 등 안전관리 협의 등 토론 진행에 관한 사항들에 대하여 재차 협의하였다.

〈표 2-11〉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 현황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자
정책토론회		2025. 4. 24.(목) 10:00	KBS 선거방송기획단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 기자, 세트감독 등 • 사무국: 방송토론팀장, 주무관 3명
후보자 토론회	1차· 초청외	2025. 5. 12.(월) 14:00	SBS 상암 프리즘타워 시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SBS 선거방송토론 담당 국장, 부장, PD, 세트감독 등 • 사무국: 방송토론팀장, 주무관 4명
	2차	2025. 5. 12.(월) 16:00	MBC 경영센터 보도제작팀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MBC 선거방송토론 담당 부장, 차장, PD, 세트감독 등 • 사무국: 방송토론팀장, 주무관 4명
	3차	2025. 5. 13.(화) 10:30	KBS 선거방송기획단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국: 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 기자, 세트감독 등 • 사무국: 방송토론팀장, 주무관 2명

2.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관계기관 대책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이어 대통령 탄핵의 결과로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양상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 대한 완벽한 경호 등 안전관리 및 각종 사고 예방과 후보자토론회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2025년 4월 29일(화) 오전부터 오후까지 중계주관방송사인 방송3사에서 안전관리 관계기관들과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답사를 하는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다.

〈표 2-12〉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대상
2025. 4. 29.(화) 10:30	KBS(여의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KBS,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영등포경찰서, 영등포소방서
2025. 4. 29.(화) 14:00	SBS(상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SBS,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2025. 4. 29.(화) 16:00	MBC(상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MBC,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마포경찰서, 마포소방서

〈그림 2-2〉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현황



KBS(여의도)



SBS(상암)



MBC(상암)

제3절

유권자와 함께하는 토론회 환경 조성

제2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준비

1. 후보자토론회 기획방송 제작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위해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 머그’와 협업하여 기획방송을 제작하였다. 2025년 4월 28일(월)에 토론회 준비과정 등 후보자토론회와 관련된 대외협력팀장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4월 29일(화)에 SBS에서 개최한 안전관리 대책회의를 스케치하여 제작한 기획영상을 5월 16일(금)부터 온라인에 게시하였다.

〈표 2-13〉 후보자토론회 홍보 기획방송 유튜브 채널 조회수 현황

(기준일: 2025. 6. 4., 단위: 회)

구분	업로드 일시	조회수
중앙토론회, 중앙선관위 유튜브	2025. 5. 17.(토) 09:00	4,293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2025. 5. 16.(금) 18:00	39,039

〈그림 2-3〉 후보자토론회 홍보 기획방송 유튜브 채널 구성 현황(썸네일)



중앙토론회, 중앙선관위



SBS '비디오머그'

2. 의제선정 여론조사 실시

유권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중적 관심도가 높은 주제 및 질문사항을 수집하고 토론주제 검토·선정 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결과 분석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제선정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²⁷⁾

〈표 2-14〉 의제선정 국민여론조사 실시 현황

구분	조사기간	조사기관	방법	응답률
정책토론회	2025. 4. 11.(금) ~ 4. 15.(화)	(주)한국리서치	웹조사	19.0% ²⁸⁾
후보자토론회	2025. 5. 1.(목) ~ 5. 2.(금)	엠브레인퍼블릭	전화면접	16.8% ²⁹⁾

3. 일대일 수어통역(복지TV) 확대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2022년부터 복지TV를 통해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에만 실시하던 후보자(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을 초청외 후보자토론회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청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복지TV의 생중계가 끝난 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4. 포털사이트 등 생중계 확대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는 법정 중계의무 방송사(KBS·MBC·SBS) 외에도 국회방송과 KTV, 복지TV가 토론회 중계방송에 참여하였고, 홈페이지 및 유튜브(중앙토론회·중앙선관위)와 네이버TV(중앙토론회), 카카오TV(KBS뉴스) 등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 후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후보자토론회는

27) '제3장 제1절 6. 토론주제 결정 및 제2절 6. 토론주제 결정'의 여론조사 결과 참고

28) 총 9,155명에게 설문 발송, 7,865명 접속하여 그 중 1,222명 응답 완료

29) 총 5,99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6명 응답 완료

중계의무 방송사를 비롯하여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과 보도전문편성채널(YTN, 연합뉴스TV)등 14개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되었고, 홈페이지 및 유튜브(중앙토론위·중앙선관위)와 네이버TV(중앙토론위)에서 생중계 후 다시보기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5. 다시보기 서비스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시보기 서비스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였고 현재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의 시청 편의를 위해 수어통역을 실시하였으며, 다시보기 서비스 전체 하단에 사회자 및 후보자 성명(정당명) 속기록을 게시하고 모바일 시청자들을 위해 폰트를 조정하여 가독성을 높이는 한편 토론회 전문을 자막 형태로 노출하여 누구든지 토론회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4〉 다시보기 서비스 페이지 구성 현황



메인페이지

상세페이지①

상세페이지②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03장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제1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제2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제1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해에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선거일전 90일부터,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의 경우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월 1회 이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6월 3일(화)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2025년 5월 2일(금)에 1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같은 법 제1항에 따라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³⁰⁾ 또는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초청되었다.

2. 개최현황

2025년 4월 4일(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궐위 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5년 4월 10일(목) 개최한 제2차 위원회의에서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를 2025년 5월 2일(금)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21대

3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준비 기간, 정당의 당내경선 일정, 유권자의 5월 연휴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법정 중계업무 방송사인 방송 3사(KBS, MBC, SBS, 이하 동일)와의 토론회 개최일시 등에 대한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2022년 양대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방송 3사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이번 정책토론회는 KBS가 중계주관하였으며, 여의도에 소재한 KBS 본관 TS-4 스튜디오에서 KBS 김용준 기자의 사회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전국에 생방송으로 중계방송되었다.

〈표 3-1〉 정책토론회 개최 현황

구분	내용
개최일시	2025. 5. 2.(금) 10:00~12:00
개최장소	KBS 본관(여의도) TS-4 스튜디오
토론분야	국정현안
토론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박수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승호 (개혁신당 대변인) 권영국 (정의당 대표)
사회자	김용준(KBS 기자)
중계방송	(생중계) KBS1, MBC, SBS, 국회방송, KTV, 복지TV (온라인) 유튜브(중앙토론회, 중앙선관위), 네이버TV(중앙토론회), 카카오투(KBS뉴스)

토론회에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1항의 초청기준에 따라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정의당³¹⁾)이 초청대상이었으나, 조국혁신당이 ‘대통령선거 후보 미선출’을 공표함에 따라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참석하였다. 각 정당의 토론자로는 해당 토론주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거나 정당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현역 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31) 2025. 5. 7. 민주노동당으로 명칭 변경

법정 중계의무 방송사인 KBS·MBC·SBS 외에도 국회방송과 KTV, 복지TV가 토론회 중계방송에 참여하였고, 유튜브(중앙토론위·중앙선관위)와 네이버TV(중앙토론위), 카카오TV(KBS뉴스)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최 이후에도 언제든지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위원회의 등 운영

토론회의 개최일시·장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등 토론회 개최에 관한 주요 사항은 「공직선거법」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위원들이 모여 전체위원회의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또한 준비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위원회의의 의결 과정에 필요한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종합관리계획을 토대로 전체위원회의의 3회, 준비소위원회의의 2회, 전문위원회의의 1회를 개최하여 토론회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결정하였다.

〈그림 3-1〉 정책토론회 관련 회의 개최 현황



전문위원회의(4. 21.)



준비소위원회의(4. 22.)



제4차 위원회의(4. 30.)

가. 전문위원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제18조(자문위원등)의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를 개최하였다. 각 전문위원은 정책토론회의 토론의제 추천 및 진행방식 운영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특히, 짧은 선거 준비 기간에 맞춰 후보자토론회의 참석 후보자 수별 진행방식을 사전 검토하는 등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 초안을 마련하였다.

〈표 3-2〉 정책토론회 관련 전문위원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참석전문위원	회의내용
2025. 4. 21.(월) 10:00	이영배(방송인) 정철진(경제평론가) 장혜영(교수) 이인원(교수) 한성일(교수) 최성민(방송인) 강연곤(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검토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나. 준비소위원회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제17조(소위원회)³²⁾의 규정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됨에 따라 4월 10일(목) 제2차 위원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의 주제·진행방식, 사회자 등의 검토를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학계 및 방송사 추천 위원 5명으로 준비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준비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3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7조(소위원회)는 각급토론위원회가 토론회 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며 소위원회는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표 3-3〉 정책토론회 관련 준비소위원회 구성·운영 현황

명칭	구성위원	운영기간	직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및 후보자토론회 준비소위원회	신광호 상임위원 김철우 위원 박경미 위원 여홍규 위원 조 정 위원	후보자토론회 종료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주제 검토 • 진행방식 검토 • 사회자 검토 • 질문사항 검토 • 그 밖에 토론 진행 관련 사항

준비소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종료 시까지 토론회의 주제, 진행방식, 사회자, 질문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정책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이후 질문사항을 검토하는 준비소위원회의에는 선정된 사회자가 참석하여 실제 본인이 낭독할 질문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육성으로 시연을 해보기도 하였다. 준비소위원회는 특히 전체적인 토론의 흐름과 중립성, 명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심층적인 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전체위원회의에 상정할 준비소위원회의안을 마련하였다.

〈표 3-4〉 정책토론회 관련 준비소위원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회의내용
2025. 4. 22.(화)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검토 • 정책토론회 사회자 검토
2025. 4. 29.(화)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다. 전체위원회의

토론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초청대상 정당,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사회자 등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체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개최 준비과정에서 위원회의는 모두 3차례 개최되었으며 정책토론회와 관련된 안건들을 처리하였다.

〈표 3-5〉 정책토론회 관련 위원회의 개최 현황

구분	개최일시	회의내용
제2차 위원회의	2025. 4. 10.(목) 0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호선 •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제3차 위원회의	2025. 4. 23.(수) 0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결정 •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제4차 위원회의	2025. 4. 30.(수) 09: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그림 3-2〉 정책토론회 관련 위원회의 개최 현황



제2차 위원회의(4. 10.)



제3차 위원회의(4. 23.)



제4차 위원회의(4. 30.)

4.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는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4. 4.)의 다음 달(5. 1.)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5. 9.)까지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9일의 기간 중 법정공휴일 등 휴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개최할 수 있는 기간이 나흘뿐이었고, 정당의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도 한창인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10일(목) 개최한 제2차 위원회의에서 상기한 상황을 고려하고 연이어 후보자토론회를 약 보름 동안 최소 4회 개최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토론회 개최 횟수를 1회로 결정하였다. 중계주관은 2022년 방송 3사가 합의한 순서에 따라 KBS가 담당하였으며, KBS 본관(여의도 소재) TS-4 스튜디오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KBS, MBC, SBS가 생방송으로 중계방송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선거의 정책토론회 역시 주요 시청 시간대인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이에 중계방송하도록 규정³³⁾하고 있어, 4월 4일(금)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에 즉시 방송사에 이를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에 협조해 줄 것을 공문 등을 통해 요청하였다. 그러나 방송사 측에서 기편성된 프로그램과 그에 따른 계약 관계 등의 사유를 통보하면서 최종적으로는 오전 10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KBS, MBC, SBS 외에도 국회방송과 KTV, 복지TV가 중계방송에 참여하였고, 유튜브(중앙토론위·중앙선관위)와 네이버TV(중앙토론위), 카카오TV(KBS뉴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되었다. 또한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제고를 위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는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방송 종료 이후에도 언제든지 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 및 보도전문편성채널(YTN·연합뉴스TV)에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참여를 요청하며 관련 규정 등을 안내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실제 중계방송이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5. 초청대상 정당 선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 따른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초청 요건은 아래와 같다.

33)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10항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2항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표 3-6〉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기준일: 2025. 4. 8., 단위: 석)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
의석수	170	108	12	3	3	1	1	2

※ 자료: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통지」(국회사무처 의사과-927, 2025. 4. 8.)

〈표 3-7〉 정당별 직전선거 득표율 현황(100분의 3 이상인 정당)

(단위: %)

선거별 정당명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3. 9.)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2022. 6. 1.)	제22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2024. 4. 10.)
더불어민주당	47.8	41.9	26.7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48.6	52.4	36.7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	-	24.3
개혁신당	-	-	3.6
정의당 ³⁴⁾	2.4	4.1	2.1 [녹색정의당]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안은 비례위성정당³⁵⁾명

위의 기준에 따라 초청 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의 5개 정당으로 4월 10일(목) 제2차 위원회의에서 정책토론회의 초청정당을 선정하였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조국혁신당이 보도자료(4. 17.)를 통해 ‘대통령선거 독자 후보 미선출’을

34) 2025. 5. 7. 민주노동당으로 명칭 변경

35)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시행되면서 주요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의석확보를 위해 창당한 위성 정당

공표함에 따라 기존 정책토론회 초청 대상에서 조국혁신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을 최종 선정하였다(4. 21.). 관련 법규와 제외된 결과 등은 해당 정당에 별도로 안내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전화, 문자, 이메일을 비롯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당과 수시로 소통하여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당내 책임 있는 인사가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당의 정책과 입장 등을 소상히 밝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각 정당은 토론주제에 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는 현역 의원, 전문가 등을 토론자로 추천하였는데 일부 정당은 이번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를 토론자로 추천³⁶⁾하여 정책토론회에서는 선거운동성 발언이 금지됨을 사전에 안내하기도 하였다.

〈표 3-8〉 정책토론회 참석 토론자 현황

소속정당	성명	직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정의당	권영국	당대표

6. 토론주제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토론분야를 ‘국정현안’으로 하여 세부적인 토론주제 결정을 위한 토론회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하였다. 일반 국민의 관심 사안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제선정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당 및 기관·단체, 각종 학회와 전문위원 등에 토론회제 추천을 의뢰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준비소위원회에서 토론주제 결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고 전체위원회의에서 정책토론회의 토론주제를 최종 결정하였다.

36) 2025. 4. 24. 정의당에서 정책토론회 참석 승낙서 제출 당시 당대표였던 권영국 후보자는 정책토론회 개최 전일인 5. 1.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함.

가. 토론의제 수집

정책토론회의 토론분야가 ‘국정현안’으로 결정됨에 따라 초청정당 및 기관·단체, 각종 학회, 전문위원 등으로부터 총 122건의 토론의제를 추천받아 수집하였다. 또한 국민적 관심 사안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222명을 대상으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론조사는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통한 웹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지역·성·연령별 할당 추출을 통해 특정 계층의 응답이 누락되거나 과하게 수집되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하기를 원하는 토론주제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사항을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표 3-9〉 정책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5. 4. 11.~4. 15.(5일간)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표본크기	1,22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8%p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통해 URL 발송)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 추출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선택한 것은 경제(40.1%) 분야로 약 절반에 가까운 수치로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정치(18.6%), 복지/인구/보건의료(10.7%), 외교/안보/통일(8.7%), 사회/문화/교육/과학(7.9%)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의제선정 여론조사 주요 결과①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단위: %)

사례수 (명)	경제	정치	복지/인구/ 보건의료	외교/안보/ 통일	사회/문화/ 교육/과학	노동/환경	모름/무응답	계
(1,222)	40.1	18.6	10.7	8.7	7.9	7.0	6.9	100.0

여론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분야별 주제를 살펴보면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 191건, ‘물가 및 민생 안정 방안’ 111건, ‘경제 위기 극복 방안’ 72건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갈등 해소 및 통합 방안’ 56건, ‘비상계엄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등’이 4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복지/인구/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이 68건으로 나타났고, ‘외교/안보/통일 분야’에는 ‘국제 외교 전략’ 26건, ‘한미 동맹 및 외교 전략’ 24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외에도 ‘세대,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 15건, ‘젠더 갈등 및 성평등 문제’ 15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 30건 등으로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들이 집계되었다.

〈표 3-11〉 의제선정 여론조사 주요결과② ‘분야별 주제’

분야	추천의제	사례수(명)	비율(%)
경제	미국 관세 정책 대응 방안	191	39.0
	물가 및 민생 안정 방안	111	22.9
	경제 위기 극복 방안	72	14.7
	국민연금 개혁 및 조세·재정 정책 개선	53	10.8
	경제 발전 및 산업 경쟁력 강화	29	5.9
	부동산 정책	28	5.7
	기타	5	1.0
정치	정치 갈등 해소 및 통합 방안	56	24.2
	비상계엄 관련 인사 수사·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	43	19.2
	정당 및 국회 개혁	31	13.5
	대통령제 개편과 개헌	20	8.7
	후보자 개인 이슈 및 자질	19	8.3
	선거제도 개선	17	7.7
	검찰 및 사법부 개혁	15	6.7
	탄핵 정국 안정화 방안	13	5.6
	기타	14	6.1
복지/인구/ 보건의료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	68	51.9
	취약 계층(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복지 지원 확대	20	15.5
	지방 소멸 대응 및 수도권 과밀 해소 방안	12	9.4
	외국인 복지 지원 축소	11	8.4
	병·의원 규제,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개혁	8	6.2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	5	3.8
	기타	6	4.9

분야	추천의제	사례수(명)	비율(%)
외교/안보/통일	국제 외교 전략	26	24.4
	한미 동맹 및 외교 전략	24	22.3
	북핵 문제 대응 등 대북 안보	22	20.3
	한중일 외교 전략 및 과거사 관련	14	13.1
	군사 안보력 강화 방안	10	9.4
	통일 관련 방향성 및 구체적 정책 계획	9	8.6
	기타	2	1.9
사회/문화/ 교육/과학	세대, 지역 간 갈등 해소 방안	15	16.1
	젠더 갈등 및 성평등 문제	15	15.8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치안 유지	13	13.3
	R&D 지원 및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12	12.4
	국내 AI 산업 발전 계획	6	6.3
	사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강화	6	6.1
	역사 교육 관련	4	3.9
	교육 재정 및 예산 집행 관련	2	2.0
	기타	23	24.0
노동/환경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활성화	30	34.3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대응	15	17.3
	노동자 근로 환경 및 처우 개선	15	16.9
	고령자 및 중장년 퇴직 및 고용 정책	10	11.8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	4	5.0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 방안	4	4.6
	생활쓰레기, 싱크홀 등 도시 환경 및 안전 정비	3	3.3
	기타	6	6.8
모름/무응답	-	85	
합계		1,222	100.0%

나. 토론주제 결정

전문위원회의에서는 결위로 인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라 정책토론회가 1회만 개최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집된 토론의제 자료를 토대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각 1개씩 총 3개 주제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준비소위원회의에서는

국민여론조사 결과 경제 분야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도가 타 분야의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경제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임을 감안하여 경제 분야 주제 2개와 분열된 사회 분위기 속 사회통합 방안 주제 1개로 의견을 모았다. 전체 위원회의에서 두 번의 사전 검토 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내부 논의를 거쳐 다음 표와 같이 최종 주제를 결정하였다.

〈표 3-12〉 정책토론회 토론주제 현황

분야	토론주제
국정 현안	[주제 1]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주제 2]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주제 3]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7.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진행방식은 토론주제와 토론자의 수, 공정성 및 효율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전문위원회와 준비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하였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인 만큼 주요 정당의 토론자들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 준비 중인 정책 등을 알릴 수 있도록 ‘시작발언’ → ‘(주제1, 2)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제3)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의 순으로 진행방식을 구성하였다.

또한 진행방식에 대한 세부 운영 방법을 검토하여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처럼 발언시간 양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운영하였다. ‘주도권토론’에서 ‘2명 이상과 토론하고, 상대 토론자의 답변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한다는 내용은 필수규칙으로 남겨두고,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1회 발언은 연설식 진행을 방지하기 위해 1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기로 운영 방법을 조정하였다. 토론자당 발언시간은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 시간을 포함하여 총 26분씩 동일하게 주어졌다.

〈표 3-13〉 정책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토론자(각 1분)	4분
	주제1: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34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시간총량제토론	• B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7분 총량)	28분
	주제2: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34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D/A/B 토론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시간총량제토론	• C 토론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7분 총량)	28분
	주제3: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주도권토론	• D/A/B/C 토론자 주도권토론(각 7분)	28분
마무리발언	• A/B/C/D 토론자(각 1분)	4분
계		105분

※ 참석 토론자 수에 따른 발언시간(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 5명(각 5분30초), 4명(각 7분), 3명(각 10분)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토론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 없이 각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토론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토론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토론자의 잔여 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함.
-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토론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토론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토론자 외 다른 토론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토론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토론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토론자(A)가 다른 토론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토론자(B)의 잔여 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토론자(A)는 토론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토론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토론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 없이 각 토론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토론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 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토론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토론자의 잔여 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토론자를 지명함.
-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토론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토론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토론자 외 다른 토론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토론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토론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토론자(A)가 다른 토론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토론자(B)의 잔여 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토론자(A)는 토론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주도권토론

-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토론자에게 질문”하여야 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시간 운용
-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함.
- 상대 토론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상대 토론자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
- 진행 중 사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은 멈추지 않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 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토론자의 잔여 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8. 사회자 선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규칙」제23조(대담·토론회) 제3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토론회의 사회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에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사회자 선정은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법정토론회 및 방송사 자체 토론 프로그램 등 방송 진행 경험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위원이 사회자 후보를 추천하였다. 이어 준비소위원회의에서 사회자 후보군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의에서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소속의 김용준 기자를 사회자로 선정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은 선정된 사회자와 사전 면담 등을 통해 토론회의 주제·진행방식을 상세히 안내하였고, 사회자의 역할 및 돌발상황 대처, 당일 현장에서의 안내 사항 등을 포함한 ‘사회자 진행매뉴얼’을 사전에 준비·제공하여 숙지하도록 하였다. 사회자는 사무국의 안내에 따라 토론회의 주제별 공통질문 문안을 작성·제출하였고 준비소위원회의(4. 29.)에 참석해 해당 문안을 소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검토하였다. 또한 사전에 토론진행표(Cue Sheet)와 대본의 문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토론회 준비에 임하였다.

특히,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토론자들이 정책토론회 중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회자가 현장에서 토론자들에게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게 하고 선거운동성 발언을 자제할 것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여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림 3-3〉 정책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사회자 김용준(KBS 기자)

9. 질문사항 선정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은 주제별로 각각 사회자안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안을 작성하여 준비소위원회의에서 교차 검토한 후

전체위원회의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질문사항 문안은 토론자들의 내실 있는 토론회 준비를 위해 전체 내용을 각 정당에 통지하였다.

〈표 3-14〉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주제1〉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미국발 관세정책이 우리의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전망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가운데, 글로벌 통상 위기가 확대되면서 제조업 심리가 더 위축됐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과 2+2 협상을 시작했고,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들의 협상 결과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 충격에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 보겠습니다.

〈주제2〉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고물가에 고금리, 고환율에 내수 부진까지 겹치면서 민생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가 52개 줄어들었습니다. 브랜드 수 자체가 감소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처음입니다. 신용불량 사업자가 지난해에 비해 30% 가까이 증가했고, 카드사의 연체율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시장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에 시달리며 폐업도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각 당의 민생경제 회복방안은 무엇인지 들어 보겠습니다.

〈주제3〉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사회자 공통질문 없음.³⁷⁾

10. 설명회 개최 및 토론회 개최 홍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4월 23일(수) 제3차 위원회의를 통해 정책토론회의 주제 및 진행방식과 사회자 선정 등을 완료하고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개최를 공표하였다. 정책토론회의 전반적인 안내를 위해 이를 뒤인 4월 25일(금) 오전 9시 30분,

37) 주제3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의 경우 사회자 공통질문 없이 토론자들의 주도권토론이 진행되는 바, 일부 위원들의 사회자 도입 문안(리드 멘트)에 따라 토론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사무국에서 작성한 대본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문구를 검토하기도 하였다. 다만, 사무국 초안에서 해당 문안은 주제를 언급하며 개괄적인 표현으로만 구성하여 다른 주제로 벗어날 여지가 없었으므로 별다른 수정 의견 없이 사무국의 원안 그대로 활용하는 것에 모든 위원들이 동의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초청 대상인 4개 정당 중 3개 정당 토론자의 대리인 각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정책토론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토론회장과 부대시설의 설비 전반, 토론주제·진행방식,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의 운용, 생방송 토론에 따른 유의사항 등을 안내한 후 토론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천하는 일정으로 진행하였다. 해당 토론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들이 국회 다수 의석순에 따라 먼저 추천 순위를 추천하고, 추천 순위에 따라 다시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를 추천하였다.

추천 후에는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토론자가 숙지할 내용 등을 안내하고 모든 내용이 토론자에게 충분히 전달되도록 설명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당내 사정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정당은 방송토론팀장이 토론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등을 대리추천하였으며, 별도로 안내자료를 송부하고 유선 등으로 추가 안내하여 관련 준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였다.

〈표 3-15〉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결과

개최일시	개최장소	소속정당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 결과	비고
2025. 4. 25.(금) 09:30	중앙토론위 위원회의실	더불어민주당	B	
		국민의힘	A	
		개혁신당	C	* 대리인 불참, 사무국 대리추천
		정의당	D	

〈그림 3-4〉 정책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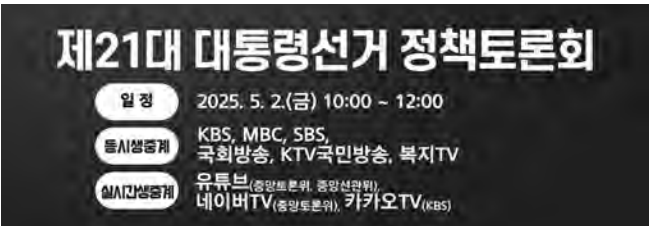
토론회 관련 안내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개최 홍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와 협조하여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www.debates.go.kr)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 홈페이지에 토론회 개최 안내 팝업 및 배너를 게시하였다. 또한 유튜브 채널(중앙토론위),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에도 관련 배너를 게시하였으며 토론회 초청정당 및 유관 단체·학회 등에도 배너를 송부하여 홍보를 요청하였다. 이외에도 중계방송사에 토론회 개최 안내 및 홍보를 위한 중계방송 자막 표출안과 흘림자막 문안 등을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하였고, 총 17회의 정책토론회 관련 기사가 언론 보도되었다.

〈그림 3-5〉 정책토론회 개최 홍보 배너



11.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개최에 앞서 토론회장 설비 및 토론회 진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방송사 실무진과 협의·조정하기 위해 방송제작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표 3-16〉 정책토론회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 현황

개최일시	개최장소	참석대상	주요 협의내용
2025. 4. 24.(목) 10:00	KBS 선거방송기획 단 회의실	중앙토론위 사무국, KBS 선거방송기획단 관계자 및 세트 감독 등	① 토론회 준비 및 진행 관련 ② 부대시설 설비 협의 및 출입자 관리 등 안전관리 ③ 수중계·실시간 중계 협의, 개최 홍보, 자료 협조 등

실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토론회 세트 시안을 확정하였고 방송장비 등의 활용 계획, 토론시간관리시스템의 운영, 필요 물품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리허설 시에 중점적으로 확인할 부분과 토론자의 판넬 활용에 대한 협의, 전체적인 화면 구성 방법, 수어통역사의 교체 시점 등을 조율하고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다. 설명회 개최 전 이 회의에서 토론자의 이동 동선과 대기실, 방송국 출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등을 모두 협의를 통해 결정하였으며 이외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과 중계주관방송사(KBS)가 수시로 유선 협의 또는 필요시 별도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토론회장 세트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중계주관방송사인 KBS 스튜디오(TS-4)에 사회자와 토론자가 마주 보는 구조로 설비하였다. 정책토론회의 개최 시점이 정당의 경선 시점과 맞물려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당의 토론자가 부득이 불참할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하여 세트 구조와 좌석 배치 등의 변경이 용이하도록 요청하는 등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세트 감독과 협의를 통해 토론회장의 전반적인 색조는 무채색인 회색 계열로 장식하였으며, 토론자의 좌석 앞부분에만 각 정당의 로고와 색상 등을 부착하여 별도 자막 등의 안내가 없어도 어느 정당의 토론자인지 시청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자의 좌석과 배경 사양에 있어서는 어느 방향에서 보아도 차이가 없도록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준비하였다. 무대 중앙에는 ‘선거명(제21대 대통령선거)’, ‘토론회명(정책토론회)’, ‘주관기관명(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을 로고와 함께 부착하여 배치하였고, 천장 부분에도 원형으로 토론회명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설비하여 시청자가 TV 화면상으로 정책토론회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6〉 정책토론회 스튜디오 설비 현황



세트 전경



사회자석 전경



토론시간관리시스템

토론자별 발언시간 관리를 위한 모니터는 해당 토론자를 주로 촬영하는 세트 전면부 카메라와 동일선상에 배치하여 토론자가 발언하면서도 시간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비하고, 사회자도 전체적인 발언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테이블에 소형의 모니터(270×180×30mm)를 매립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도권토론에서 활용하는 ‘답변 30초 모니터’는 토론자가 4명인 점을 감안하여 좌·우측에 각 1대씩 설비하였다.

스튜디오 카메라는 각 토론자에게 1대씩 총 4대, 사회자용 1대, 수어통역사 전용 1대, 전체화면용 지미집(Jimmy Jib) 카메라 1대, 여분 카메라 등 총 8대 정도 활용하였다. 이외에도 조명 및 음향기기 등 토론회 중계방송에 필요한 장비에 대하여 사전 점검하여 미비된 점을 보강하였고, KBS 본관 시설의 경우 오전 방송이 다수 진행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토론자와 수행원에게는 좌석 추천순에 따라 2인 1실의 대기실을 배정하였다.

〈그림 3-7〉 정책토론회 관련 구조물 등 설비 현황



원형 구조물



천장 구조물



정책토론회 머그컵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생방송 직전 사회자가 토론자에게 토론 진행방식, 토론회 시간 운영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내하였다. 특히,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정책토론회의 토론자들이 선거운동성 발언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강조하였다.

제작진의 안내 하에 카메라 및 음향 테스트와 최종 리허설까지 마치고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사회자는 토론자의 발언시간을 공정하게 관리하면서 자연스러운 토론 흐름을 유도하는 등 토론회를 원활하게 진행하였다. 그러나 토론 주제를 벗어나 ‘탄핵’ 등 정치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져 사회자가 주제를 주지시키거나 일부 정당 토론자에게 질문이 집중되면서 발언시간이 일찍 소진되어 사회자가 발언 시간을 양도하는 등

사회자의 개입이 잦아지자 전체적인 토론회 진행시간이 지연되어 결국 마무리발언을 당초 1분에서 생방송 관계상 30초로 조정하였다. 모든 토론회 진행이 끝난 뒤에는 사회자의 클로징멘트와 자막을 활용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일정과 토론 분야 등을 안내하였다.

한편, 토론회 종료 후 마무리발언 시 한 토론자가 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자당 소속 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토론자에게 경고 조치를 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1회 발언 권고시간인 1분 30초가 경과하자 발언시간 초과로 오인한 제작진이 마이크를 음소거한 사례도 있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마이크 음소거 실수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별도 안내자료를 만들어 제작진에게 배포하는 등 향후 후보자토론회에서 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하였고, 주제 및 진행방식 운용에 있어 사회자 진행매뉴얼 내용을 보강하는 등 정책토론회에서 발생한 사례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8〉 정책토론회 진행



12.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토론회가 개최되는 스튜디오 내에 별도의 수어통역사 세트를 마련하여 수어방송 및 자막방송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총 120분간 진행되는 토론회에는 한 시간씩 교대로 모두 2명의 수어통역사가 투입되어 통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토론회 종료 후 방송사로부터 토론회

속기록 자료를 제공받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의 다시보기 서비스에 전체 토론회 전문을 자막 형태로 게시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부터 실시한 ‘일대일 수어통역 방송’의 경우 예산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처음으로 관련 제작 예산을 편성 받아 실제 사업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복지채널’인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와의 계약을 통해 제작한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을 복지TV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사후에 영상 파일을 납품받아 다시보기 서비스 등에 추가로 영상을 게시하여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청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림 3-9〉 정책토론회 수어통역 등 실시 현황



13. 시청률 현황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의 조사 결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의 시청률은 1.7%(동시간 방송3사 합계)로 나타났다.

〈표 3-17〉 정책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전국 기준				조사기관
KBS1	MBC	SBS	계(동시간중계)	
1.2	0.4	0.1	1.7	닐슨코리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텔레비전 본방송 외에도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확대를 위해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채널 및

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카카오TV(중계주관방송사 뉴스채널 온에어) 등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중계방송도 실시하였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네이버TV 채널을 통해 언제든지 해당 토론회를 다시 볼 수 있도록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표 3-18〉 정책토론회 유튜브 등 조회수 현황

(기준일: 2025. 6. 23., 단위: 회)

유튜브					네이버TV (중앙토론위)	합 계
중앙토론위	중앙선관위	KBS	MBC	1:1 수어통역		
3,073	11,529	6,417	24,225	2,048	93	47,385

※ 각 방송사 유튜브 및 네이버TV는 자체 운영, 생중계 송출

제2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선거운동기간³⁸⁾ 중 후보자를 초청하여 3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 3회와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후보자토론회 1회로 총 4차례 개최되었다.

2017년에 이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점, 비상계엄 이후 사회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점 등 후보자토론회 개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따랐으나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등 최종적으로는 사전투표일 이틀 전(5. 27.)까지 모든 토론회를 계획대로 개최하였다.

또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도 초청 대상과 동일한 조건의 중계방송을 목표로 지속적인 협의 결과, 기존(23시~)보다 1시간을 앞당겨 주요시간대인 22시 개최를 성사시켰고, 중계방송에 있어서도 방송 3사 및 후보자의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중계방송에 참여한 여러 방송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38)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5. 12.(월)부터 6. 2.(월)까지

다만, 후보자토론회 중 후보들이 정책과 공약보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뤘던 점, 일부 후보의 부적절한 표현이 방송에 여과 없이 노출되어 시청자의 불쾌감을 조성한 점 등에 대하여 향후 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숙제도 남았다.

2. 개최현황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5년 6월 3일(화)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5월 12일(월)부터 선거일 하루 전날인 6월 2일(월)까지였다.

22일간의 선거운동기간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정책·공약 및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공직선거법」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4항³⁹⁾에 따른 초청 요건을 갖춘 후보들을 대상으로 3회(이하 초청 후보자토론회), 제5항⁴⁰⁾에 따라 초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들을 대상으로 1회(이하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로 총 4회의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사전투표일 이틀 전까지 완료하였다.

〈표 3-19〉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

구 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외
개최일시	2025. 5. 18.(일) 20:00~22:00	2025. 5. 23.(금) 20:00~22:00	2025. 5. 27.(화) 20:00~22:00	2025. 5. 19.(월) 22:00~23:00
개최장소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 (상암동)	KBS TS-4 스튜디오 (여의도동)	MBC D공개홀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 공개홀 (상암동)
중계주관 방송사	SBS	KBS	MBC	SBS

39) 「공직선거법」제82조의2 제4항은 후보자토론회 초청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 ① 국회에 5석 이상 정당 추천 후보, ② 직전선거 3% 이상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③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후보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40) 위 '각주 4'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후보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외
중계방송	KBS, MBC, SBS, 국회방송,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 등 14개사			KBS, MBC, SBS, 국회방송 등 6개사
참석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4명)			황교안, 송진호 (2명)
사회자	편상욱 (SBS 기자)	이윤희 (KBS 기자)	전종환 (MBC 아나운서)	고희경 (SBS 기자)
토론분야	경제	사회	정치	국정전반

3. 위원회의 등 운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개최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회의 2회, 준비소위원회의 4회, 전체위원회의 4회 등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주요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하였다.

〈그림 3-10〉 후보자토론회 관련 회의 개최 현황



전문위원회의



준비소위원회의



위원회의

학계, 방송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의에서는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의 초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검토된 내용은 준비소위원회 회의에서 보충 및 수정 등의 재검토 단계를 거쳤다. 앞선 모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의안을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최종 의결을 통해 필요 사항을 결정하였다.

〈표 3-20〉 후보자토론회 관련 위원회의 등 개최 현황

구분	일시	대상	회의내용
전문위원회의	2025. 4. 21.(월) 10:00	전문위원	• 차수별 진행방식 검토
준비소위원회의	2025. 4. 22.(화) 09:30	소위원회	• 차수별 진행방식 검토
제3차 위원회의	2025. 4. 23.(수) 09:40	전체	• 개최일시 등 결정 • 진행방식 결정
준비소위원회의	2025. 4. 29.(화) 09:30	소위원회	• 여론조사 설문 문항 검토
전문위원회의	2025. 5. 7.(수) 10:00	전문위원	• 주제 검토
준비소위원회의	2025. 5. 8.(목) 09:30	소위원회	• 주제 검토 • 사회자 검토
제5차 위원회의	2025. 5. 9.(금) 09:30	전체	• 주제 선정 • 사회자 선정
제6차 위원회의	2025. 5. 12.(월) 09:40	전체	• 초청 후보자 선정 •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추가 결정
준비소위원회의	2025. 5. 15.(목) 09:30	소위원회	• 질문사항 검토
제7차 위원회의	2025. 5. 16.(금) 09:30	전체	• 질문사항 선정

4.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2025. 5. 12. ~ 6. 2.) 중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갈수록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최 시기를 앞당겨 사전투표일 전까지 후보자토론회를 완료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특히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와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재외선거인이 투표에 참여하기 전까지 모든 후보의 토론회를 최소 1회는 시청할 수 있도록 재외투표(2025. 5. 20. ~ 5. 25.)가 시작되기 전에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에 최소 하루 정도는 토론회에서 다뤄진 내용과 후보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사실확인(fact-checking)과 객관적인 공론화가 이뤄진 뒤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후보자토론회 일정을 사전투표(2025. 5. 29. ~ 5. 30.) 2일 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3월경부터 방송 3사와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열어두고 방송사의 편성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논의하였다. 실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2025. 4. 4.)된 뒤에는 재차 방송 3사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협의 사항을 공유하고 조기에 후보자토론회 개최 일정 조율을 마쳤다. 방송 3사는 기존 합의에 따라 초청 1차와 초청외(SBS), 초청 2차(KBS), 초청 3차(MBC)로 나누어 중계방송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10항에 따라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토론회도 초청대상 토론회와 동일하게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하나,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후보자토론회가 도입된 이래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를 오후 11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진행하던 관례를 개선하여 방송3사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편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제6차 위원회의(2025. 5. 12.)에서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발생할 수 있는 일부 후보자의 불참, 사퇴에 대비하여 참석 후보자가 2명 또는 1명인 경우의 진행방식도 추가로 결정하여 공표하였는데, 실제로 5월 18일(일)에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자유통일당)가

사퇴함에 따라 초청의 후보자토론회(2025. 5. 19.)를 양자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고 당초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으로 편성한 것을 1시간 축소해 오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생방송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유튜브를 통한 방송 시청 증가 추세를 반영하고 타 방송사에서 제기한 유튜브 중계방송 필요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 3사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 및 합의를 요청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방송사의 제반 시설 등에 따른 제약이 있었으나, 후보자토론회 역사상 처음으로 유튜브 중계방송에 대한 방송 3사의 합의를 이룰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법에 따른 중계주관방송사인 KBS와 MBC, SBS 외에도 공공방송인 국회방송과 KTV국민방송, 재외선거인을 주요 시청층으로 하는 아리랑국제방송,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과 보도전문편성채널(YTN, 연합뉴스TV) 등 다양한 채널이 중계방송에 참여하였고, 각 후보자의 소속 정당 유튜브를 비롯한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계방송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유권자의 시청 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다.

〈표 3-21〉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현황

구분	중계주관	수중계 방송사
초청 1차 (2025. 5. 18.)	SBS	KBS, M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아리랑국제방송, 복지TV 등 14개사 (정당 등 9개 유튜브 채널 중계)
초청 2차 (2025. 5. 23.)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아리랑국제방송, KFN(국방TV), 복지TV 등 14개사 (정당 등 15개 유튜브 채널 중계)
초청 3차 (2025. 5. 27.)	MBC	KBS,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국회방송, KTV, 아리랑국제방송, KFN(국방TV), 복지TV 등 14개사 (정당 등 17개 유튜브 채널 중계)
초청외 (2025. 5. 19.)	SBS	KBS, MBC, 국회방송, KTV, 아리랑국제방송, 복지TV 6개사 (중앙토론위 등 3개 유튜브 채널 중계)

5. 초청 대상 후보자 등 선정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제4항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가. 여론조사 공표결과 수집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르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시 「규칙」 제22조에 명시된 언론기관⁴¹⁾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⁴²⁾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언론기관이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입후보예정자를 포함한 모든 예비후보자의 등록 현황과 관계 법조문을 참고 하도록 사전에 공문을 통해 안내하였다. 또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위법한 여론조사로 결정하거나 고발 또는 기소하는 사례 발생 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요청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언론기관 여론조사 수집 기간 중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및 수집 대상 언론기관(방송사업자 9개사, 전국

41)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따른 대통령선거에 있어 언론기관은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사용사업자 및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42)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여론조사 수집 기간은 2025. 4. 12.(토)부터 5. 11.(월)까지였다.

보급 일반 일간신문사 153개사)의 방송·신문 보도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공표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공표된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총 144건 중 관련 법규 및 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법정 언론기관이 아닌 경우 등을 제외한 53건의 여론조사 공표자료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22〉 후보자 지지율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자료 수집 결과

(기재 순서: 기호순, 단위: %)

후보자명 (정당명)	이 재 명 (더불어민주당)	김 문 수 (국민의힘)	이 준 석 (개혁신당)	권 영 국 (민주노동당)	구 주 와 (무소속)	황 교 안 (무소속)	송 진 호 (무소속)
평균지지율	48.1	15.1	5.5	-	-	2.0	-

※ 대상 여론조사: 53건(총 144건 중 '법정 언론기관 미해당' 등의 사유로 91건은 제외)

나.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 요건과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언론기관이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표 3-22〉 참조)
-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표 3-23〉 참조)
-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표 3-24〉 참조)

〈표 3-23〉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 현황

(단위: 석)

정당명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석수	170	108	12	3	3	1	1

※ 자료: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의 명칭 및 게재순위 통지」(중앙선거위 선거관리과-1663, 2025. 5. 11.)

〈표 3-24〉 정당별 직전 선거의 득표율 현황(100분의 3 이상인 정당)

(단위: %)

선거별 정당명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 3. 9.)	제8회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2022. 6. 1.)	제8회 비례대표 구·시·군의원선거 (2022. 6. 1.)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2024. 4. 10.)
더불어민주당	47.8	41.9	44.3	26.7 (더불어민주연합)
국민의힘	48.6	52.4	53.0	36.7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	-	-	-	24.3
개혁신당	-	-	-	3.6
민주노동당	2.4 (정의당)	4.1 (정의당)	1.9 (정의당)	2.1 (녹색정의당)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과

5월 10일(토)부터 5월 11일(일)까지 2일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친 7명 중 위 초청대상 후보자의 선정 요건에 해당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차 위원회의(5. 12.)에서 최종 초청대상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표 3-25〉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후보자 등 선정

구분	기호	소속 정당명	후보자 성명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 후보자)	1	더불어민주당	이 재 명
	2	국민의힘	김 문 수
	4	개혁신당	이 준 석
	5	민주노동당	권 영 국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5항에 해당하는 후보자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	6	자유통일당	구 주 와
	7	무 소 속	황 교 안
	8	무 소 속	송 진 호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후보자토론회의 참석 대상은 4명, 같은 법조 제5항에 따른 후보자토론회 참석 대상은 3명으로 선정되었으나,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자유통일당)가 5월 18일(일)에 사퇴하여 5월 19일(월)에 개최한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에는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자가 참석하였다.

다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만으로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게 된 후보는 없었다.

6. 토론주제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를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적 관심사를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의제선정을 위한 여론조사, 유관기관에 토론의제 추천 의뢰 및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토론의제를 수집하였다. 토론주제는 후보자의 정책 및 비전 등을 비교·검증하기에 용이하고 특정 후보에 유·불리 등 공정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위원회의 및 준비소위원회의의 검토를 거쳐 전체위원회의에서 결정하였다.

가. 토론의제 수집

후보자토론회의 정해진 분야별(1차 ‘경제분야’, 2차 ‘사회분야’, 3차 ‘정치분야’, 초청외 ‘국정전반’)로 다양한 의제를 수집하기 위해 유관기관·단체 및 학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 및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등에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의제 추천을 의뢰하였다. 그 결과 경제 분야 55건, 사회 분야 79건, 정치 분야 46건 등 총 190건의 추천의제가 수집되었다.

또한 주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정당학회에 의뢰하여 2025년 4월 16일(수)부터 5월 6일(화)까지 약 1개월 동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한국정당학회의 연구진은 이번 선거가 후보자 확정 후 공약 제시에 이르기까지 매우 촉박한 선거

일정이어서 후보자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숙고의 시간이 부족한 유권자에게 후보자 간 공약과 정책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토론주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현안에 대한 철학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여 후보자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가 가능한 의제, 정책 중심의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 한국 사회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제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제개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의제개발 연구는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조사·연구하고, 전문가 협의 과정을 통해 핵심적인 주요 정책의제를 개발·정리하여 실제 후보자토론회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점과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각 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현황은 <표 3-26>과 같다.

<표 3-26> 분야별 토론의제 개발 총괄표

분야	주제	토론의제
경제	고용·노동·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 일자리와 노동 관련 정책
	조세 및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미국 수출입과 관세정책 • 부동산 및 조세정책
	산업 및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한 정책 • AI,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등 산업육성 지원 방안
	민생경제 및 지역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과 민생안정 • 지방·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감정 및 사회적 양극화 완화 정책 • 젠더, 세대 갈등 완화 정책 •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갈등 해소
	복지 및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생 및 육아 정책 • 고령화 관련 정책적 비전 • 통합돌봄지원 정책의 방향성 • 성평등 및 여성 의제
	환경 및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및 위기 대응 방안 •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 의료 시스템 개혁 및 공공의료 강화
	교육 및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입시 및 사교육 정책 • 인문학 및 K-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방안

분야	주제	토론의제
정치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비전과 책임 있는 리더십 • 정치갈등 해소와 협치 기반 국정운영 •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치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혁신 • 사법·검찰 독립과 법치주의 회복
	외교·대외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외교의 기본 방향과 대미 관계 • 대 중국 외교 관련 쟁점 • 대 일본 외교 관련 쟁점
	안보·북한·통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북 및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 • 경제안보 실현 방향

이에 덧붙여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후보자토론회의 토론 주제로 선정하기 위해 2025년 5월 1일(목)부터 5월 2일(금)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 사회, 정치 분야별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를 각각 개방형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27〉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 여론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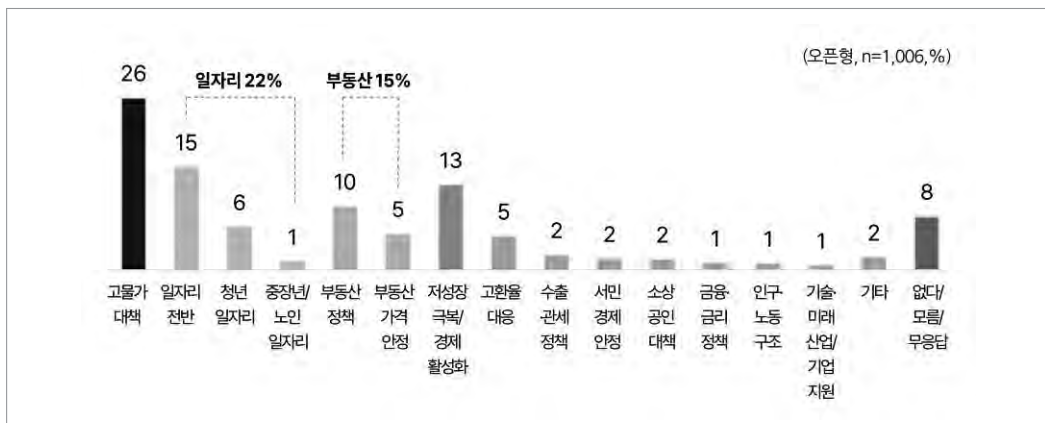
구분	내용
조사기간	2025. 5. 1.(목) ~ 5. 2.(금)
표본크기	1,006명(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CATI(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무선 RDD 100%]
표집방법	성, 연령, 지역별 인구현황에 따른 할당 표집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 point
오차보정방법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 부여 (2025년 3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응답율	16.8% (총 5,99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6명이 응답 완료)
조사기관	(주)엠브레인퍼블릭

제3장

■ 경제 분야

유권자가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는 ‘고물가 대책’이 26%로 가장 높았으며, 일자리 전반, 청년·중장년·노인 등 ‘일자리’ 관련 내용이 22%, 부동산 정책 및 가격 안정 등 ‘부동산’(15%), ‘저성장 극복 및 경제 활성화’(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후보자토론회 경제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표 3-28〉 경제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고물가 대책	▶ 고물가 ▶ 물가 상승 ▶ 물가 안정화 방안 ▶ 물가 대책 미흡, 정치인의 무관심 ▶ 서민, 가계 경제 어려움 ▶ 생활비 부담 ▶ 먹거리, 식자재 공공요금 부담 ▶ 임금 대비 높은 물가 ▶ 물가와 임금 격차
일자리	[일자리 전반] ▶ 일자리 부족과 실업률 ▶ 일자리 창출 정책 ▶ 양질의 일자리(정규직) ▶ 연령 및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 지방 일자리와 지역 소멸 [청년 일자리] ▶ 청년 실업 ▶ 청년 고용 정책 ▶ 청년 일자리 창출 ▶ 지방청년 일자리 [중장년/노인 일자리] ▶ 4050 일자리 ▶ 고령화 시대 일자리 ▶ 실버 일자리 ▶ 취약층(저학력, 노령) 일자리

구분	내용
부동산	[부동산 가격 안정] ▶ 가격 안정 정책 ▶ 집값 상승 대책 ▶ 서민 주거 부담 ▶ 서민 박탈감 ▶ 집값의 격차(서울과 지방)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 방향 ▶ 규제완화 ▶ 부동산 공급 정책 ▶ 지방부동산 정책 ▶ 부동산 관련 세금(재산세, 증여세, 종부세) ▶ 전세사기 대책 ▶ 부동산 침체 및 거래 위축
저성장 극복/ 경제활성화	▶ 저성장 극복 ▶ 경기침체, 경기 부양책 ▶ 경제 성장 및 활성화 ▶ 내수 활성화 ▶ 자영업자 및 서민 어려움 ▶ 지방경제활성화
고환율 대응	▶ 환율 인하 방안 ▶ 정부 차원 대응 ▶ 무역 및 수출 경쟁력 ▶ 미국 중국 경제 영향
수출·관세 정책	▶ 미국, 트럼프 관세 대응 ▶ 관세 문제 해결 ▶ 수출 활성화 방안 ▶ 미국과 경제 관계 ▶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
서민 경제 안정	▶ 서민 경제 정책 ▶ 서민 지원 정책 ▶ 민생 문제 ▶ 경제 불안 해소
소상공인 대책	▶ 소상공인 지원 정책 ▶ 자영업자 대책 ▶ 경기침체 구체적 대책 ▶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 플랫폼 활성화로 인한 어려움
금융·금리 정책	▶ 금리 인하 정책 ▶ 통화 및 금융 정책 ▶ 자본시장 및 주식시장 ▶ 가상화폐
인구·노동 구조	▶ 저출산과 인력부족(외국인 노동자) ▶ 근무시간 유연성 ▶ 주4.5일제 ▶ 근로환경
기술·미래산업/ 기업지원	▶ 반도체, AI ▶ IT 및 기술 관련 투자 ▶ 기업/중소기업 지원
기타	▶ 기본소득 ▶ 빈부 격차/양극화 해소 ▶ 세금 ▶ 상법개정 ▶ 국민연금 개혁

경제 분야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9가지 주제를 제시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폐쇄형 응답에서도 1순위와 2순위를 합친 결과가 ‘물가상승에 대한 대책’(36%), ‘일자리 정책’(34%), ‘부동산 정책’(2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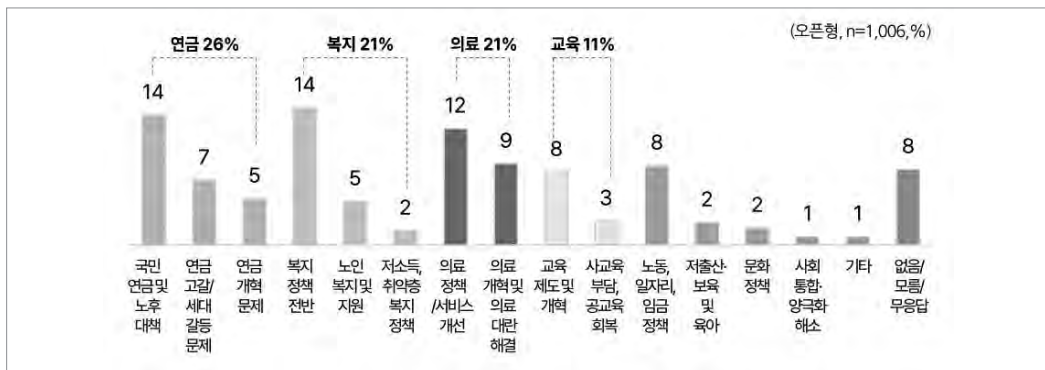
〈그림 3-12〉 후보자토론회 경제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 사회 분야

경제 분야 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는 국민연금 개혁 등 ‘연금’에 대한 내용이 26%로 가장 많았고, 노인 및 취약층 등에 대한 ‘복지’ 정책 관련 의견이 21%, 의료 서비스와 의료 개혁 등 ‘의료’에 대한 의견이 21%, 교육개혁 및 사교육 문제 등 ‘교육’에 대한 의견이 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3〉 후보자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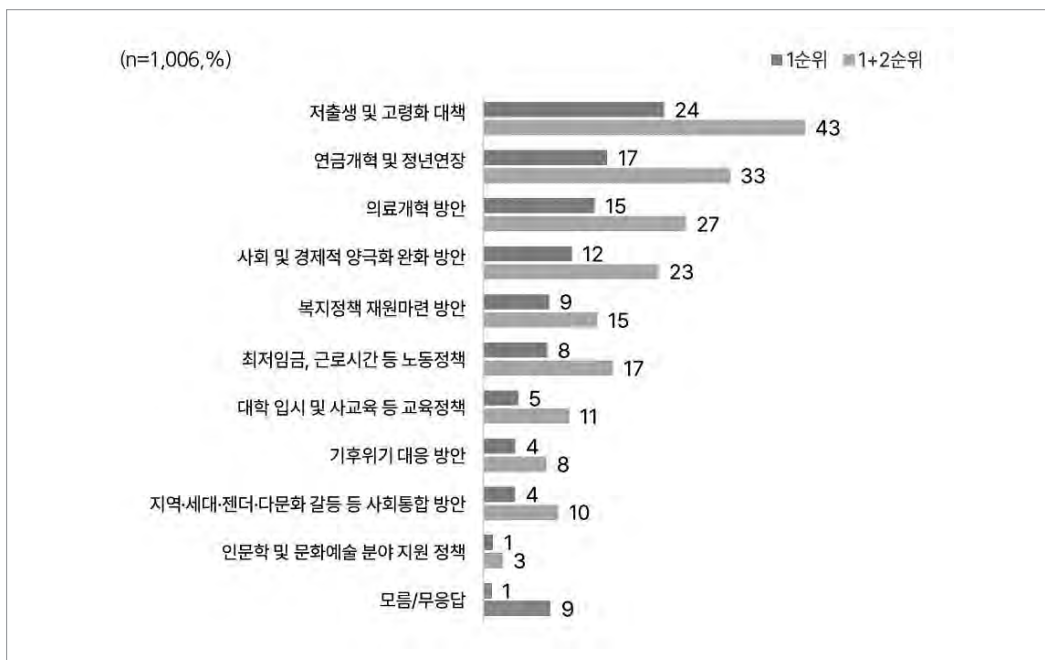


〈표 3-29〉 사회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연금	<p>[국민연금 및 노후 대책] ▶ 연금 금액 부족(물가연동 필요) ▶ 노인 연금과 노후 보장 ▶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 퇴직연금 현실화 ▶ 공무원 연금 과다, 연금 간 불균형 ▶ 투명한 운영 ▶ 기금관리</p> <p>[연금 고갈과 세대 갈등] ▶ 연금 고갈/소멸 불안 ▶ 미래수급 가능성 ▶ 청년 부담 상승 ▶ 세대 간 형평성 확보 방안 ▶ 청년 의견 수렴 필요</p> <p>[연금 개혁] ▶ 연금개혁 시급성 ▶ 국민 합의 기반 개혁 필요 ▶ 납입금과 연금 수령액 조정 ▶ 정부의 일방적 추진, 공론화 필요</p>
복지	<p>[복지 정책 전반] ▶ 보편 복지 vs 선별지원 ▶ 복지의 형평성/공평성 ▶ 복지 사각지대 ▶ 계층별 맞춤 복지(청년, 노약자, 장애인, 다문화 등) ▶ 복지 예산 증액/재원 마련 ▶ 복지 불신/제도적 허점</p> <p>[노인 복지] ▶ 노인 복지 확대 및 강화 ▶ 고령화 시대 복지 정책 ▶ 독거 노인 문제 ▶ 노인 일자리 창출과 소득지원</p> <p>[저소득, 취약층 복지] ▶ 저소득층 복지 확대/적극 지원 ▶ 다양한 취약층 지원</p>
의료	<p>[의료 정책/서비스] ▶ 지방 의사 부족 문제 ▶ 지방 병원 접근성(병원 부족, 환자 많음) ▶ 의료체계 정비 필요 ▶ 공공의료 강화 ▶ 응급실 부족 문제 ▶ 전문의 확충 ▶ 의료비 및 건강보험료 부담 ▶ 비급여 권장 ▶ 고령화 시대의 의료</p> <p>[의료개혁 및 의료 대란 해결] ▶ 의사-정부 갈등 해결 ▶ 의료 대란/파업 정상화 ▶ 의대생 복귀 및 교육 문제 ▶ 의대 정원 및 지역 배분 ▶ 의료개혁 필요성과 정책 합의</p>
교육	<p>[교육 제도 및 개혁] ▶ 입시제도 및 경쟁 ▶ 교육개혁 방안 ▶ 교육 정책 일관성 ▶ 교육 격차 해소 방안 ▶ 돌봄 및 맞벌이 가정 ▶ 인성 교육 ▶ 디지털 및 AI 학습</p> <p>[사교육 부담, 공교육 회복] ▶ 공교육 악화 문제 및 회복방안 ▶ 입시정책과 사교육 ▶ 사교육비 부담 ▶ 사교육 의존(사교육 필요 현실)</p>
노동, 일자리, 임금정책	▶ 최저임금 ▶ 임금 격차 해소 방안 ▶ 근로환경 개선 ▶ 주4일제 ▶ 노동 유연화 ▶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해소 ▶ 세대별 맞춤 일자리 ▶ 노동자 보호/노동권 보장
저출산·보육 및 육아	▶ 육아 정책 ▶ 일과 육아 병행 ▶ 단축 근로 ▶ 아동 복지 ▶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저출산 해결 방안 ▶ 출산 장려 정책 ▶ 난임 지원
문화정책	▶ 문화 활성화 ▶ 문화강국 도약 ▶ 지방의 문화 혜택 ▶ 문화재 보존 ▶ 도서출판 지원
사회 통합·양극화 해소	▶ 국민통합, 사회통합 ▶ 양극화 개선/극복방안 ▶ 젠더갈등 ▶ 정서적 이념적 갈등 완화
기타	▶ 장애인 이동권 ▶ 수도 이전, 청와대 이전 ▶ 고령사회 정년 연장

사회 분야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 10가지를 제시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폐쇄형 질문에는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금개혁 및 정년 연장’ 33%, ‘의료개혁 방안’ 27%, ‘사회 및 경제적 양극화 완화 방안’ 23%,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정책’ 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방형과 폐쇄형 모두 ‘연금’ 및 ‘의료개혁’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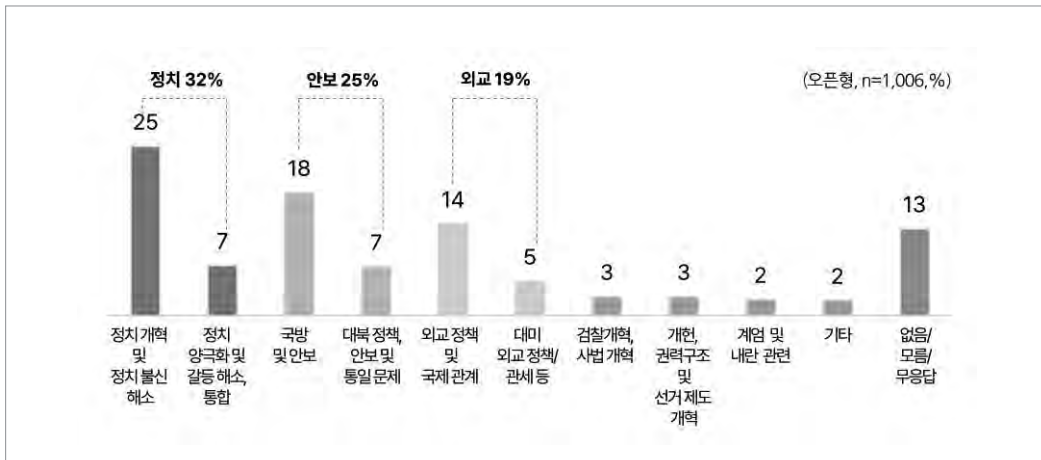
〈그림 3-14〉 후보자토론회 사회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 정치 분야

정치 분야 토론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에 대하여 개방형으로 응답한 결과는 정치개혁 및 정치적 갈등 해소 등 ‘정치’ 관련 응답이 32%로 가장 높았고, 국방 및 안보, 대북 정책 및 통일 등 ‘안보’ 관련 응답이 25%, 외교 정책 및 대미 외교 등 ‘외교’ 관련 응답이 19% 등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후보자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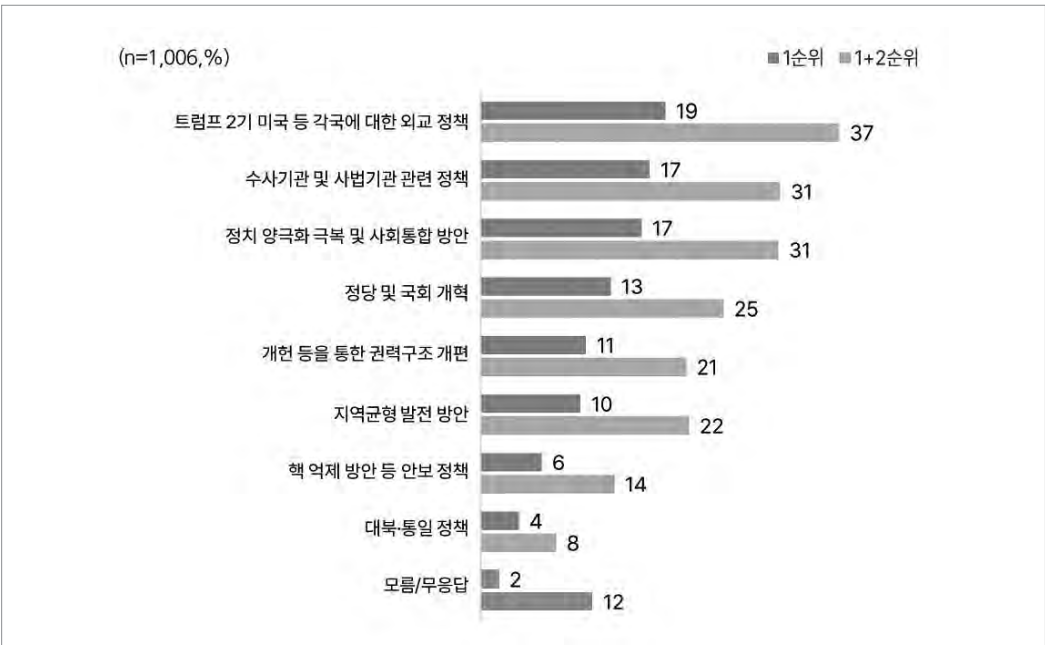
〈표 3-30〉 정치 분야 토론주제(개방형 응답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정치	<p>[정치개혁 및 정치불신 해소] ▶ 정치개혁, 국민을 위한 정치 ▶ 여야 협치 및 화합과 협력 ▶ 정치인 자질 및 신뢰성/도덕성 문제 ▶ 국회의원 특권 축소/권한 제한 ▶ 기득권 내려놓기 ▶ 국회의원 수 축소, 3선 금지, 소환제 도입 등 ▶ 지구당 활성화 ▶ 지역감정 해소 ▶ 젊은 정치인 확대/세대교체</p> <p>[정치 양극화 및 갈등 해소, 통합] ▶ 정치 양극화 문제 ▶ 보수/진보, 우파/좌파 갈등 ▶ 편향적 정치 ▶ 여야 갈등 ▶ 정치 통합과 협력 ▶ 협치와 소통 필요 ▶ 정치권의 지역갈등 및 세대 갈등 유발 문제</p>
안보	<p>[국방 및 안보] ▶ 안보 강화 및 안보 위협 대응 ▶ 자주국방 ▶ 군사력 확충 및 군대 개선 ▶ 주한 미국 및 방위비 분담 ▶ 간첩법 개정 ▶ 중국 관련 위협(드론, 간첩, 서해 구조물 등)</p> <p>[대북정책 및 안보, 통일 문제] ▶ 대북 정책 방향 ▶ 대북 관계 개선 ▶ 남북 교류 ▶ 중국 및 러시아 변수 ▶ 대북 안보 정책 ▶ 북한 해킹/핵무기 위협 대응 ▶ 통일 방안/필요성 ▶ 평화적인 통일</p>

구분	내용
외교	<p>[외교 정책 및 국제 관계] ▶미국과 중국 사이 외교 ▶균형 외교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외교를 통한 안보 보완 ▶4개 주변국 외교와 대북 정책 ▶다자 외교 ▶리더십 부재로 인한 외교 불안</p> <p>[대미 외교 정책/관세 등] ▶대미 외교 정책 ▶미국과의 외교 방향/협력 ▶한미동맹 ▶미국/트럼프 관세 대응 ▶외교와 수출 연계 방안 ▶대미 수출 ▶미국 의존도 줄이기 ▶외교 다변화</p>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검찰 개혁 ▶검찰 수사권 축소, 기소 전담 ▶검찰의 정치 개입, 편파적 수사 논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 분리 ▶사법 카르텔 ▶사법 정의 ▶정치-사법 연결고리 단절
개헌,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 개혁	▶개헌/헌법 개정 ▶정치개혁의 도구로서 개헌 ▶권력 분산을 위한 정치 구조 개편 ▶대통령제 임기(4년 중임제, 연임제 등) ▶삼권분립 문제 ▶국회의원 제도 개편 ▶선거제도(중선거구제, 시/구의원 축소 등)
계엄 및 내란 관련	▶계엄 선포 방지법/재발 방지 방안 ▶내란 방지 제도 ▶내란 혐의자 처벌/청산
기타	▶사회안정 및 신뢰 회복 ▶언론의 공정성 ▶중국인 투표권 ▶포퓰리즘 정책

정치 분야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주제 8가지를 제시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폐쇄형 질문에서는 '트럼프 2기 미국 등 각국에 대한 외교정책'이 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 관련 정책' 31%, '정치 양극화 극복 및 사회통합 방안' 31%, '정당 및 국회 개혁' 25%, '지역 균형 발전 방안' 22% 등의 순으로 결과가 집계되었다. 개방형과 폐쇄형 응답 모두에서 '외교'와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3-16〉 후보자토론회 정치 분야 토론주제(폐쇄형 질문)



이외에도 최근 방송사 토론프로그램의 토론주제 현황 자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제21대 대선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선정 결과 등도 토론주제 선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3-3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21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10대 핵심의제’

(2025. 4. 30. 발표)

순위	유권자 핵심 의제 우선순위(선택비율)		1, 2, 3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선택 수)	
1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21.1%	국민 통합 / 사회적 갈등 해소	50
2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19.1%	AI 등 미래산업 육성	45
3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	17.4%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	40
4	국민 통합 / 사회적 갈등 해소	14.5%	공정과 상식 회복 등 민주주의 복원	33
5	육아·보육·교육 등 저출생 대책 마련	8.4%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27

제3장

제 21 대 대통령 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순위	유권자 핵심 의제 우선순위(선택비율)		1, 2, 3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결과 (선택 수)	
6	고령화 사회 대비 사회안전망 구축	4.6%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24
7	자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	4.5%	육아·보육·교육 등 저출생 대책 마련	20
8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균형발전	4.3%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19
9	AI 등 미래산업 육성	3.4%	자산,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 해소	15
10	탄소중립 등 기후위기 대응	1.1%	경제 회복 및 저성장 극복대책 마련	13

나. 토론주제 선정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차수별 주제는 앞서 살펴본 토론의제 개발 연구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와 함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문위원과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유관기관 및 단체·학회 등에서 추천받은 토론의제를 중심으로 전문위원회의(5. 7.)와 준비소위원회의(5. 8.)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후 제5차 위원회의(5. 9.)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토론주제는 시의성이 있고 후보에 따라 유·불리가 없는 공정한 주제로서 후보의 자질과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한 전제로 삼아 결정했다. 특히 새로이 시도하는 ‘공약검증토론’에서 후보들의 공약발표와 주도권토론을 통한 서로에 대한 검증이 잘 진행될 수 있는 주제인가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는 차수별로 각 3개가 선정되었다.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 수가 불확정적이어서 9명 이하 시 주제 2개, 10명~15명 시 주제 1개로 구분하여 선정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초청외 후보자가 2명으로 좁혀져 총 3개의 주제로 하고 차수별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총량제토론’ 주제를 모두 활용하여 선정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기후·환경’ 관련 토론의제 추천이 23건에 이르렀고 일부 단체가 사무국에 면담을 요청하거나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후·환경’ 토론의제를 후보자토론회에서 다루기를 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실제로 지구온난화와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진 현재에 꼭 필요한 주제라는 의견을 모아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주제를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사회 분야)에서 다루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 선정 현황은 아래의 <표 3-32>와 같다.

〈표 3-32〉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현황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초청 1차	경제	[시간총량제토론]	•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공약검증토론]	•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초청 2차	사회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공약검증토론]	•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초청 3차	정치	[시간총량제토론]	•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공약검증토론]	• 정치개혁과 개헌 • 외교·안보 정책
초청 외	국정전반	[대담(1명)]	• 초청대상 주제 전체(9개)
		[양자토론]	•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 정치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9명 이하: 주제 2개]	• 정치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 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 방안
		[10명~15명: 주제 1개]	• 각 후보의 핵심 공약(정치·경제·사회)

※ (초청) 양자토론의 경우 시간총량제토론은 초청대상 주제와 동일하고, 주도권토론에는 초청대상 공약검증토론 2개 주제를 모두 포함함(진행방식 동일).

※ (초청외) 후보자 수 16명 이상인 경우 토론 없이 후보자 공약발표 진행

※ (초청외) 대담 및 양자토론 등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등록마감일 익일(5. 12.)에 긴급히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추가 결정'을 의결함(진행방식 동일).

7.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30일까지 참석 예상 후보자의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해야 한다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제4조⁴³⁾에 따라 2025년 4월 23일(수) 제3차 위원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참석 예상 후보자 수에 따른 진행방식을 각각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의 개요는 <표 3-33>과 같다.

<표 3-33>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개요

구 분		진행방식	비고
초청	경제분야 사회분야 정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제2]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주제3]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입식 (스탠딩)
	양자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1]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제2, 3] 주도권토론 • [자유주제]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초청외	대담(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1~9] 사회자 질문·답변 • 마무리발언 	좌식
	양자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1, 2, 3]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9명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1, 2]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10명~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16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후보자 공약발표 • 마무리발언 	

43)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지난 제19대(2017), 제20대(2022)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부터는 후보자에게 보다 많은 토론 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시작발언’을 생략해왔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의 궐위라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에서 ‘시작발언’을 활용하였다. 총 3번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시작발언’에 이어 주제1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 답변 후 시간총량제토론’과 주제2 및 3에 대한 ‘공약검증토론(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을 한 뒤 마지막으로 ‘마무리발언’하는 순서로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입식(스탠딩) 형태로 선 상태로 토론하였다.

차수별 토론회의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과 ‘시간총량제토론⁴⁴⁾’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을 보완하여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잔여발언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명확화하였고, 질의응답이 있는 경우에는 토론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답변 의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질문받은 후보자가 우선 발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발언시간을 모두 소진한 후보자와 토론하고 싶은 경우를 고려하여 후보자 간 ‘발언시간 양도’ 규정을 다시 허용하였고, 시간을 지정한 양도의 경우에는 사회자의 조정에 의해 해당 시간이 준수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각 후보자의 정책 차별성과 경쟁력을 드러내기 위해 ‘공약검증토론’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공약검증토론’은 ‘공약발표’와 ‘주도권토론’의 두 파트로 구분되는데, ‘공약발표’에서 후보자들이 정해진 순서와 시간에 맞춰 해당 주제에 대한 자신의 공약이나 정책을 설명한 다음에 ‘주도권토론’에서 주어진 시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가 자유롭게 다른 후보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이다.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와 토론’하고 ‘답변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하는 규칙을 필수 사항으로 두었다. 또한 연설식 진행이 되지 않도록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질문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하도록 권고하였고, 사회자가 개입하지 않는 한 주도권토론 시간이 중단되지 않도록 운용하였다.

44) 시간총량제토론: 각 후보가 주어진 총 발언시간 내에서 발언권을 얻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

〈그림 3-17〉 후보자토론회 공약발표 화면



진행방식 결정 시에 후보 간 단일화와 사퇴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양자토론안’까지 함께 의결하였는데, 이 경우에는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공약검증토론’ 방식을 ‘주도권토론’ 방식으로 2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공약검증토론’의 2개의 주제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두 번째 주제는 ‘자유주제’로 후보들이 해당 차수 분야 중 각자 원하는 주제로 서로를 검증하도록 설정하였다.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 발언시간은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하는 것으로 운용하였으며, 5초 이하의 발언시간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발언시간 종료 즉시 기존처럼 마이크를 음소거하였다.

〈표 3-34〉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30초 총량)	26분

진행방식	내용	소요시간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 도권토론)	〈주제2〉 • C/D/A/B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주제3〉 • D/A/B/C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D/A/B/C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마무리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계		104분30초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 공약발표시간(1분30초) 고정

구분	6명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	각 3분30초	각 5분	각 6분30초	각 9분30초

세부 운영 방법

■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모든 후보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약발표 후 같은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함.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하여야 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시간 운용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함.
 - 상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상대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
 - 진행 중 사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은 멈추지 않음.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 없이 각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 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함.

제3장

제 21 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

-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후보자(A)가 다른 후보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후보자(B)의 잔여 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후보자(A)는 후보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 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 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표 3-35〉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양자토론)

진행방식	내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 후보자(각 1분30초)	3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3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10분 총량)	20분
주도권토론	〈주제2, 3〉 • 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20분)	40분
	〈자유주제〉 • B/A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20분)	40분
마무리발언	• A/B 후보자(각 1분)	2분
계		108분30초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 없이 각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 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에게 우선 발언하도록 함.

■ 주도권토론

-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에게 "답변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시간 운용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함.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상대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
 - 진행 중 사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은 멈추지 않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 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 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5. 11.)을 기준으로 참석 후보자 수(9명 이하, 10명~15명, 16명 이상)에 따라 주제의 수를 달리하여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방식으로 하고 좌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할 후보자가 3명에 불과하여 긴급히 제6차 위원회의(5. 12.)에서 1인 대담 또는 양자토론 발생에 대비한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추가 결정'을 의결하였다. 두 명의 후보자가 참석하는 양자토론은 시작발언 후 주제 3개에 대해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 후 시간총량제토론, 마무리발언하는 순서로 하고 총 방송시간은 기존 120분에서 60분으로 조정하였다. 만약 한 명의 후보자만 참석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의 시작발언 후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9개의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질문에 후보자가 각각 답변한 뒤 마무리발언을 하는 방식으로 하고 총 방송시간은 30분으로 조정·결정하였다. 또한 결정 즉시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참석 승낙서’를 제출한 후보 측에 이러한 상황을 안내하고 각 중계방송사에도 참석 후보자 수 변동 시 전체적인 토론회 시간이 달라짐을 공지하여 사전에 대체 편성을 준비하여 차질이 없도록 하는 등 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실제로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개최일(5. 19.) 직전인 5월 18일(일)에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자(자유통일당)가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참석하는 후보자 측과 중계주관방송사(SBS) 및 수중계 방송사들에 즉각 안내하고 그에 맞춰 신속하게 대처하였다.

〈표 3-36〉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양자토론)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 후보자(각 1분30초)	3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3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총량)	12분
	〈주제2〉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3분30초
	• A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총량)	12분
	〈주제3〉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3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총량)	12분
마무리발언	• A/B 후보자(각 1분)	2분
계		51분30초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 없이 각 후보자 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 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에게 우선 발언하도록 함.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 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 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60분).

8. 사회자 선정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 제20대(2022)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정당이 사회자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있었던 바, 이번에는 사회자 추천 및 집계 과정에서 각 방송사 소속 인원이 아닌 외부 인사가 후보군에 포함될 경우에 후보자 측의 의견 수렴을 거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자 선정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제2차 위원회의(4. 10.)에서 논의한 뒤 방송 3사 추천 위원을 통해 방송사별 복수의 사회자 후보군을 정비하여 총 12명의 사회자 후보 명단을 작성하였다. 이후 제3차 위원회의(4. 23.)에서 위원들에게 후보군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사회자를 추천하도록 요청한 뒤 추천 명단을 집계하여 준비소위원회의(5. 8.) 검토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집계된 추천 명단과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적 중립성, 공정하고 균형감 있는 토론 진행 능력, 방송토론 진행의 경험,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토대로 제5차 위원회의(5. 9.)에서 최종 사회자 4명을 선정하였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5. 18.)와 초청외 후보자토론회(5. 19.)는 각각 SBS의 편상욱·고희경 기자,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5. 23.)는 KBS의 이윤희 기자,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MBC의 전종환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게 되었다.

〈그림 3-18〉 후보자토론회 사회자 선정 현황



초청 1차: 편상욱(SBS 기자)



초청 2차: 이윤희(KBS 기자)



초청 3차: 전종환(MBC 아나운서)



초청 외: 고희경(SBS 기자)

선정된 사회자들은 각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사회자 공통질문’ 문안을 작성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였고, 준비소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질문사항과 토론회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검토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련 법 및 규정, 토론회 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회 진행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사회자 안내자료(진행 매뉴얼)’를 준비해 사회자가 공정하고 안정적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모든 사회자와 별도의 면담을 실시하여 안내자료를 충분히 설명하고 토론회 진행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사회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추가 면담이나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질의응답(Q&A) 식으로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 문답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자에게는 무엇보다 공정한 토론회 진행을 요청하였고, 특히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인 동시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에 대한 비교·평가를 돕는 것이 주목적임을 강조하며 사회자 개인의 판단이나 토론 진행 중 개입을 최대한 배제할 것을 주문하였다.

9. 질문사항 선정

후보자토론회의 차수별 ‘시간총량제토론’의 사회자 공통질문 및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리드멘트)은 ‘토론의제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사회자안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안을 준비하여 준비소위원회의(5. 15.)에서 심층적으로 교차 검토한 후, 제7차 위원회의(5. 17.)에서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된 질문사항은 각 후보자에게 질문 전체를 사전에 통지하여 내실 있는 토론회 준비를 도모하였다.

〈표 3-37〉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구분	도입문안
초청 1차 (경제)	〈주제1〉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공통질문)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3%대에서 1~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2〉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도입문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관세 정책이 실현되면서 통상전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둔화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3〉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도입문안)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생산,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지표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는 기술 혁신이라는 새로운 경쟁 국면에 돌입하였습니다.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보겠습니다.

구분	도 입 문 안
초청 2차 (사회)	<p>〈주제1〉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공통질문)</p> <p>4명의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질문, 오늘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 갈등이 전년대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선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p>
	<p>〈주제2〉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도입문안)</p> <p>우리 사회가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과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p>
	<p>〈주제3〉 기후 위기 대응 방안(도입문안)</p> <p>날이 갈수록 폭염, 폭한 등 극한의 기후와 이로 인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각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기후위기 관련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p>
초청 3차 (정치)	<p>〈주제1〉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공통질문)</p> <p>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치가 이를 극복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데요, 각종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런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p>
	<p>〈주제2〉 정치 개혁과 개헌(도입문안)</p> <p>여야의 극한 대치와 대화의 실종,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권력투쟁은 이제 국민들에게 익숙해진 우리 정치권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 시스템의 개혁은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p>
	<p>〈주제3〉 외교·안보 정책(도입문안)</p> <p>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고조, 국제질서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 외교·안보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 안보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각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p>

※ 양자토론 시 사회자 공통질문 동일

만약 후보의 단일화나 사퇴로 참석 후보자 수가 2명인 ‘양자토론’이 진행될 때에는 ‘공약검증토론’ 대신 ‘주도권토론’을 2회 개최하게 된다.⁴⁵⁾ 첫 번째 주제는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 후 시간총량제토론’을 그대로 진행하지만, ‘주도권토론’에서는 ‘사회자 공통질문’이 별도로 없기에 주제를 설명하고 토론의 논점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사회자의 도입문안도 함께 선정하였다.

〈표 3-38〉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양자토론) ‘주도권토론’ 사회자 도입 문안

구분	질문 사항 등
초청 1차 (경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는 통상전략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방안은 무엇인지 토론해보겠습니다.
초청 2차 (사회)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저출생·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연금과 의료 개혁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후보자의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에 대해 검증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함에 따라 자연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에너지, 식량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대응할지 공약도 함께 토론해보겠습니다.
초청 3차 (정치)	정치 개혁과 개헌 & 외교·안보 정책
	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정치적 혼란을 겪으면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등 정치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후보의 정책을 들어보고, 북핵 위기와 미중 경쟁 등으로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대응 방안도 토론하겠습니다.

또한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의 질문사항은 후보자등록 마감 이후 총 3명의 후보자를 기준으로 하여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토론회 준비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3인안, 2인 양자토론안, 1인 대담안을 준비하였고 마찬가지로 이를 사전에 후보자 측에 통지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5) 〈표 3-36〉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양자토론) 참조

〈표 3-39〉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3인 토론안)

〈주제1〉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으로 외교·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어떤 정치개혁 방안과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제2〉 경제 활성화 및 사회통합 방안

우리 경제가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수 침체로 민생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활력을 되찾을 방안은 무엇인지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들마다 ‘국민통합’을 외치고 있는데 세대와 성별, 지역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 3-40〉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2인 양자토론안)

〈주제1〉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우리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경제성장률은 3%대에서 1~2%대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치를 0%대로 하향 조정하는 발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불황 등으로 소비와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실질 임금 감소와 고용 불안, 자영업자의 누적 적자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2〉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4명의 후보들에게 드리는 공통질문, 오늘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지난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세대 간, 종교 간, 성별 간 갈등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분열과 대립에 국력을 소모하는 나라에선 국민의 삶이 결코 나아질 수 없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한 통합 방안은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주제3〉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정치의 요체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정치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이념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북핵 위협과 미중 갈등으로 외교·안보 환경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는 어떤 정치 개혁 방안과 외교·안보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표 3-41〉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1인 대담안)

구분	질문 사항
〈주제1〉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초청 1차 질문사항과 동일
〈주제2〉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초청 1차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과 동일
〈주제3〉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초청 1차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과 동일
〈주제4〉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청 2차 질문사항과 동일
〈주제5〉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초청 2차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과 동일
〈주제6〉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초청 2차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과 동일
〈주제7〉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초청 3차 질문사항과 동일
〈주제8〉 정치 개혁과 개헌	초청 3차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과 동일
〈주제9〉 외교·안보 정책	초청 3차 공약검증토론 도입문안과 동일

※ 초청대상 주제별 공통질문과 도입문안을 동일하게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활용, 〈표 3-37〉 참고

10. 설명회 개최 및 토론회 개최 홍보

가. 설명회 개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2025. 5. 10. ~ 5. 11.)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등록 현장에 후보자토론회 별도 안내 부스를 마련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다. 현장 방문자에게 후보자토론회 관련 향후 일정 등을 안내하였고, 가능한 경우에는 참석확인서를 바로 작성·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실제 참석 여부를 파악하고 토론회 준비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19〉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 현장 안내자료 배포 설비 현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08호

안내자료 배포 설비

이후 제6차 위원회의(5. 12.)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초청 후보자가 선정됨에 따라 5월 14일(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회의실에서 ‘후보자토론회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토론회 진행과 관련된 안내사항 전달을 위해 초청 및 초청외 후보자를 구분하여 각각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개최하였다.

〈표 3-42〉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장소	참석자
초청	2025. 5. 14.(수) 10:00	중앙토론위원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후보자의 대리인 4명 외 5명 위원회: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등
초청외	2025. 5. 14.(수) 14:00	중앙토론위원회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보자: 후보자의 대리인 3명 외 1명 위원회: 사무국장, 방송토론팀장 등

설명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개요,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회 당일 일정 및 유의사항 등을 설명하였다. 또한 방송사 외곽 차량통제, 방송사 내부 출입카드 발급 안내와 보안검색대 운영 등 후보자 안전관리 및 방송사 내부 출입제한 사항 등 토론회 현장 질서유지 계획에 대해서도 안내하였다.

안내자료 설명 후 후보자의 좌석 및 발언순서 등을 결정하기 위한 추첨을 진행하였다. 추첨은 토론회 차수별로 나누어 후보자의 기호 순서에 따라 추첨순서를 먼저 추첨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를 추첨하였다. 이날 추첨한 결과는 토론회장에서 후보자의 좌석과 발언순서 등에 반영하는 동시에 방송사 내부의 대기실과 후보자의 입장 순서, 방송사 외곽의 후보자별 선거운동구역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표 3-43〉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좌석 및 발언 순서 추천 결과

후보자			좌석 및 발언 순서		
기호	정 당 명	성명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D	A	A
2	국민의힘	김문수	A	B	C
4	개혁신당	권영국	C	D	D
5	민주노동당	이준석	B	C	B

〈표 3-44〉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좌석 및 발언 순서 추천 결과

후보자			좌석 및 발언순서
기호	정 당 명	성명	
6	자유통일당	구주와	C
7	무소속	황교안	A
8	무소속	송진호	B

※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자는 추천에 참여하였으나 5. 18.(일) 사퇴하여 토론회에 불참함.

〈그림 3-20〉 후보자토론회 설명회 개최 현황

(개최일자: 2025. 5. 14.)



안내자료 설명(초청)



좌석 및 발언순서 추천



안내자료 설명(초청외)

나. 토론회 개최 홍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자료 배포 등 대언론 활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매체와 다채로운 방식의 홍보를 통해 유권자의 토론회 시청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언론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관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의 협조로 주요 일간지 등에 총 5회 제공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3-45〉 후보자토론회 보도자료 제공 현황

배포일자	내 용
2025. 4. 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5. 5. 9.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등 선정
2025. 5. 16.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및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5. 5. 22.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2025. 5. 26.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또한 SBS 유튜브 ‘비디오 머그’와 협력하여 토론회 준비과정 등을 담은 후보자토론회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여 우리나라 대통령선거 TV토론의 연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창설 배경 등을 홍보하기도 하였다. SBS에서 4월 28일(월)에 촬영한 대외협력팀장의 인터뷰 및 4월 29일(화)에 개최한 안전관리 관계자 회의 영상, 위원회가 보유한 사진 자료 등을 바탕으로 편집과 수정 과정을 거쳐 약 7분 30초 가량의 짧은 영상으로 제작하였고,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5. 18.)를 앞둔 5월 16일(금)과 17일(토)에 걸쳐 SBS ‘비디오 머그’ 유튜브 채널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에 업로드하였다.

〈표 3-46〉 후보자토론회 기획방송 제작 현황

(기준일: 2025. 6. 4., 단위: 회)

업로드 일시	업로드 장소	조회수
2025. 5. 16.(금) 18:00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 머그’	39,039
2025. 5. 17.(토) 09:00	중앙토론위·중앙선관위 유튜브	4,293

〈그림 3-21〉 후보자토론회 기획방송 화면 자료



대외협력팀장 인터뷰



위원회 창설 배경



위원회 보유 사진자료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Daum)과 협업하여 선거 특집 페이지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 채널과 영상 등을 홍보하였다. 기존에는 카카오톡TV 뉴스채널을 선거특집 페이지에 노출했던 반면, 이번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노출시켜 포털 이용자들이 위원회 채널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22〉 후보자토론회 특집 페이지 노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배너



포털사이트 다음(Daum)

이외에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자체 SNS를 활용하여 후보자토론회 관련 카드뉴스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특집 페이지 및 시·도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자토론회 시청안내 배너를 게시하였다. 또한 각 후보자 측 소속 정당과 유관기관에도 시청안내 배너를 제공하여 다양한 방향으로 토론회가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그림 3-23〉 후보자토론회 관련 카드뉴스 등 홍보물 제작 현황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토론주제 및 토론자 안내

후보자토론회 시청 안내

토론회 시청 및 투표 독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각 방송사 로비에 50석 정도의 좌석과 전기시설을 설치한 기자석을 마련하고, 방송사의 협조를 얻어 생중계 시청용 모니터 및 무선 인터넷(Wi-Fi)을 설치하여 기사 현장 송고 등에 대비하였다.

또한 뉴스용 자료영상 및 보도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여 관련 기사 및 뉴스 재생산이 활발하도록 지원하였다. 뉴스용 자료영상의 경우 초청 1차(5. 18.)와 초청외(5. 19.)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록보존소와 협조하여 기록용으로 촬영한 사진을 촬영감독을 통해 언론사에 배포하였고, 이후에는 국회 영상풀(Pool)단과 협조하여 뉴스영상을 타 언론사와 공유하도록 조치하였다. 영상은 국회풀단, 외신기자풀단, 인터넷풀단 등에 제공하였고 보도사진은 연합뉴스와 뉴시스, 뉴스1 등에 제공하였다. 적극적인 취재 지원을 통해 총 1,105건의 후보자토론회 관련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그림 3-24〉 후보자토론회 개최장소 방송사 로비 기자석 설비 현황



초청 1차·초청외(SBS 프리즘타워)



초청 2차(KBS 본관)



초청 3차(MBC 미디어센터)

〈표 3-47〉 후보자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현황

(기준일: 2025. 6. 2., 단위: 건)

구 분	TV	지면보도	인터넷보도				계
			일간신문	뉴 스 통신사 ⁴⁶⁾	인터넷 언론사	방송사	
합계	50	139	593	115	200	8	1,105
1차	26	53	174	35	57	2	347
2차	8	29	199	30	64	1	331
3차	14	57	202	44	77	5	399
초청외	2	-	18	6	2	-	28

11. 토론회장 설비 및 안전관리

가. 토론회장 설비

토론회장 등의 설비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조건과 형태의 설비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다. 세트는 사회자와 후보자가 마주 보는 형태를 기본 구조로 하고 어느 각도에서 비추어도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도록 설비하였다.

46)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뉴스핌, GNN뉴스통신 등

초청 1~3차 후보자토론회는 입식 형태로 방송사 소속 세트 감독들과 협의를 통해 후보자가 참고자료를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상판의 크기를 고려하여 연단(가로 650mm×세로 500mm×높이 900mm)을 제작해 설비하였다. 또한 장시간 서 있는 후보자들의 다리 움직임 등이 TV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연단의 하단부 재질은 모두 불투명한 소재로 제작하였으며 각 연단의 앞부분에는 소속 정당의 색상을 전기 효과 등을 통해 표출하여 특색을 주었다.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가 토론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좌식 형태로 테이블과 의자를 설비하였다.

〈그림 3-25〉 후보자토론회 스튜디오 설비 현황



초청 1차(SBS 상암 공개홀)



초청 2차(KBS TS-4 스튜디오)



초청 3차(MBC 상암 D공개홀)



초청 외(SBS 상암 공개홀)

후보자의 배경은 후보별로 차이가 없도록 하고 대부분 무채색 계열의 배경에 연한 무늬 등을 추가하여 화면상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느낌을 주었다. 이와 반대로 사회자는 화면에서 안정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 비교적 어두운 색상으로 배경을 장식하였다.

토론회 중앙 원형 구조물은 토론회명(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징물(Corporate Identity, C.I) 등을 넣어 제작하였고 기관명·토론회명이 노출될 수 있는 다양한 별도 구조물을 제작하여 토론회장 곳곳에

배치하였다. 이외에도 토론회를 홍보하기 위한 머그컵을 제작하여 후보자 및 사회자가 사용할 때 수시로 노출되도록 하는 등 유권자가 토론회를 시청하면서 주관 기관명, 토론회명을 언제든지 인지할 수 있도록 장치하였다.

〈그림 3-26〉 후보자토론회 구조물 및 소품 활용 현황



무대 중앙 원형 구조물



주관 기관 구조물



LED를 통한 선거명 표출



머그컵 활용

사회자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프롬프트를 활용하였고, 후보자와 사회자 전담 카메라 각 1대, 지미집(Jimmy Jib), 좌·우측 풀샷용 카메라, 수어통역사 전용 카메라 등 총 9~10대 정도의 카메라가 활용되었다. 또한 화면 구성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로 레일카메라(Rail Cam)를 활용해 기존보다 다양한 화면을 연출하였다.

후보자의 발언시간 모니터는 각 후보자 전면 바닥에 설치하고, 여분의 받침을 준비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도권토론의 필수규칙 중 하나인 ‘답변 시간 30초 보장’을 관리할 수 있는 별도 모니터를 좌·우측에 각각 배치하여 후보자들이 어느 자리에서도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모든 후보자의 발언시간이 보이는 사회자용 모니터는 사회자의 테이블 안쪽으로 매립하거나 전면 바닥에 설치하였다. 또한 발언시간 계측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토론회시간관리시스템 담당 전문인력을 2명씩

배치하여 운용하였다. 토론시간관리시스템과 수어통역세트는 스튜디오 내부 별도 공간에 배치하였다.

이와 같은 토론회장 설비는 개최 당일 17시부터(초청외는 19시부터) 세트 감독 입회하에 약 20분간 후보자 측에 공개하여 연단(좌석), 타이머 등 설비를 사전 점검하였고, 일부 후보자 측의 요청에 따라 조명 및 음향 장비 등에 대한 간단한 조정이 이루어졌다.

〈그림 3-27〉 후보자토론회 관련 설비 현황



카메라 등 장비



토론시간관리시스템



발언시간 관리 모니터



수어통역 세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방송 3사와 적극 협력하여 토론회장이 있는 스튜디오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후보자별 개별 대기실과 위원모니터실 등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분장실과 전문 분장사 등을 배치하여 후보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분장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방송사에 따라 일부 대기실의 크기 등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후보 측에 사전에 안내하고 추첨에 따라 배정하였다. 부수적으로는 경호 및 폭발물 등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청 종합상황실도 방송사 협조를 통해 설비하였다.

나.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토론회 중 완벽한 후보자의 안전관리 및 현장 질서유지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합동회의 개최를 통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스튜디오 내·외부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엄격하게 실시함으로써 상황별 대응체제를 마련하였다.

먼저 정당 관계자 및 후보자, 언론사, 토론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제한된 수의 출입자 등록 신청을 받아 방송사 출입카드 및 차량출입비표를 발급하고 방송사 안전관리팀과의 협조를 통해 출입통제체제를 구축하여 관리하였다. 기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스피드게이트 등을 임차하고 안전관리요원을 고용했던 방식 대신 방송사 스피드게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송사 출입용 카드를 제작하고 방송사 안전관리요원 및 경찰청 경비인력 협조를 통해 스피드게이트 설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용역 비용을 절감하였다. 또한 후보자 측 출입 인원을 후보자와 근접 경호 인력(경찰청 소속)을 제외한 스피드게이트 전용 5명, 스피드게이트 및 보안검색대 통과 5명으로 사전에 제한하고 해당 인원에게 맞춰 출입카드를 배부하였다.

경찰청에서는 스튜디오 내부로 진입하는 입구에 보안검색대를 설치·운용하였다. 서울시경찰청에서는 보안검색대 운영에 앞서 후보자 동선을 예측하고 전담 인력을 통해 방송사 외곽부터 방송사 내부까지 탐지전 및 전문장비를 동원하여 폭발물 등을 조사하였고, 차수별 후보자토론회 진행 전(스튜디오 사전 공개가 끝난 시점, 초청: 17:30 / 초청외: 19:30)에 스튜디오 내부 시설에 대한 안전검측을 30분 정도 실시하였다. 경찰청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마포구·영등포구경찰서에서 본격적으로 보안검색대를 운용하였는데, 후보자와 근접 경호 인력을 제외한 모든 출입자에 대해 소지품 및 전신을 철저하게 검색하였다.

방송사의 출입구를 분리하여 일반인 출입구를 별도로 지정하고 기존 정문을 토론회 관계자 전용 출입구로 하여 방송사의 안전관리요원과 경찰이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질서를 유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출입카드 없이도 방송사 로비에 설치된 기자석에 들어올 수 있었기에 일부 극성 지지자 및 유튜버가 입장하려는 시도가 있어, 건물 출입구에서 언론사의 명함이나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확인하여 기자석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기존과 달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리 종합상황실’을 각 방송사 로비에 설치하여 현장에서 관계기관과 즉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출입 통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후보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림 3-28〉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장 출입 통제 현황



안전관리 종합상황실(토론회)



스피드게이트 운용(토론회, 방송사, 경찰서)



안전 검측(경찰청)



보안검색대 운용(경찰서)

방송사 외곽의 안전관리 및 현장 질서유지 역시 엄격하게 관리하였다. 지지자들의 운집이 예상돼 중계주관방송사 주변에 지정된 선거운동 구역에는 사전 안내를 통해 연설·대담차량 1대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였고, 지지자 간 충돌을 대비해 일정 간격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여 배치하였다. 또한 방송사 주변으로 각종 단체·지지자·유튜버 등의 집회신고가 다수 중첩되어 있어 마포구·영등포구경찰서에서 바리케이트, 펜스, 차벽 등을 활용하여 통제선을 구축하고 주변 교통량을 조정하고 후보자의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방송사별 주변 상황에 맞춰 현장 대응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마포구·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중계주관방송사 주변에 현장 단속반을 배치하고 불법선거운동행위 발생 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운동 또한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였다. 이외에도 소방 당국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 마포구·영등포구소방서에서 화재 등 응급상황 대처하기 위한 구급차와 소방차를 비상 대기하였고, 사전에 전기 안전 검측을 실시하는 등 토론회장 내·외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출입 명단 외 인원에는 대해서는 일일이 명단 확인 후 퇴장하도록 조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되었고, 일부 후보자가 방송사를 통하여 동선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른 후보자에게도 즉시 동일한 출입 방법을 안내하여 후보자 측에서 출입방법을 선택하여 입장하도록 재안내하여야 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토론회 생방송 종료 후 토론회와 별개로 방송사와 기자들이 자체적으로 별도 진행하는 백브리핑 과정에서 후보자의 위치 및 동선, 경호 문제 등 일부 미흡한 조치에 대한 후보자측의 항의가 위원회에 집중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그림 3-29〉 후보자토론회 외부 선거운동 구역 질서유지 현황



초청1차(SBS)



초청2차(KBS)



초청3차(MBC)



초청3차(MBC)

12. 토론회 진행

후보자토론회 생방송 직전 사회자가 후보자에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회 시간 운용과 카메라 응시 방법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안내하였다. 제작진의 안내 하에 음향 및 카메라 등을 맞춰보고 사회자와보자가 오프닝부터 시작발언 부분까지 진행하는 최종 리허설을 마친 후 토론회 생방송을 시작하였다. 후보자토론회는 토론진행표(Cue-Sheet) 및 대본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방송화면은 중계주관방송사(KBS·MBC·SBS) 관계자와 방송제작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 협의한 대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범위에서 구성하였다. 사회자에게 사전 면담 등으로 안내한 ‘상황별 사회자 멘트 예시’ 등 자료를 제공하여 토론회 진행 중 발생 가능한 돌발상황에 대비하였으나, 후보자들이 차수별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진행표에 맞춰 발언시간을 준수하고 사회자의 진행에 협조하였기에 후보자토론회는 정책토론회와 달리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없이 마칠 수 있었다.

가.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진행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대상 총 3회의 후보자토론회는 모두 동일하게 진행방식을 구성하여 차수가 지남에 따라 후보자들이 토론회 방식에 적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롭게 도입한 ‘공약검증토론’도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 ‘공약발표’ 시 판넬 등 참고자료 사용이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였으나 이를 활용한 후보자는 없었다. ‘시간총량제토론’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면서 시간을 양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첫 토론회인 만큼 팽팽한 긴장감 속에 개최한 초청 1차 경제분야 후보자토론회는 첫 번째 ‘시간총량제토론’에서 일부 후보가 토론회 진행방식을 혼동하거나, 주제와 맞지 않는 계엄 등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여 사회자가 주제와 진행방식을 다시 안내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을 주제로 한 ‘공약검증토론’에서는 권영국 후보자가 미리 준비한 소품(명함 크기의 빨간색 종이, 레드카드)을 이용하여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퍼포먼스도 이루어졌다. 특히 ‘공약발표’ 이후 이어지는 ‘주도권토론’에서 후보들의 토론이 뜨겁게 진행되면서 ‘2명 이상의 후보자와 토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토론이 종료되거나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제지에도 계속 발언하여 사회자가 개입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3-30〉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 진행(SBS)



사회 분야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는 사회 갈등과 국론 분열의 원인에 대해 각 후보자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또다시 비상계엄, 후보자의 과거 발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내용으로 토론이 흘러가자 현장에서 모니터링하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들이 사무국장을 통해 주제에 맞는 토론이 진행되도록 사회자가 개입할 것을 주문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토론회 종료 후 일부 정당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여 특정 후보자의 마무리발언 시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로 선거운동 방해 목적의 선거개입이 아닌지 선거법 위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확인 결과 생방송 중 사회자의 ‘목 가다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방송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상황이 일단락되었다.

〈그림 3-31〉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진행(KBS)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마지막 시간이었으므로 언론사의 취재 열기 및 방송사를 둘러싼 지지자 등의 선거운동 분위기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정치 개혁과 개헌 문제, 권력기관 개편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특히나 후보자 서로를 향한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지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때와 같이 위원회의 지시로 사회자가 개입하여 후보자들에게 주제 범위 안에서 토론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특이사항으로는 스튜디오에 잔류를 허용한 후보자의 근접 경호원 1명이 토론회 진행 중 넘어지며 난 ‘쿵’ 소리가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경호원의 휴대폰 벨소리가 울리는 등의 사고도 있었다. 특히,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녀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2회의 성(性) 관련 발언을 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시정하기 불편했다는 다수의 항의성 민원이 토론회 종료 후에도 수일간 이어졌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산하기관인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특정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공문을 송부(6. 12.)하기도 하였다.

〈그림 3-32〉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진행(MBC)



나.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진행

토론회 개최 전일인 5월 18일(일) 기호 6번 구주와 후보자(자유통일당)가 사퇴함에 따라 토론회 진행방식이 양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5. 10. ~ 5. 11.)이 끝남과 동시에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대상 후보자가 3명임을 확인하고 긴급히 제6차 위원회의(5. 12.)에서 2명의 양자토론 방식과 1명의 대담 방식을 추가 결정하고 공표하였다. 또한 양자토론이나 대담이 될 경우에 모든 후보자에게 동등한 발언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었고, 방송사도 2명 내지 1명의 후보자에게 120분의 방송 시간을 온전히 편성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었으므로 참석 후보자 수에 따라 시작시간은 동일하되 종료시간을 일부 단축하면서 토론주제 수를 늘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은 후보자의 사퇴 상황 발생 즉시 방송사 및 후보자에게 이러한 변경사항을 안내하였는데, 토론회 시간 단축에 대한 후보자 측의 항의를 우려하였으나 위원회의 의결(5. 12.) 직후 개최한 설명회(5. 14.)에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였기에 모든 후보자 측에서 무리 없이 수용하였다. 해당 내용은 모든 중계방송사에도 공유하여 후보자 수에 따라 대체 편성이 필요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혼란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의 진행을 맡은 사회자에게도 후보자등록마감일 이전에 10명 이상의 다수가 참석하는 토론회 진행방식을 사전안내한 데에 이어 후보자등록마감일 이후에는 토론회 참석 후보자수가 1명인 경우부터 3명인 경우까지의 모든 진행방식을 추가로 안내하였고, 토론진행표와 대본 역시 토론회 참석 후보자수별로 사전에 준비하였다. 더 이상의 추가 사퇴나 불참 없이 2명의 후보자가 참석한 초청의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들이 토론주제와 진행방식을 정확히 인지하고 발언할 내용을 준비하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사건·사고 없이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림 3-33〉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진행(SBS)



13.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가.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중계방송에 수어통역 및 자막방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방송 3사와 협의를 통해 수어통역사의 표출화면을 비교적 넓은 ‘둥근 사각형’ 형태로 조정하고 크기를 일부 확대하였으며, 방송사마다 차이가 있던 크로마키⁴⁷⁾(Chroma-Key) 화면을 회색 계통으로 통일하여 표출하였다. 수어통역사는 해당 중계주관방송사 뉴스 등에서 수어통역을 담당하는 전문 수어통역사들을 섭외하였다. 수어통역사의 피로도 및 수어통역의 품질 등을 고려하여 모든 후보자토론회에서 1시간씩 교대하는 방식으로 총 2명의 수어통역사가 투입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각 중계주관방송사에 요청하여 방송 3사가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폐쇄)자막⁴⁸⁾방송에 부수적으로 후보자들이 발언할 때마다 후보자의 ‘성명’을 표출하거나 백색과 황색 등 자막의 색상을 달리하여 발언하는 후보자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게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토론회 종료 후 방송사로부터 속기록을 전달받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의 ‘토론회 다시보기’에 토론회 전문을 함께 게시함으로써 언제든지 누구라도 토론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34〉 후보자토론회 수어통역 등 실시 현황



안규순 수어통역사



황준호 수어통역사



속기록 전문 게시

47) 한 가지 색상(chroma)을 선택(key)해서 투명하게 만든 후, 그 자리에 다른 이미지를 넣어 합성하는 기술로서 대부분 초록색이나 파란색을 사용함.

48) 영상 신호의 빈 공간에 자막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영상과 별도로 자막을 전송하므로 시청자가 조작하여 자막을 켜거나 끌 수 있음.

나. 일대일 수어통역방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2년도부터 국내 유일의 장애인복지채널인 복지TV⁴⁹⁾와 협업하여 후보자(토론자)별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을 확대·실시하고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지난 대선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토론회에만 실시하던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을 초청외 후보자토론회까지 확대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일대일 수어통역 방송’ 영상은 복지TV 채널에서 생중계하고, 생중계 종료 후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에서 영상 파일을 납품받아 ‘토론회 다시보기’ 서비스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청 편의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에 투입되는 수어통역사는 복지TV에서 수어통역사협회 등을 통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수어통역사를 섭외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 전 모든 수어통역사가 한 자리에 모여 추첨을 통해 통역할 후보자 등을 결정한다. 또한 해당 방송에는 전문 속기사도 투입해 토론회에서 나오는 모든 발언을 실시간 자막 형태로 방송화면에 함께 합성하여 송출하고 있어 청각장애인 유권자의 시청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후보자토론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TV의 ‘일대일 수어통역방송’을 홍보하였으며, 실제 토론회에서도 사회자의 오프닝 멘트 등으로 복지TV의 ‘일대일 수어통역방송’ 시청을 안내하는 등 다각도로 홍보하였다.

〈그림 3-35〉 후보자토론회 복지TV 일대일 수어통역방송 현황



49) 복지TV[주희망복지방송]: 방송통신위원회 승인 장애인복지채널, Btv·지니TV·U+TV 199번, KT스카이라이프 188번 등

14. 시청률 등 현황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Nielsen Korea)의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방송 3사(KBS·MBC·SBS)를 비롯하여 종합편성채널(TV조선, JTBC, 채널A, MBN)과 보도전문편성채널(YTN, 연합뉴스TV)의 9개 채널에서 동시 생중계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초청 대상) 전국 기준 합계시청률의 평균은 22.7%로 나타났다.⁵⁰⁾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의 시청률은 약 4%에 머물렀다.

〈표 3-48〉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구 분	공영방송·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편성채널			계
	KBS1	MBC	SBS	소계	TV 조선	JTBC	채널A	MBN	소계	YTN	연합뉴스	소계	
1차	3.5	7.2	4.2	14.9	1.8	-	1.2	1.7	4.7	2.0	1.3	3.3	22.9
2차	4.4	5.5	2.7	12.6	1.7	1.8	1.3	1.0	5.8	1.9	1.5	3.4	21.8
3차	5.5	6.4	2.3	14.2	1.8	1.6	1.3	1.6	6.3	1.5	1.5	3	23.5
초청외	2.3	0.6	0.8	3.7	-	-	-	-	-	-	-	-	3.7

〈표 3-49〉 역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현황

(단위: %)

구 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외	중계방송사
제15대(1997)	55.1	59.6	4.7	28.7	방송 3사
제16대(2002)	38.5	36.7	36.4	8.3	
제17대(2007)	27.0	23.5	21.5	5.6	KBS, MBC
제18대(2012)	42.6	44.4	35.9	6.8	방송 3사 및 종편 등
제19대(2017)	38.5	31.2	36.0	5.5	
제20대(2022)	34.3	33.0	33.2	4.0	
제21대(2025)	22.9	21.8	23.5	3.7	

50) 방송 3사의 시청률 집계 기준(전국 3,134가구 표본)과 종편 및 보도전문채널의 집계 기준(유료방송가구)이 다르므로 해당 수치는 단순 합산한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역대 후보자토론회의 합계시청률과 비교하였을 때에 시청률 자체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TV 시청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유튜브와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매체로의 이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표 3-50〉 후보자토론회 유튜브 조회수 현황(다시보기 포함)⁵¹⁾

(기준일: 2025. 6. 11., 단위: 회)

구분	초청 1차	초청 2차	초청 3차	초청외	총계
합계	5,179,327	3,450,666	2,796,893	264,748	11,691,634
중앙토론회	103,477	9,045	10,869	13,336	136,727
중앙토론회 (수어통역)	3,479	895	744	1,510	6,628
중앙선관위	23,639	36,188	40,041	2,583	102,451
KBS (뉴스)	201,815	252,714	130,786	79,370	664,685
KBS (선거방송)	12,939	33,787	10,400	3,553	60,679
MBC	2,293,440	640,983	36,838	76,989	3,048,250
SBS	303,902	747,853	512,909	64,089	1,628,753
TV조선	220,282	225,333	89,450	-	535,065
JTBC	993,926	101,652	456,919	23,318	1,575,815
채널A	27,427	61,593	46,921	-	135,941
MBN	43,632	10,937	8,211	-	62,780
YTN	80,931	26,674	23,816	-	131,421
연합뉴스TV	33,695	17,660	39,720	-	91,075
OBS	1,433	1,319	39,720	-	42,472
팬앤마이크	-	-	87,844	-	87,844
시사IN	-	558,471	294,751	-	853,222
오마이뉴스	316,088	79,704	210,088	-	605,880
더불어민주당	343,551	503,707	614,931	-	1,462,189
국민의힘	141,781	125,543	113,675	-	380,999
개혁신당	33,890	16,608	28,260	-	78,758

51) 지난 2022년과 달리 방송 3사가 다른 방송사나 후보자 측의 유튜브 중계방송을 허용함.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제04장

선거방송토론 연구·평가 등

제1절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 개발 연구
제2절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제3절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제1절

후보자토론회 토론회제 개발 연구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공약을 심층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토론회제 개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과거 대통령선거에 있어 본 용역의 경험이 있는 한국정당학회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25년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우리나라의 정치·외교·통상·안보·통일, 경제와 민생, 사회·복지, 교육·문화, 환경 등 포괄적인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전공자 및 연구자들이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표 4-1〉 토론회제 개발 연구 참여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단 명단

구분	분야	성명	소속
참여 연구진	정치·외교	김성조	연세대 동아시아 국제학부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경제	우병득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사회	정다빈	충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이선우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전문가 자문단	경제	남충현	한국은행
	사회	김윤영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축박한 선거 일정에 맞춰 진행된 이번 연구는 학회 소속 연구진들이 엄선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엄정한 자문과 신중한 토의를 거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적절한 인원의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였고,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성별, 연령, 활동지역 등이 편향되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회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하에 주요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정리하여 후보자토론회 진행에 필요한 정책 분야별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한국정당학회는 1) 당대 현안에 대한 후보의 총체적 평가, 2) 정책 중심성, 3) 미래지향성 등을 의제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첫째, 후보자가 단순히 공약만을 통해 각론 차원의 문제해결 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비전 및 당대 사회 현안을 바라보는 거시적 태도 등을 나타내도록 하여 유권자가 후보자를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의제 선정에 집중했다. 대통령은 행정부 운영을 책임져야 하므로 유권자가 후보자의 비전, 시대적 흐름 및 시대정신에 대한 철학과 세계관,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기조, 당대 현안에 대한 거시적 방향성을 확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후보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둘째, 정책중심의 실질적인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여느 선거 이상으로 네거티브 선거운동으로 인한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므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적 입장에 대한 엄정하고도 전문적인 검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선거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 정당 및 정치 세력들은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한 공약 리스트조차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는 자칫 유권자들이 정책에 기반하여 투표하기가 기존의 어떤 선거보다도 더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러므로 후보자들이 남은 선거기간 동안에 치열하게 공약을 발표하고 정책을 토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유권자들이 이에 기반하여 후보자들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제 선정이 필수적이었다.

셋째, 한국 사회의 변화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하고자 했다. 각 후보자들이 당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는지, 변화하는 내·외부의 환경 및 구조적 변화들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책 및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을 통합하고 함께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지 등에 관해 유권자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을 통해 안보, 경제, 민생, 복지, 사회, 교육, 과학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미래지향성을 기준으로 하여 토론의제를 선정하였다.

전문가 협의 과정은 1차로 각 정책 분야의 토론 의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였다. 토론 의제는 토론의 전체적인 구성을 계획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질문을 작성하기에 앞서 각 정책 분야별로 핵심적인 내용과 쟁점들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토론 의제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통계 수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해당 토론 의제가 논의되어야 하는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토론 의제의 선정 이유 및 쟁점을 정리한 결과에 토대를 두어 후보자토론회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토론 의제와 관련하여 제시할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한 예시를 기술하였다.

2. 주요 결과

가. 경제분야

〈표 4-2〉 경제분야(고용·노동·연금) 토론의제 개발 현황

고용·노동·연금		
〈토론의제 1〉 연금개혁과 정년연장	(토론의도)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편 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질문내용)	Q.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층 일부에서는 기금 고갈로 인해서 향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 역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재원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또한 개혁 이후 국민연금의 문제점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토론회제 2〉 일자리와 노동 관련 정책	(토론의도)	일자리의 질, 청년 니트족, 비정규직 근무환경,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과 관련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질문내용)	Q.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3.1%를 기록하였으며 고용률은 69.3%를 기록했습니다. 타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적인 수치라고는 볼 수 없지만, 청년 니트족, 비정규직 근무환경,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수보다는 질을 중요시하는 구직자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일자리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 후보자분들께서는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표 4-3〉 경제분야(조세 및 부동산) 토론회제 개발 현황

조세 및 부동산		
〈토론회제 1〉 대미국 수출입과 관세정책	(토론의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시작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상호관세 정책이 실현되면서 글로벌 통상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대미국 관세정책과 수출입 정책에 대한 입장을 파악한다.
	(질문내용)	Q. 지난 4월 2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발표했습니다. 4월 22일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철강을 포함하여 대미국 수출이 두 자리수의 감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분들께서는 대미국 관세정책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나라가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우리나라 수출입 전략은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시는지요?
〈토론회제 2〉 부동산 및 조세정책	(토론의도)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대중들의 주거불안정은 심각하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한다.
	(질문내용)	Q.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접어들면서 자산불평등의 심화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을 통해서 통상적인 임금으로 내 집 마련을 달성할 수 없다는 탄식 역시 여전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주거안정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대한 후보님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표 4-4〉 경제분야(산업 및 에너지) 토론회 개발 현황

산업 및 에너지		
〈토론회제 1〉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등과 관련한 정책	(토론의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위기는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된다.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고자 한다.
	(질문내용)	Q. 우리나라 에너지 위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위기는 높은 대외의존도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전력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전력 소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후보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해당 에너지 발전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적 방향성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토론회제 2〉 AI·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항공우주 등 산업육성 지원 방안	(토론의도)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AI산업을 포함한 신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AI산업을 포함한 신산업에 대한 후보자들의 정책적 방향성과 지원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질문내용)	Q. 기술의 발전과 함께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의 다양한 국가들은 AI, 전기차,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며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의 AI산업과 신산업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포함한 신산업 분야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나가실 생각이신가요?

〈표 4-5〉 경제분야(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토론회제 개발 현황

민생경제 및 지역경제		
〈토론회제 1〉 물가상승과 민생안정	(토론의도)	물가상승은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일반 대중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본 질문을 통해 후보자들이 물가상승과 민생안정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질문내용)	Q. 민생안정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입니다. 민생경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였을 때, 서민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민생을 보다 적실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존재합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토론회제 2〉 지방·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의도)	수도권 인구집중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점차 중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후보자들의 생각을 들어 보고자 한다.
	(질문내용)	Q. 우리나라는 출생률 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험지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인구 편재와 경제성장을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지방·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과 방안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심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지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후보자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 사회분야

〈표 4-6〉 사회분야(사회통합) 토론회 개발 현황

사회통합		
〈토론회제 1〉 사회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	(토론의도)	사회 전반으로 심화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회·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과 함께 사회통합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성 파악
	(질문내용)	Q.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 소득, 주거, 교육 등 다차원적인 형태의 사회적 양극화가 계속하여 심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 지역 격차, 계층 간 이동의 어려움 등 국민통합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양극화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분들께서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심화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영역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토론회제 2〉 젠더 및 세대 갈등 완화 정책	(토론의도)	한국 사회의 다원화된 갈등과 분열 가운데 쟁점화되고 있는 젠더 및 세대 간 갈등을 후보자들의 인식을 검증
	(질문내용)	Q. 기존 한국 사회 내 존재하던 이념과 지역, 계층 갈등 외에 젠더 및 세대 등 다양한 사회 갈등 구조가 형성되며, 사회 전반적으로 분열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정치영역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혐오와 불신으로 확대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으로서 이와 같은 사회 갈등이 격화된 이유와 극복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회제 3〉 뉴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갈등 해소	(토론의도)	빠르게 변화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따라 확산하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후보자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고찰
	(질문내용)	Q. 최근 뉴미디어의 확산과 알고리즘 중심의 정보 소비 구조는 여론의 양극화, 혐오 표현의 확산, 허위정보의 반복 및 재생산 등 다양한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방식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뉴미디어 환경 변화가 우리 사회의 갈등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대응 방안과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표 4-7〉 사회분야(복지 및 여성) 토론회제 개발 현황

복지 및 여성		
〈토론회제 1〉 저출생 및 육아 정책	(토론회의도)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후보자들의 입장 및 정책 파악
	(질문내용)	Q. 2024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였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로 최하위인 동시에 생산연령인구 비율 역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방향성을 갖고 계십니까?
〈토론회제 2〉 통합돌봄지원 정책의 방향성	(토론회의도)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법의 시행에 있어서 후보자들의 명확한 향성 및 세부적인 정책 파악
	(질문내용)	Q. 전 국민의 생애 주기적 돌봄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4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분절되어있는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시범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운영 중이며, 이러한 돌봄 서비스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돌봄 정책에 있어서 후보자분들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 및 방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토론회제 3〉 고령화 관련 정책적 비전	(토론회의도)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노년층에 대한 후보자들의 태도와 정책적 비전 파악
	(질문내용)	Q. 올해부터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후보자의 비전과 핵심 정책은 무엇입니까?
〈토론회제 4〉 성평등 및 여성 의제	(토론회의도)	성평등과 여성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인식을 파악하고 여성 관련 정책적 계획 및 방안을 파악
	(질문내용)	Q.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시장 내 성별 임금 격차, 여성의 대표성 부재,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그리고 성폭력·스토킹 범죄 등 여성 관련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께서는 성평등 및 여성을 위한 국가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표 4-8〉 사회분야(환경 및 안전) 토론회제 개발 현황

환경 및 안전		
〈토론회제 1〉 기후변화 및 위기 대응 방안	(토론회도)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 방안과 정책적 비전 파악
	(질문내용)	Q.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4월 23일 UN 기후 정상회의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원자력, 청정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원의 비중을 현재 39%에서 2038년 7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정책에 있어서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토론회제 2〉 국가재난 및 안전관리	(토론회도)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와 국가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파악
	(질문내용)	Q. 세월호 참사를 비롯하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제주항공 참사 등 비극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사회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재난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정부가 실종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난의 상황에서 정부 및 대통령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국가 안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회제 3〉 의료 시스템 개혁 및 공공의료 강화	(토론회도)	무상 의료 정책 및 공공의료 확대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와 구체적인 비전 및 정책을 탐색
	(질문내용)	Q.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해 다양한 감염병과 재난을 겪으며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도시와 농어촌 간 의료 접근성의 격차, 민간의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의료 시스템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후보자분들께서는 무상 의료 또는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갖고 계시며,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 및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표 4-9〉 사회분야(교육 및 문화) 토론회제 개발 현황

교육 및 문화		
〈토론회제 1〉 대학입시 및 사교육 정책	(토론회의도)	현 대학입시 제도 및 사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정책 비전 파악
	(질문내용)	Q. 현재 대학 입시 제도는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내신 성적 위주의 전형 확대를 주장하는 측과 수능 중심 전형을 강화하자는 입장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께서는 현 대입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입제도의 개선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 및 대안은 무엇입니까?
〈토론회제 2〉 인문학 및 K-문화 예술 육성 및 지원 방안	(토론회의도)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파악과 문화예술계의 발전을 위한 비전 및 지원 방안 파악
	(질문내용)	Q. 2024년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은 모든 국민을 독서 열풍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문학을 경시하는 풍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분들께서는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고 계십니까? 이와 더불어 K-컬처로 대표되는 문화 예술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화예술산업 발전을 위해 어떠한 비전과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다. 정치분야

〈표 4-10〉 정치분야(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회제 개발 현황

미래비전 및 국정철학		
〈토론회제 1〉 국가 비전과 책임 있는 리더십	(토론의도)	후보의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인식과 국가 중장기 발전 구상 검증
	(질문내용)	<p>Q. 이번 대선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위기 이후 한국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데요. 후보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을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p> <p>Q. 국가 지도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복잡한 사회적 갈등과 다양한 위기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인성, 가치관, 리더십,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후보께서 생각하시기에 좋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 두 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p>
〈토론회제 2〉 정치갈등 해소와 협치 기반 국정운영	(토론의도)	후보자의 정치 갈등 인식과 실질적 협치 능력 검증
	(질문내용)	<p>Q. 현재 한국 사회는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간 불신으로 인해 국가적 현안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조차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후보께서는 이러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이 심화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무엇으로 진단하십니까? 이를 극복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에 기반한 국정 운영을 실현하기 위한 후보님의 구체적인 비전과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p>
〈토론회제 3〉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토론의도)	수도권 과밀화 및 지역 격차 해소에 대한 해결책을 검증
	(질문내용)	<p>Q. 후보께서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자치재정·자치행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지방분권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지방재정 자율권 확대, 자치입법권 강화, 광역·기초 단체 간 기능 재배분 등 지방분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구체적 단계와 자원 조달 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p> <p>Q. 행정수도 이전과 국회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 완성과 국회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p>

〈표 4-11〉 정치분야(정치개혁) 토론의제 개발 현황

정치개혁		
〈토론의제 1〉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혁신	(토론의도)	급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제도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
	(질문내용)	<p>Q. 대통령 4년 중임제·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관하여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제안하는 권력구조 모델은 무엇이며, 이 모델이 대통령-국회 갈등과 권력 집중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p> <p>Q. 과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여러 차례 시도되었으나 추진되지 못하거나 미완의 개혁으로 남은 바 있습니다. 개헌을 포함한 정치제도 개혁은 다양한 정치 세력의 저항을 극복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 전략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p>
〈토론의제 2〉 사법·검찰 독립과 법치주의 회복	(토론의도)	권력기관·헌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고 최근 심화된 권력기관 불신과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검증
	(질문내용)	<p>Q.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검찰을 포함한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수사와 재판 결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기소청 전환 등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 찬반이 첨예하게 나뉘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들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는 소위 ‘정치의 사법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후보께서는 현재의 검찰과 사법체계에서 어떤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된다면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어떤 개혁을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p>

〈표 4-12〉 정치분야(외교 및 대외전략) 토론의제 개발 현황

외교 및 대외전략		
〈토론의제 1〉 한국 외교의 기본 방향과 대미 관계	(토론의도)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함께,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거래적 접근으로 재편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안보 전략, 나아가 대중 외교의 균형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토론은 한국이 동맹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어떤 외교 전략과 협상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질문내용)	Q. 현재 국제질서는 미중 전략경쟁·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도 등 복합적인 위기와 변화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가치 동맹을 강화하였지만, 트럼프의 재등장과 함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국제정치구조의 급박한 변혁 속에 미국과의 관계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론의제 2〉 대 중국 외교 관련 쟁점	(토론의도)	한중 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기술 안보 강화 등 복합적 도전 속에서 전략적 시험대에 서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북한 문제, 역내 질서, 기후 대응 등 다양한 사안에서 협력과 긴장을 동시에 야기하는 주요 행위자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 디커플링 전략과 중국의 기술·경제 주권 강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은 난관에 직면하였다. 이번 토론은 한국 외교가 중국과의 협력과 긴장을 어떤 원칙 아래 조율해야 하는지, 공급망과 기술 경쟁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질문내용)	Q. 군사, 외교, 무역과 공급망 등 여러 영역에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실익을 추구하면서도 안보와 기술 영역에서는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드 사태 이후와 같은 경제적 압박이나 외교적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국의 전략적 이익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어떤 외교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론의제 3〉 대 일본 외교 관련 쟁점	(토론의도)	최근 한일 관계는 안보와 경제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의 이질성은 여전히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하여 제삼자 변제 방식 같은 정부 주도 해법이 추진되었지만, 이는 국내적으로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훼손이라는 비판도 동시에 받아왔다. 일본과의 실용적 협력과 원칙의 유지라는 딜레마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토론의 필요한 시점이다.
	(질문내용)	Q. 한일 관계는 그동안 정권에 따라 외교 기조가 크게 달라지며 협력과 갈등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 협력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도, 역사 문제와 국민 정서 등으로 인해 양국 관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런 외교적 불확실성 속에서 일본과의 실질적 협력을 이어가면서도, 한국의 입장과 원칙을 어떻게 유지하고 조율할 계획이신가요?

〈표 4-13〉 정치분야(안보·북한·통일) 토론의제 개발 현황

안보·북한·통일		
〈토론의제 1〉 대북 및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	(토론의도)	최근 북한은 핵전력 체계의 제도화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외교적·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북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단기적 억지력 중심의 접근과 장기적 평화체제 구축 간의 균형, 나아가 통일을 흡수나 점진이나의 시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선택은 향후 한반도 질서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이에 따라 한국은 안보·통일 정책 전반에서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일관된 원칙과 현실적 시나리오를 어떻게 병행할 수 있을지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질문내용)	Q. 북한과의 관계는 핵무장 고도화뿐 아니라 9.19 군사합의 파기 등 다양한 긴장 요인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안보를 최우선에 두되, 접경 지역의 안전과 남북 간 최소한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한국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억지와 대화, 규제와 유연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토론의제 2〉 경제안보 실현 방향	(토론의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안보의 부상이 경제안보를 주요 외교 이슈로 끌어올리면서, 한국은 기술, 안보, 외교가 결합된 복합적 전략 수립을 요구받고 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미국 중심의 연대 전략, 중국과의 경제 의존 사이에서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이에 따라 본 토론은 한국이 경제안보 시대에 전략기술 보호, 공급망 안정, 외교 유연성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질문내용)	Q. 첨단 전략기술 분야에서 한국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조율할 필요도 존재합니다. 외교적으로는 미국 중심의 기술 연대에 참여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술 독립성과 공급망 안정성, 외교적 자율성 간의 긴장을 조율하기 위한 현실적 해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제2절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역할 및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다. 이전 선거에서도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 경험이 있는 한국정치학회에 연구를 의뢰하였고, 충남대학교 박영득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여 총 4명의 연구진이 본 용역에 참여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는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되었고, 후보자토론회의 다각적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 인지적 측면, 효과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빈도분석, 상관관계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4-14〉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설문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조사방법	• 온라인 웹패널조사(Web Panel Survey): 동일 대상에게 후보자토론회 개최 시점을 전후로 설문조사 진행
조사기간 ⁵²⁾	• 사전조사: 2025. 5. 15. ~ 5. 17. (3일간) • 사후조사: 2025. 6.4. ~ 6.9. (6일간)
표본크기	• 사전조사: 총 1,550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 사후조사: 총 1,233명 조사 후 지역/성/연령별 사후보정 • 패널유지율: 79.5%
표본오차	• 사전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5%p • 사후조사: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2.8%p
가중치 부여 방식	• 인구비(성/연령/지역)에 따른 사후 가중치 부여 (2025년 4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조사기관	• (주)엠브레인퍼블릭

※ 출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주제 및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고, 인식에 관해서는 관심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도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에 대해서는 후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치관심도 및 참여에 미친 효과, 후보자 선택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였다. 주요 결과를 도표를 중심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52) 사전조사: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 실시, 사후조사: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실시

가. 후보자토론회 제도 평가

1)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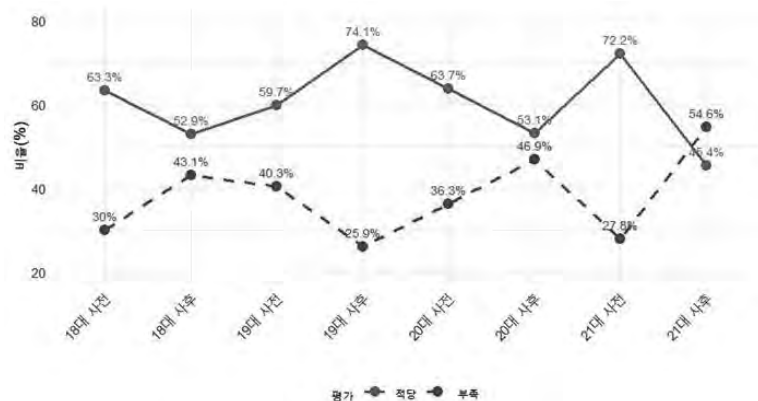
〈표 4-15〉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필요성)

구 분	사전설문조사(%)	사후설문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66.5	63.3
어느 정도 필요하다	31.2	32.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	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0.4	0.7

〈표 4-16〉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개최 횟수의 적정성)

구 분	사전설문조사(%)	사후설문조사(%)
적당하다/충분했다	72.2	45.4
부족했다	27.8	5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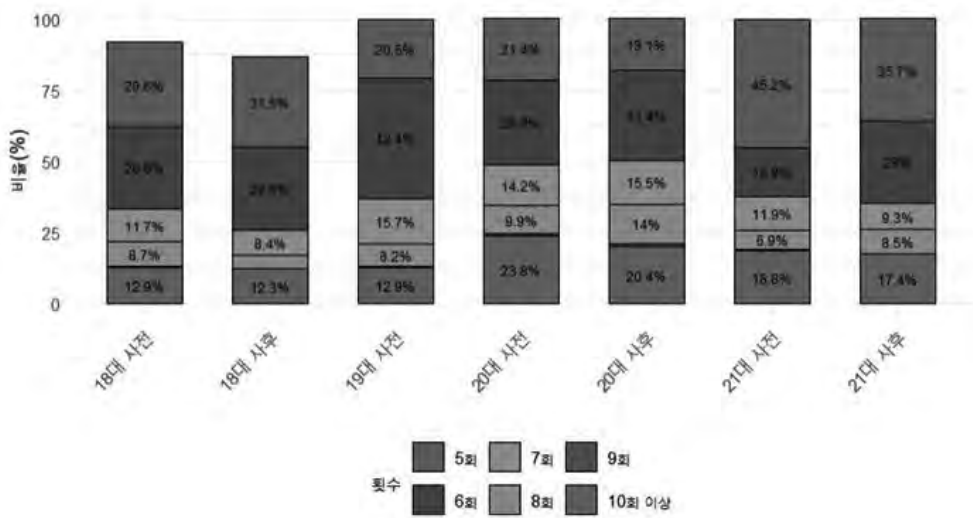
〈그림 4-1〉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개최 횟수의 적정성 추이)



〈표 4-17〉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적정 개최 횟수)

구 분	사전설문조사(%)	사후설문조사(%)
5회	45.2	35.7
6회	16.9	29.0
7회	11.9	9.3
8회	6.9	8.5
9회	0.3	0.2
10회 이상	18.8	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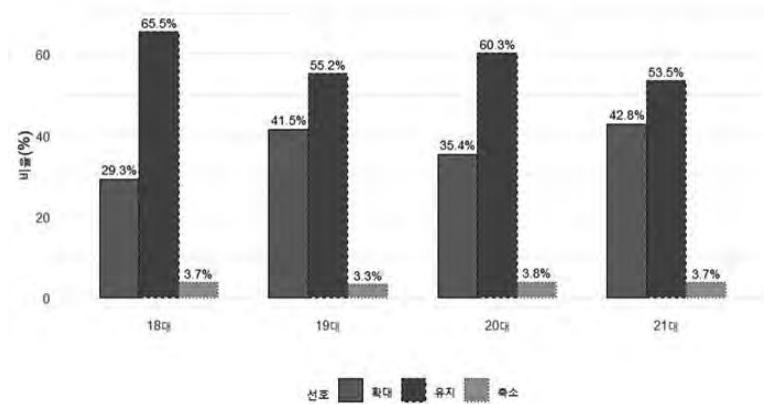
〈그림 4-2〉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적정 개최 횟수에 대한 인식 추이)



〈표 4-18〉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사후설문조사 결과(토론시간의 적절성)

구 분	응답비율(%)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42.8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53.5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3.7

〈그림 4-3〉 후보자토론회 제도평가 설문조사 응답비율(토론 진행 시간에 대한 선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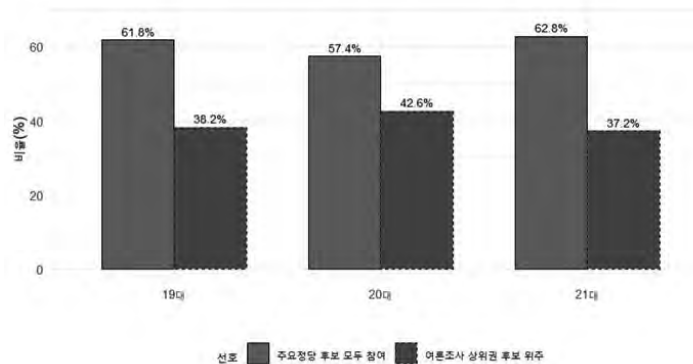


2)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표 4-19〉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사후설문조사 결과(참여 후보 범위에 대한 선호도)

구 분	응답비율(%)
주요 정당 후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	62.8
여론조사 상위 1위와 2위 후보 위주의 토론회	37.2

〈그림 4-4〉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설문조사 결과(초청 범위에 대한 선호 추이)



〈표 4-20〉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사후설문조사 결과(구성에 대한 만족도)

구 분	응답비율(%)
매우 만족한다	2.1
어느 정도 만족한다	31.9
보통이다	44.0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	17.7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3

〈표 4-21〉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사후설문조사 결과(진행방식에 대한 선호도)

구 분	응답비율(%)
공약검증토론	40.3
유권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16.2
시간총량제토론	14.2
전문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11.5
후보가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 방식	9.3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8.2
기타 ⁵³⁾	0.4

3) 후보자토론회 주제

〈표 4-22〉 후보자토론회 주제 사후설문조사 결과(토론주제 개수의 적절성)

구 분	응답비율(%)
너무 적었다	55.3
충분했다	39.5
너무 많았다	5.2

53) 구체적인 토론 방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진행에 있어서 시간제한이 없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있었으며, 전문가 및 유권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 등 문항으로 제시된 다양한 방식들을 모두 혼합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4-23〉 후보자토론회 주제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분야별 토론주제의 적절성)

(단위: %)

구분		매우 적절했다	어느 정도 적절했다	별로 적절하지 않았다	전혀 적절하지 않았다
경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25.8	52.8	16.1	5.3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20.8	46.6	24.5	8.1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27.9	47.5	17.9	6.7
사회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30.0	42.9	18.9	8.2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28.6	42.9	21.3	7.2
	기후 위기 대응 방안	18.6	45.0	36.0	10.4
정치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26.2	39.6	22.5	11.7
	정치 개혁과 개헌	24.4	41.3	23.6	10.7
	외교·안보 정책	31.0	43.2	18.8	7.0

〈표 4-24〉 후보자토론회 주제 사후설문조사 결과(논의되지 않아 아쉬운 주제)

구분	응답비율(%)
후보에 대한 검증(도덕성, 자격, 범죄 등)	22.4
사회 갈등 및 여성 정책(사회갈등, 젠더, 차별, 여성 등)	16.1
안보 및 내란	14.3
고령화 및 복지(고령화, 복지, 연금, 저출산 등)	13.0
경제 및 부동산 정책	11.2
교육 문제	8.7
권력구조 개편 및 사법개혁	6.2
청년 문제 및 일자리	5.0
지역균형발전	3.1

나. 후보자토론회 현실 평가⁵⁴⁾

〈표 4-25〉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관심도 비교) (단위: %)

구 분	제19대 대선	제20대 대선	제21대 대선
많은 관심을 갖고 보았다	56.6	50.9	46.13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보았다	36.8	37.3	44.42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가끔 보았다	4.9	9.3	8.09
특별한 관심 없이 지나치며 보았다	1.8	2.8	1.35

〈표 4-26〉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유용성) (단위: %)

구 분	후보 자질 비교	정책 공약 비교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비교
매우 도움이 되었다	30.65	19.68	25.11
약간 도움이 되었다	44.85	43.77	42.46
그저 그렇다	16.91	23.74	22.1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6.51	9.93	8.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8	2.89	1.9

〈표 4-27〉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응답비율(공정성 비교) (단위: %)

구 분	제19대 대선	제20대 대선	제21대 대선
매우 그렇다	22.5	16.2	5.19
그런 편이다	55.9	54.6	63.3
별로 그렇지 않다	17.1	23.8	26.61
전혀 그렇지 않다	3.2	5.0	4.9

54) 후보자토론회의 효과성과 신뢰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파악

〈표 4-28〉 후보자토론회 현실평가 사후설문조사 결과(흥미도 비교)

(단위: %)

구 분	제19대 대선	제20대 대선	제21대 대선
매우 그렇다	24.4	15.8	4.63
그런 편이다	50.7	48.4	46.11
별로 그렇지 않다	21.3	29.4	39.81
전혀 그렇지 않다	2.4	6.1	9.44

다.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1) 시청 집단 분석

〈표 4-29〉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결과(시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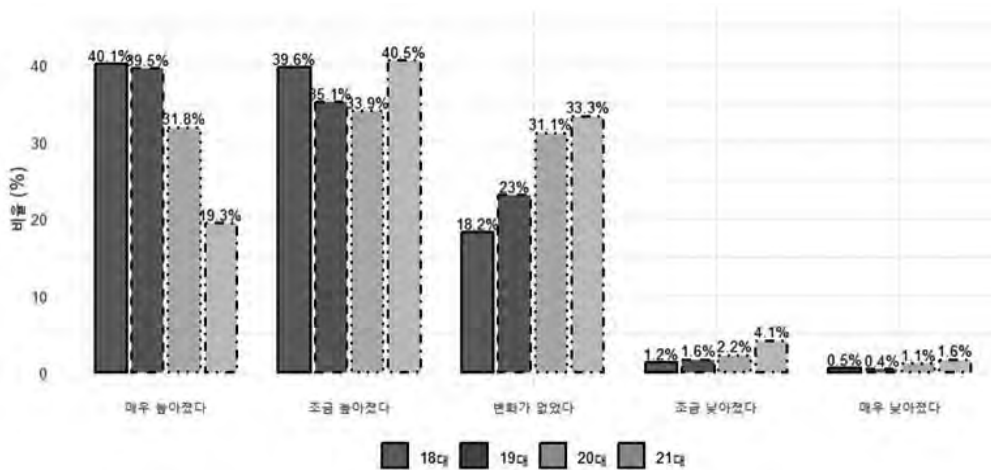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비율(%)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있다	1,115	90.4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적이 없다	118	9.6
합 계	1,233	100.00

〈표 4-30〉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결과(시청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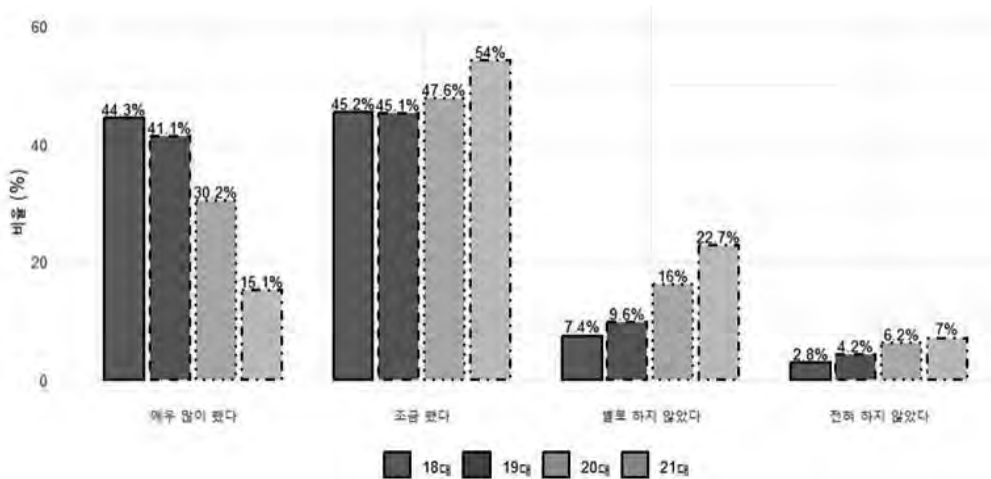
구 분	빈도(명)	비율(%)
1회	238	21.4
2회	248	22.3
3회	435	39.0
4회	193	17.3
합 계	1,114	100.00

2) 심리·인지적 효과

〈그림 4-5〉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대한 관심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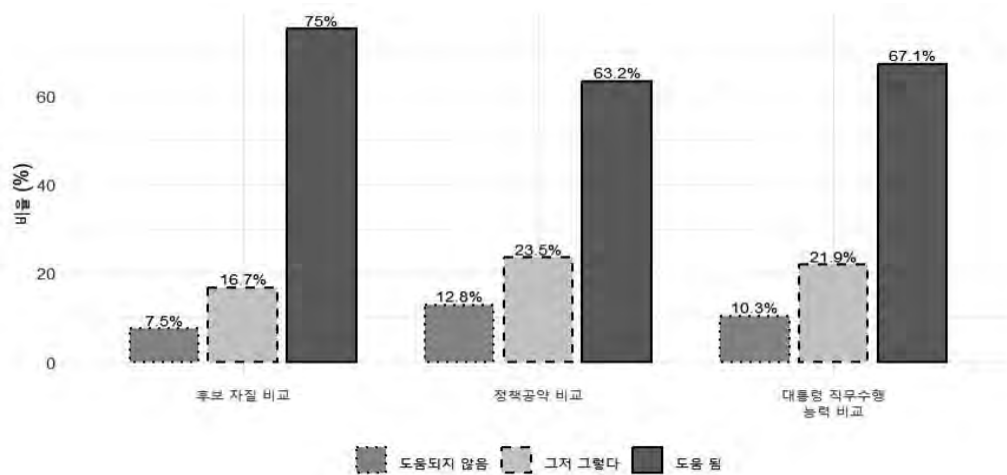


〈그림 4-6〉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주변 사람들과의 선거 관련 대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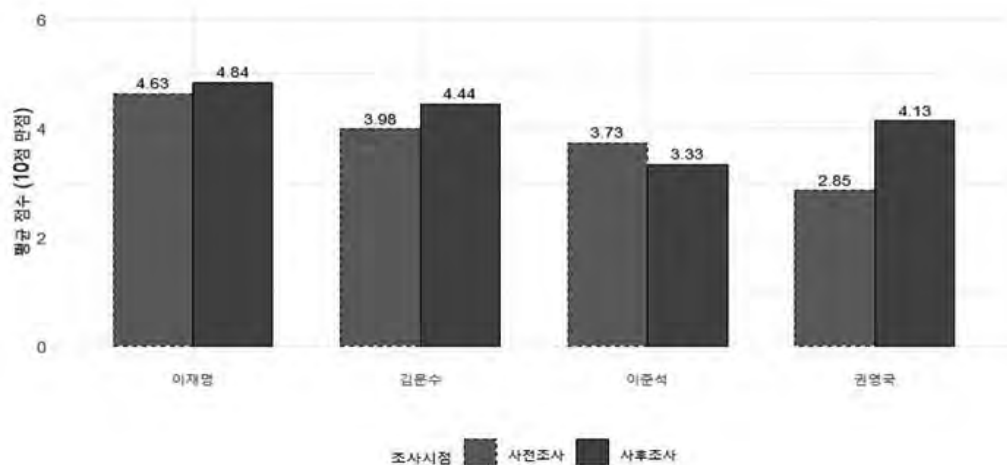
3) 후보자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능력 평가

〈그림 4-7〉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의 자질, 정책공약, 정책수행능력 비교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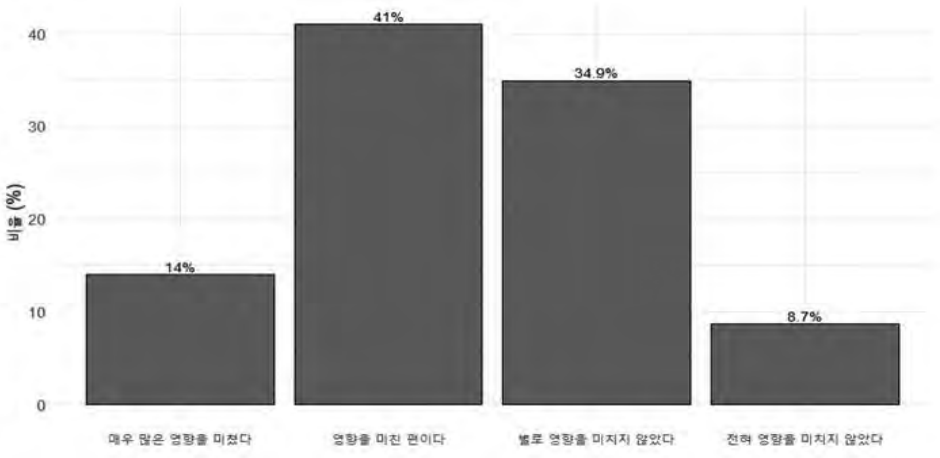
4) 태도 효과: 후보자 호감도에 미친 영향

〈그림 4-8〉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의 변화(사전/사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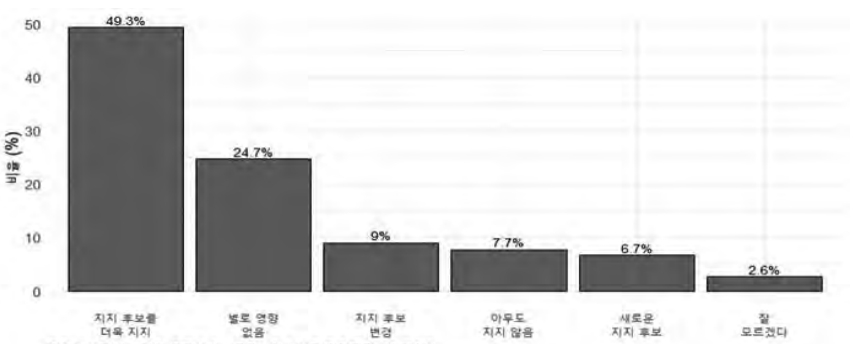


5) 후보자 선택 효과

〈그림 4-9〉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



〈그림 4-10〉 후보자토론회가 후보 지지 변경에 미친 영향



- 지지 후보를 더욱 지지: 토론회 이후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
- 별로 영향 없음: 토론회가 후보 지지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 지지 후보 변경: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다
- 아무도 지지 않음: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아무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 새로운 지지 후보: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생겼다

2. 용역 결과 요약보고서⁵⁵⁾

가. 서론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도입 이후 한국 선거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번 2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실시된 선거로서 후보자를 정책과 공약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검증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였다.

후보자토론회는 그 형식적 특징으로 인해 선거에 관련된 언론보도나 후보자의 선거운동과는 구분되는 강점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후보자토론회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평가받고 있는지를 경험적 차원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평가 및 유권자에 미친 다차원적 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투표선택을 넘어 후보자에 대한 정서적, 인지적 평가로 확장하여 후보자토론회의 현실적인 효과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나. 선행연구 검토

후보자토론회는 도입된 이후 형식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기자회견식 토론회에서 후보자 상호토론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으며 후보자토론회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총량제 자유토론, 주도권토론 등 새로운 토론방식 등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후보자토론회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시도하며 기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유권자들에게 선거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55) 한국정치학회에서 2025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연구용역사업 완료 시 제출한 요약서를 옮긴 것으로서, 동 요약서에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 등은 해당 연구진의 개인 의견이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힘.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생하는 후보자 상호 간의 비방전은 후보자토론회의 취지를 훼손하는 문제점으로 꼽혀왔다.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는 학습, 참여, 선택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어왔다. 토론회 시청은 유권자의 정치지식과 선거참여를 촉진한다. 선거쟁점 및 후보자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을 높이고 선거관심, 주변 사람들과의 정치적 대화 촉진 등 참여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후보자토론회가 투표선택에 미치는 효과는 기존의 지지후보를 변경하게 만드는 전환효과보다 기존의 지지성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강화효과가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왔다. 그러나 지지정당이 없거나 정치적 관심이 낮은 유권자에게는 전환효과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제19대 대선에서는 토론회가 선거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있다.

역대 대선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은 90% 이상의 절대다수 응답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어 후보자토론회가 필수적인 제도로써 완전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유용성에 대해서도 70~80%대의 긍정적 응답을 받아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토론회는 정책검증보다는 후보 개인의 인물과 자질을 검증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70%대로 긍정적이었으나 지지후보에 따라 공정성 평가가 달라지는 당파적 평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선거에서 패배한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 공정성 평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토론회의 흥미도는 선거 경쟁구도와 토론방식에 따라 편차를 보였는데, 제19대 대선에서 75%의 긍정응답으로 높은 흥미도 평가를 받았으나 양자대결 구도가 강했던 제18대, 제20대 대선에서는 60%대의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후보자토론회의 정치적 효과로는 첫째, 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참여적 효과가 확인된다. 토론회 시청 후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응답이 제18대 대선에서 79.7%, 제19대 대선에서 74.6%, 20대 대선에서 65.7%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긍정응답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 살펴볼 부분이다.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지지후보를 바꾸는 전환효과보다는 강화효과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다. 연구 내용 및 범위

1) 연구의 내용과 범위

본 연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에 대한 평가, 현실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분석한다. 각 영역별 분석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31〉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도평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주제 및 진행방식 평가 등
현실인식	후보자토론회의 관심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도 평가 등
효 과	후보자 선호와 선택 변화, 후보자에 대한 인식 변화, 정치관심도 및 참여 변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주제 및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를 분석하였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관심도, 공정성, 유용성, 흥미도 평가 등을 분석하였다.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는 후보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정치관심도 및 참여에 미친 효과, 후보자 선택에 미친 효과를 검증하였다.

2) 조사 방법

본 연구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전후에 각각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패널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5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사후조사에 응답한 응답자는 1,233명으로 패널 유지율은 79.5%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패널들은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을 밝힌 유권자들로 구성되었으므로 한국의 평균적인 유권자에 비해 정치관심, 정치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평가, 제21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32〉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 문항 내용(사전/사후조사)

설문 문항	사전	사후
후보자토론회 시청 의향/시청 여부	√	√
후보자토론회 시청 관심/횟수	√	√
후보자토론회 시청 방법		√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관심도	√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도	√	√
후보자 선택 시 주요 고려 요인	√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의향 또는 투표 여부	√	√
제21대 대통령선거 지지하는 후보 또는 투표한 후보	√	√
제20대 대선 투표 후보	√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 시청 경험 여부	√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투표참여 의향에 미친 영향	√	
지난 대선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선택에 미친 영향	√	
후보자의 사익 추구에 대한 평가	√	√
후보자의 사회통합역량에 대한 평가	√	√
후보자의 국정운영능력에 대한 평가	√	√
후보자의 국가발전 혁신적 비전에 대한 평가	√	√
정당의 정책수행능력 평가	√	√
정치 지식	√	
후보자 호감도	√	√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횟수 충분성	√	√
후보자토론회 시간의 적절성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선호		√
후보자토론회 토론방식 선호		√
토론 주제에 대한 평가		√
사회자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한 평가		√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필요성	√	√

설문 문항	사전	사후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성	√	√
후보자토론회의 정보 획득 효과성	√	√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문제점		√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후보자 자질 비교		√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후보자 정책공약 비교		√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 후보자 직무(정책)수행능력 비교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 관심도		√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토론회에 대한 주변인과의 대화		√
(미시청자 대상) 토론회에 대한 주변인과의 대화		√
후보자토론회의 정보제공 유용성 (여타 매체와의 비교)		√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지지 후보 선택에 미친 영향		√
후보자토론회 시청이 후보자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
가장 토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후보자		√
공공문제 정보 획득 매체	√	√

본 연구가 시행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은 아래와 같다. 본 조사는 표본 비율을 모집단 비율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으며 아래 표는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4-33〉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의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사전조사		사후조사	
		사례수 (명)	비율(%)	사례수 (명)	비율(%)
		1,550	100.0	1,233	100.0
성별	남자	769	49.6	647	52.4
	여자	781	50.4	586	47.6
연령별	18~29세	241	15.5	169	13.7
	30~39세	229	14.8	180	14.6
	40~49세	265	17.1	212	17.2
	50~59세	319	20.6	265	21.5
	60세 이상	496	32.0	407	33.0
지역별	서울	293	18.9	228	18.5
	인천/경기	496	32.0	401	32.5
	대전/세종/충청	162	10.5	128	10.4
	광주/전라	162	10.5	126	10.3
	대구/경북	144	9.3	118	9.6
	부산/울산/경남	227	14.7	181	14.7
	강원/제주	65	4.2	50	4.1
이념 성향	보수	502	31.3	434	35.2
	중도	551	35.5	449	36.4
	진보	485	32.4	321	26.1
	모름/무응답	12	0.8	28	2.3
최종학력별	고졸이하	322	20.7	253	20.5
	대학교 재학/졸업	1047	67.6	828	67.2
	대학원 재학/졸업	177	11.4	149	12.1
	거절/무응답	4	0.3	3	0.2
직업별	화이트칼라	466	40.8	507	41.1
	블루칼라	242	15.6	197	16.0
	자영업	150	9.7	115	9.3
	가정주부	211	13.6	165	13.4
	학생	76	4.9	54	4.4
	농림어업	10	0.6	7	0.6
	무직/기타	207	13.4	172	14.0
	거절/무응답	21	1.4	16	1.3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된 경험자료를 빈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을 통해서 각 문항의 응답값이 어떠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상관관계 분석을 활용하여 두 변수의 통계적 연관성을 검증하였다. 회귀분석은 설명하고자 하는 변수에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개별 설명변인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종속변수의 유형에 따라 최소제곱법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1)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제도적 요소 평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치러졌으며, 이로 인해 후보자 검증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자질과 공약, 정책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 실제 사전 및 사후설문조사 결과, 약 96%에 달하는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대다수 유권자들이 실시간 방송, 다시 보기,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토론회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를 넘어 유권자의 판단과 정보 습득에 있어 핵심적인 제도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권자들은 토론의 횟수, 시간, 내용, 방식, 운영의 공정성 전반에 대해 높은 기대를 갖고 있으나, 공약 중심의 검증 구조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심도와 시청행태

후보자토론회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았는지를 묻는 문항(사후조사)에서는 약 90%의 응답자가 관심을 갖고 시청한 것으로 나타나 관심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토론회를 어떻게 시청했는지를 파악한 결과,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한 비율이 68%, 동영상을 통해 다시보기한 비율은 12.66%였고, 실시간 방송과 동영상 다시보기 모두 활용한 응답자는 19%였다.

구체적으로, 실시간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시청한 매체 중 지상파 TV가 78%로 가장 높았고 유튜브 채널(9.5%), 종합편성채널(7.4%), 보도전문채널(4.6%)이 그 뒤를 이었다. 다시보기를 시청한 매체는 방송국 유튜브 채널이 79%로 가장 높았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채널이 20%로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전조사에서 97%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사후조사에서도 95%의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긍정하였다.

후보자토론회 횟수에 대해서 사전조사에서는 72%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시행한 사후조사에서는 45%가 충분했다고 응답하였고 부족했다는 응답은 54%로 크게 높아졌다. 토론회 횟수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6회의 토론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횟수에 대한 평가는 토론회 시청 이전보다 이후에 횟수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는 다양한 주제와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2시간의 진행 시간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현행 유지'를 선호하였으나, 토론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40%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후보자토론회의 횟수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사후조사에서 높아지는 것은 이전 대선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결과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공약과 정책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부정적으로 보면, 실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해보면, 더 많은 후보자토론회를 원하는 것은 후보자토론회를 통해 선거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즉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인식할수록 더 많은 후보자토론회를 원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후보자토론회의 흥미도나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낮을 경우 후보자토론회가 부족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에 초청대상 후보의 범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주요정당 후보자 모두가 참여하는 토론회에 대한 선호가 62%로 나타났고 여론조사 상위 2위 후보자까지 참여하는 토론회에 대한 선호가 37%로 나타났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공약검증토론’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과반의 응답자가 기존의 주도권토론보다 공약검증토론이 더 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선호하는 토론 방식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되었다. 이는 유권자들이 비방 중심의 기존 토론보다는 정책 중심, 정보 중심의 토론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유권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 방식에 대한 선호도 일정 수준 나타나며, 향후 토론회를 기획하는 방식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 매 회차별로 3개의 주제를 다루었는데, 주제의 개수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너무 적었다는 응답이 55%, 충분했다는 응답이 39%로 나타나 주제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토론주제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주제가 60~70% 가량의 적절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응답을 얻은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가장 낮은 긍정응답(63%)을 받았다.

한편,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의 문제점으로 네거티브 공방, 정책토론 부재를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사회자의 제한적인 개입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사회자의 역할 수행의 중립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는 75% 가량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변하였다. 83%의 응답자들은 사회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제지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사회자의 개입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원활한 토론회 운영을 위해 사회자의 중재 권한 확대와 적극적인 개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인식

후보자토론회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았는지 묻는 문항에서 약 90%의 응답자가 관심을 갖고 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관심도는 절대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임이 분명하나 실제 합계시청률을 보면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합계시청률은 제20대 대선에 비해 10%p 가량 낮아졌다. 이는 선거구도와 경합도의 영향력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는 언론보도, 유튜브 등 다른 선거정보 습득 수단에 비교해보았을 때 선거정보를 습득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전조사에서 선거방송토론이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언론보도 30%, 유튜브 12%를 상회하였다. 사후조사에서 선거방송토론은 여전히 가장 많은 응답자가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하였으나 비율은 35%로 다소 감소하였다.

후보자토론회는 대통령 직무수행능력 비교, 정책공약 비교, 후보자질 비교 가운데 후보자 개인의 자질을 비교하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세 영역 모두에서 ‘유용하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후보자질이나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았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흥미도 평가에서 ‘흥미롭지 않았다’는 부정 평가가 49.25%에 달해 긍정 평가(50.74%)와 거의 대등한 수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대선 토론회 중 가장 높은 부정 평가 비율로, 네거티브 공방과 정책 실종이 유권자의 피로감과 외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를 던져준다.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약 68%의 응답자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과거 대선과 비교해보았을 때, 제19대 대선에서는 78%가, 제20대 대선에서는 70%가 공정했다고 응답하여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공정성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다. 토론회 진행에 관하여 오히려 과도한 경직성, 사회자의 수동적 역할이 지적받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는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나타난 결과라기보다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

3)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정치적 효과분석

후보자토론회의 심리, 인지적 효과 측면에서는 선거관심도 제고와 정치적 소통 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약 60%가 토론회 시청 후 선거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70%가 토론회 이후 주변인과 선거 관련 대화를 나누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토론회 시청자들의 정치대화 참여 비율(69%)은 미시청자(50%)를 크게 상회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토론회 시청 빈도는 선거관심과 정치대화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중요한 것은, 정치지식이 낮은 유권자들일수록 토론회 시청 횟수가 증가할수록 선거관심도와 정치대화에 참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태도적 효과에 관해서는 이준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가 후보자토론회 이후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후보자의 역량에 대한 인식적 평가, 후보자에 대한 호감도 등에서 이준석 후보자를 제외한 모든 후보자는 토론회 이전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권영국 후보자는 호감도 2.85점에서 4.13점으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이는 토론회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후보자에게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기회를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정당에 대한 평가에서는 네 가지 정책 영역(경제성장, 정치개혁, 외교/안보, 저출생/고령화) 모두에서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평가가 하락하였다. 이는 토론회에서 수준 높은 정책토론이 제기되지 못하면서 각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책적 역량에 대한 평가가 하락했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바뀌었는데 정당의 정책역량에 대한 평가는 하락한 것은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으나 정책적 역량을 파악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일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가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을 보면, 49%가 기존 지지 강화, 24.7%가 영향 없음으로 응답하여 전체의 74%가 기존의 선택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였다. 투표선택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응답은 23.4%로 나타났다. 제20대 대선에서 기존 지지 유지 또는 강화는 약 88%를 차지하였고 전환효과는 11%에 불과했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상승이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전환효과는 강화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선택에 작용하는 다양한 요인들(사회경제적 지위, 정당일체감 등)이 다수 존재하며 후보자토론회는 다른 요인에 비해 지극히 단기적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약 23%의 전환효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마. 결론: 후보자토론회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후보자토론회가 직면하고 있는 첫 번째 위협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인한 상대적 위상 약화이다. 모든 주요 후보자를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후보자토론회의 독보적인 강점이지만,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각자가 다루는 주제에 관하여 후보자와 대담을 진행하는 등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후보자토론회가 직면하고 있는 두 번째 위협은 토론 규범의 침식이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일부 후보자들은 명시적 토론규칙은 물론,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의 토론 규범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보여져야 할 ‘바람직한 토론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토론회에서 더 다양한 주제가 다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으며, 후보자토론회의 횟수도 더 늘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서 다루는 주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그 수를 늘릴 경우 개별 토론회의 진행 양상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시간적 제약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토론회 횟수 증가의 경우, 후보자들을 같은 시간, 동일한 장소에 모두 모아야 하는 후보자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들의 자율적인 선거운동기회에 제한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울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이 후보자토론회에 더 많은 의제가 다루어지고, 더 많은 후보자토론회를 원하는 것은 후보자토론회에서 그 취지에 맞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이다. 즉 더 많은 후보자토론회를 원하는 것이 더 많은 정보에 대한 요구라고 본다면, 횟수를 늘리지 않더라도 토론회의 내용적 발전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자의 재량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토론주제와 무관한 발언, 부적절한 발언 등에도 불구하고 사회자의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후보자토론회의 취지가 상당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유권자들은 사회자의 권한 확대를 지지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당파적 편향을 고려하더라도 사회자 권한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확인되고 있다. 다만 사회자 홀로 개입을 결정하는 것은 사회자 개인에게 매우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등이 심판위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과반수가 후보자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 이 사실을 고지받은 사회자가 그 즉시 개입하도록 하는 등 실무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고안해보아야 한다.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정책과 공약 비교는 후보자의 자질 비교 등에 비해 낮은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 도입한 공약검증토론을 보완하여 토론의 초점을 공약과 정책에 맞출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토론회는 흥미도를 개선하기 위해 다소 경직되었던 토론 형식에서 탈피하여 후보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간총량제토론, 주도권토론 등의 다양한 토론방식을 도입하였다. 유권자들이 토론회에서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을 바라고 있는 만큼, 후보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역동성을 덜어내고 다소 경직되더라도 정책발표를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수 있다.

후보자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한 변화를 추구해왔다. 경직된 형식을 탈피하고 생동감을 더하기 위해 주도권토론 등 새로운 포맷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후보자에게 자율성이 부여된 토론 포맷들은 후보자가 보유한 토론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을 뿐 정책과 공약에 대한 토론은 오히려 약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는 그 성격을 고려했을 때 토론의 역동성 등을 통해 토론회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는 더 어려울 수 있다. 토론회의 유익함에 초점을 맞추어, 오히려 형식적으로는 다소 경직된 토론방식을 취하더라도 여러 후보자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는 후보자토론회의 독보적인 강점을 활용하여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론 방식의 활용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제3절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1. 개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025년 7월 28일(월)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홀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총 4차례 실시한 후보자토론회의 전반적인 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한국정당학회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후보자토론회 실태 점검 및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다.

세미나 주요 참석자(사회자 및 발제자 등)로는 정치학 및 언론학계에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전문가 및 연구원, 교수진이 주로 참여하였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전·현직 위원 및 전문위원, 후보자토론회 개최 실무를 총괄한 사무국장과 현직 방송사 소속 인원 등이 참석하여 선거방송토론 관련 이론·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토론회 개최 실무 분야에 이르는 현실적 영역까지 폭넓게 의견을 나뉘 내실화를 도모하였다.

후보자토론회의 실태 분석, 유권자에 미치는 효과, 언론의 평가와 같은 주요 연구자료 공유에 더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 선거방송토론이 나아갈 방향,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고찰까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계기가 되었다.

〈그림 4-11〉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진행 현황



〈표 4-34〉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참석자 현황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회사: 윤재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 인사말: 서정건(한국정당학회 회장) • 사회자: 박주연(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주제1	<p>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및 개선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자: 장혜영(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정준희(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고유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주제2	<p>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박영득(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토론자: 김희경(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예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
주제3	<p>언론에서 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자: 최성민(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 • 토론자: 강연곤(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우병득(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발제문⁵⁶⁾

가. 제1주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및 개선방안

박 경 미(전북대 교수)

1) 서론

6월 3일 제21대 대선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월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종결로 발생한 대통령 궐위에 따라 60일만에 치러진 조기선거였다. 임기만료로 인해 치러지는 통상적인 선거와 달리, 궐위에 따른 대선은 정치적 관심의 폭증 속에서 후보 선출 및 선거운동 등을 비롯하여 취임까지의 과정을 마쳤다. 이러한 시간의 압박은 선거정보를 충분히 파악해 선거에 참여하려는 유권자, 그리고 선거과정을 준비하는 후보자나 정당, 모두에게 피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그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관건은 ‘정례적 선거과정’의 압축적 추진과 그 성공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그 성과는 유권자, 후보자나 정당의 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선거 정당성 확보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문제였다.

정례적 선거과정 중 하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였다. 그 법적 근거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1항은 대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3회 이상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5월 18일과 23일, 27일에 ‘초청 후보자토론회’가, 그리고 5월 19일에는 ‘초청외 후보자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56) 발제문 내의 그림과 표 번호 등은 모두 원문 그대로의 표기 방식을 따름.

주목할 부분은 후보자토론회가 ‘선거운동’ 방식 중 하나이며 후보자와 정당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공간이라는 점이다.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와 공약을 확인하는 등 선거정보 확보의 기회(Benoit and Hansen 2004; Schroeder 2008)이기 때문에 후보자와 정당만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후보자토론회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였는가? 후보자토론회가 지지후보 변경의 효과가 낮으며 새로운 선거정보 습득보다는 지지후보 확정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mieson and Birdsell 1988; 김영종 2008). 그러나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파 유권자의 선택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Geer 1988; Gordon and Miller 2004)는 후보자토론회가 일부 유권자의 지지후보 선택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조기대선의 시간적 압박 속에서 개최된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의 특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정책선거의 토대로서 작동하였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제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특성과 전반적 현황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후보자토론회 제도 분석에는 초청·초청외 후보자토론회를 모두 포함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으며 후보자 4명이 참여한 ‘초청 후보자토론회’에 집중하여 진행방식 등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그에 따라 이 글은 후보자토론회의 전반 현황, 진행과정의 특징과 문제점, 토론방식과 후보자 발언의 키워드, 사회자 역할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후보자토론회 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의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2) 후보자토론회 운영의 현황

〈표 1〉은 최근 다섯 차례 대선의 후보자토론회 현황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토론회는 총 4회씩 열렸다. 이번 제21대 대선에는 제19대 대선부터 정치·경제·사회, 세 분야로 나눈 토론분야 분류 방식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해 토론하였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⁵⁷⁾에 근거하여 초청 후보자 토론회에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후보, 총 4명이 참여하였으며 황교안, 송진호 후보, 총 2명이 초청의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였다.

〈표 1〉 대선 후보자토론회 개최 현황(후보자 수 및 개최일자)

	참여자 수		정책 토론회	초청 1차	초청 외	초청 2차	초청 3차	분야
	초청	초청외						
제17대 (2007)	6	4	3	12.6	12.13	12.11	12.16	1차: 정치·외교·통일·안보 2차: 사회·교육·문화·여성 3차: 경제·노동·복지·과학
제18대 (2012)	3 ⁵⁸⁾	3	3	12.4	12.5	12.10	12.16	1차: 정치·외교·통일·안보 2차: 경제·노동·복지·과학 3차: 사회·교육·문화·여성
제19대 (2017)	5	9	1	4.23	4.24	4.28	5.2	1차: 정치 2차: 경제 3차: 사회 초청외: 국정 전반
제20대 (2022)	4	8	3	2.21	2.22	2.25	3.2	1차: 경제 2차: 정치 3차: 사회 초청외: 국정 전반
제21대 (2025)	4	2	1	5.18	5.19	5.23	5.27	1차: 경제 2차: 사회 3차: 정치 초청외: 국정 전반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는 선거정보 제공 기능이 근본적으로 제약되는 조건에서 시행되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통상적인 정례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부터 매월 1회 이상 개최된다. 후보자토론회 이전에 총 3회 이상 정책토론회가 열리는 것이다.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는 선거운동 기간 전부터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인지 및 평가할 기회가 있는 것이다. 직전 대선이었던 제20대 대선의 경우, 5개

57) 초청 후보자토론회에는 국회 소속의원 5명 이상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 직전 대선이나 각급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 선거기간 개시 30일부터 개시일 전일까지 여론조사결과 지지율 5% 이상의 후보자가 참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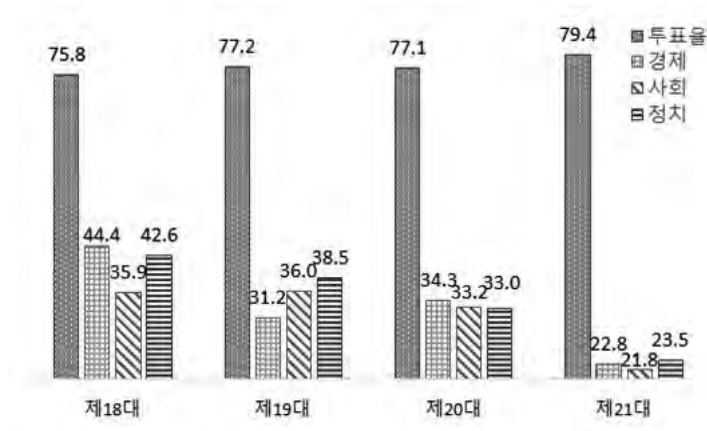
58) 초청 후보자토론회 참여 후보자는 총 3명이었으나 이정희 후보의 사퇴로 3차에는 2명 참여하였다.

정당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토론회가 12월 16일, 1월 18일, 2월 3일, 총 세 차례 개최되었다.

그에 반해 이번 제21대 대선과 같은 궐위선거는 정책토론회 개최의 시간적 여유가 없이 치르기 때문에 정책토론회 개최에도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궐위선거였던 제19대 대선에서 4월 17일 한 차례 정책토론회가 열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의 정책토론회도 4개 정당 관계자가 참여해 5월 2일 한 차례 개최되었다. 후보자나 정당이 공약이나 정책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채 치르는 궐위선거였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이상 개최할 수 있으나 궐위선거에서는 무리였다. 대선 실시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나 확정되었기 때문에 후보 선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조차 차분히 진행될 수 없었으며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도 준비될 리가 만무하였다. 또한 후보자토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책토론회의 개최 횟수를 늘릴 수 없다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다. 총 60일 이내에 세 차례의 초청 후보자토론회, 한 차례의 초청외 후보자토론회까지 모두 개최하는 것은 산술적 시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책토론회를 여유있게 개최하지 않은 채 운영된 후보자토론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한 차례의 정책토론회는 후보자가 확정되지 않은 채 열려, 정당-후보자 공약과 정책이 연계되거나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정당정책 홍보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정책토론회의 필요성은 신문 등의 지면보도에 비해 후보자 정책을 충실히 전달하는 효과가 있는 지상파 후보자토론회(김춘식·전영란 2005)가 정책토론회와 결합할 때 유권자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상대후보에 대한 부정적 언사를 구사하는 경향(김관규 2008)은 궐위선거라는 조건과 결합하여, 정책경쟁보다는 부정적 선거전략만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림 1〉 대선 투표율과 초청 후보자토론회 시청률



* 시청률은 지상파 3사와 종편 등의 시청률을 합한 수치임

〈그림 1〉과 같이 대선의 투표율과 후보자토론회 시청률을 살펴보았다. 지상파 3사와 종편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집계된 제18대 대선 이후의 투표율과 시청률이다. 이번 제21대 대선은 이전 세 차례 대선 투표율에 비해서 다소 높았으나 시청률은 가장 낮았다. 이번 투표율은 제18대 75.8%, 제19대 77.2%, 제20대 77.1%보다 높은 79.4%였다. 이번 대선에 관한 높은 관심을 반영하듯 투표율은 높았지만 후보자토론회 시청률은 감소하였다. ‘경제’ 분야에 관한 제1차 후보자토론회 시청률은 22.8%로, 제18대 44.4%, 제19대 35.9%, 제20대 42.6%보다 낮았다. ‘사회’ 분야 제2차 시청률은 경제와 정치 분야보다도 제18대 35.9%, 제19대 36.0%, 제20대 33.2%에 비해 10% 이상 낮은 21.8%였다. ‘정치’ 분야에 관한 제3차 시청률은 23.5%으로, 경제와 사회 분야의 시청률보다는 높았지만 제18대 42.6%, 제19대 38.5%, 제20대 33.0%보다 낮았다. 전반적으로 이전 세 차례 대선에 비해 시청률이 낮았던 이번 후보자토론회는 유튜브 등 이외의 대체매체 증가가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3)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특성

이번 장에서는 이번 대선의 초청 후보자토론회에서 논의하여야 할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번 대선의 특성에서 비롯된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과 후보자의 토론방식 숙지 문제, 셋째, 토론분야와 시작·마무리발언, 넷째,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의 패턴과 토론대상, 다섯째, 원활한 진행을 위한 사회적 역할의 한계를 논의한다. 특히 시작·마무리발언에서는 토론분야와의 적합성 문제를, 그리고 토론방식의 특징과 패턴에서는 후보자의 질문 키워드를 중심으로 토론대상의 집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궐위선거의 시간적 제약과 후보자 확정 지연 및 사퇴

이번 대선에 최종 후보자 수는 5명으로, 민주화 이후 대선 중 제13대 대선과 함께 후보자 수가 가장 적은 선거였다. 제19대 대선에서는 13명이, 그리고 제20대 대선에서는 12명이 선거에 참여하였지만 이번 대선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노동당, 무소속 등 정당 추천 후보 4명과 무소속 1명, 등 총 5명이 후보자였다. 이처럼 후보자 수의 감소로 후보자 발언 시간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활발한 토론에 유리한 조건이었지만 후보자토론회 일정과 준비가 궐위선거로 인한 시간적 제약 속에서 추진되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후보자 수가 확정되어야 결정할 수 있는 토론시간 배분 등 후보자토론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변수는 통상적 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확정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궐위선거였다는 점이다. 단기간에 치러진 당내 경선과 후보교체론 대두로 인해 정당 후보 확정은 후보자 등록일(5월 10일·11일)에 임박해 결정되었다. 후보자 등록일 전에 미리 준비되었더라도 후보자토론회의 모든 일정은 촉박하게 결정되었다.

또 다른 변수는 후보자의 중도사퇴였다. 후보자 등록일 기준 후보자 수는 초청 후보자토론회 대상 4명과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대상 3명, 총 7명이었다. 초청 후보자토론회는 4명의 후보자가 모두 참석하였지만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가 열린 5월 18일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사퇴함으로써 5월 19일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에는 무소속 황교안 후보와 송진호 후보, 2명만이 참여하였다. 또한 초청외 후보자토론회에 참여하였던 무소속 황교안 후보도 6월 1일 사퇴하였다.

후보자의 중도사퇴는 후보자토론회 개최에 경제적·행정적 부담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지상파 3사는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 수에 맞춰 일정과 단상 등을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이다. 후보자의 중도사퇴 시점이 이미 비용을 지출한 이후였다. 후보자별 발언시간 등을 재조정하여 후보자들에게 다시 공지하여야 하였고 단상 등을 재조정하여야 하였다. 참석확인서 제출 이후의 후보자 중도사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지상파 3사 모두가 경제적·행정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② 진행방식과 후보자의 토론방식 미숙·미숙지

각 차수별 후보자토론회는 <표 2>의 순서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각 후보자에게 1분씩의 시작발언의 기회가 주어진 이후, 공통질문에 대한 후보자들의 답변 기회를 부여한 이후 시간총량제 토론이 진행되었고, 후보자 공약 발표 이후 후보자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였다. 두 차례의 주도권 토론 이후 마무리발언을 끝으로 후보자토론회가 종료되었다.

여기에서 논의하여야 할 부분은 토론방식이다. 세 번의 후보자토론회 모두 동일하게 ‘시간총량제 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시간총량제 토론은 후보자별 해당 사안에 발언할 수 있는 시간 총량을 정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었으며 후보자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질문하거나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4명의 후보자가 시간총량제 토론과 후보자 주도권 토론에서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6분 30초로 동일하였다. 두 토론방식은 각각 한 차례의 공통질문과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에 적용되었다. 시작발언 이후, 네 후보자는 1분 30초 동안 사회자가 묻는 동일한 질문에 답변한 후, 후보자마다 6분 30초 동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총량제 토론을 진행하였다. 반면 공약검증토론은 1분 30초 동안 후보자 공약을 발표하도록 한 뒤 6분 30초 동안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였다. 주도권 토론의 원칙은 한 후보자가 토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2명 이상과의 토론과 다른 후보의 답변을 30초 이상 보장하는 것이었다.

〈표 2〉 진행 순서 및 토론방식

진행 순서		시간
시작발언	후보자 각 1분	4분
공통질문 (시간총량제 토론)	사회자 공통질문(30초) 후보자 답변(각 1분 30초)	6분 30초
	시간총량제 토론(후보자별 각 총 6분 30초)	26분
공약검증토론 (주도권 토론)	후보자 공약 발표(각 1분 30초)	6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30초) * 2명 이상과 토론, 답변시간 최소 30초 보장	26분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 30초)	6분
	후보자 주도권 토론(각 6분 30초) * 2명 이상과 토론, 답변시간 최소 30초 보장	26분
마무리발언	후보자(각 1분)	4분
계		104분 30초

두 토론방식을 중심으로 진행된 후보자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는 후보자의 미숙 혹은 미숙이었다. 일부 후보자는 후보자 주도권 토론의 방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자신의 발언권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며 개별 발언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시간총량제 토론 방식을 인지하지 못하여 다른 후보가 시간총량제 토론임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후보자와 정당에 관한 선거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후보자토론회에서 토론방식 미숙 혹은 미숙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원활한 토론에 방해요소일 수 있다.

토론방식 미숙 혹은 미숙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로 유추할 수 있다. 우선, 토론방식 자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며 또 하나의 가능성은 서로 다른 토론방식을 병행해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방식을 후보자가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원인 중 어느 쪽이라고 하더라도 토론방식 숙지는 후보자의 책임일 것이다. 또한 토론방식 미숙 혹은 미숙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식만을 선택해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겠지만 서로 다른 방식의 토론방식 구성이 유권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를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토론방식의 결합 및 운영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③ 토론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시작·마무리발언

세 차례의 초청 후보자토론회는 경제, 사회, 정치, 총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 후보자토론회는 각 후보자의 ‘시작발언’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발언’으로 후보자토론회를 종료하였다.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정해졌으며 이는 좌석 순서이기도 하였다. 1차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이재명 후보 순으로 시작발언을 하였으며, 2차는 이재명, 김문수, 권영국, 이준석 후보 순으로, 3차는 이재명, 권영국, 김문수, 이준석 후보 순으로 시작발언을 하였다. 마무리발언 순서도 시작발언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후보의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 시간은 각각 1분씩이었다.

서로 다른 분야로 나누어 개최된 세 차례 후보자토론회의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에 대한 기대는 해당 토론분야에 대한 입장, 즉 정책 및 공약이었다. 토론주제와 발언이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시작·마무리발언의 키워드를 정리하였다. 모든 발언이 그렇지 않았지만 대체로 토론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키워드로 발언하였다. 해당 토론분야와 관계없이 후보자들은 득표에 유리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발언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3〉 토론 분야별 시작·마무리발언의 키워드⁵⁹⁾

		발언내용 키워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초청1차 (경제)	시작발언	진짜 대한민국	기업규제 혁파	국가경쟁력	차별없는 나라
	마무리발언	심판 선거	일자리 대통령	기회의 사다리	사회 대전환
초청2차 (사회)	시작발언	헌정질서 회복	정의로운 정치	상식	사회통합
	마무리발언	헌정질서 회복	독재 예방	양당 청산	사회적 소수
초청3차 (정치)	시작발언	국민주권 회복	방탄독재 방지	세대 교체	청년 정치
	마무리발언	새로운 민주공화국	방탄독재 방지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정치

59) 각 키워드는 후보자 발언 내용에서 핵심 단어나 관련 단어를 발췌하여 필자가 작성하였다.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러한 내용을 담은 가장 포괄적인 용어를 발췌하여 키워드로 작성하였다. 이후의 <그림>의 키워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원론적 차원에서 후보자의 자유로운 발언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토론 분야와 관계없이 발언하는 것 자체를 제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토론분야와 동떨어진 내용으로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는 것 자체를 문제로 볼 수도 없다. 다만 후보자토론회가 분야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그리고 유권자가 후보자의 분야별 공약 등 구체적인 선거정보 확보 기회라는 관점에서 토론 분야와 관련 없는 내용의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은 후보자토론회 기능을 손상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④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의 패턴

〈표 4〉에서 보는 것처럼, 경제, 사회, 정치 분야 순으로 진행된 세 차례 초청 후보자토론회가 각각 다른 토론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두 가지 토론방식을 병행하여, 공통질문에 대한 시간총량제 토론과 두 가지 주제에 대한 공약검증토론에 후보자 주도권 토론이 이루어졌다. 경제 분야의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그리고 주도권 토론에서 “트럼프시대의 통상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두 가지 주제를 논의하였다. 사회 분야의 시간총량제 토론은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주도권 토론에서는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과 “기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하여 상호토론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시간총량제 토론방식으로 진행하였던 반면 “정치 개혁과 개헌”과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권 토론을 논의하였다. 후보자토론회 시작 전에 추첨을 통해 발언 순서를 정하였으며, 시작발언을 두 번째로 한 후보부터 시간총량제 토론을 시작하며 주도권 토론은 세 번째로 시작발언을 한 후보자부터 발언을 시작하였다.

〈표 4〉 토론방식과 토론주제

회차	토론분야	토론방식 및 토론주제	
초청 1차	경제	공통질문 (시간총량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공약검증토론 (주도권)	트럼프시대의 통상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회차	토론분야	토론방식 및 토론주제	
초청 2차	사회	공동질문 (시간총량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공약검증토론 (주도권)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초청 3차	정치	공동질문 (시간총량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공약검증토론 (주도권)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 시간총량제 토론의 키워드와 토론 대상의 집중

시간총량제 토론은 공동질문에 관한 후보자 답변을 들은 이후, 각 후보자가 6분 30초의 시간 동안 발언할 기회를 갖는 방식으로 첫 발언을 하는 후보자는 두 번째로 시작발언을 한 후보자가 하였고 그 이후 나머지 발언순서는 정하지 않고 진행하였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총량제 토론은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계엄령과 탄핵 책임을 묻는 발언으로 시작하여 이에 대한 상호 논박이 있었다. 초청 2차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후보 형님의 정신병원 입원 등 가정문제 질문으로 시간총량제 토론을 시작하였다. 초청 3차 시간총량제 토론에는 권영국 후보가 김문수, 이재명, 두 후보에게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2〉는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한 후보자별 질문 내용을 키워드로 정리하여, 토론대상의 집중성을 살펴본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질의되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1차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3명 후보에게 질문을 받았으며, 2차에는 후보자 3명이 이재명 후보에게, 후보자 2명이 김문수 후보에게 질의하였으며 이준석 후보에게도 후보자 2명이 질문하였다. 2차 시간총량제 토론과 마찬가지로, 3차에도 이재명 후보에게 3명,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게 후보자 2명이 토론하였다. 양대 정당 후보에게, 특히 선거경쟁력이 높은 후보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패턴일 것이다. 권영국 후보에게는 질문을 하는

후보자가 단 한명도 없었던 세 차례의 후보자토론회 패턴도 현재 국회 원내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정당의 선거경쟁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2〉 시간총량제 토론 키워드⁶⁰⁾



이러한 토론 대상의 집중과 무관하게, 후보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똑같이 6분 30초였기 때문에 유권자에게 차지하는 시간점유율은 동일하다. 시간총량제 토론에서는 후보자가 질문하여야 할 토론 대상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토론의 방향은 몇몇 후보에게 집중될 수 있는 토론방식이다. 세 차례의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만 질문과 토론을 진행하였다. 반면 세 차례의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질문을 하나도 받지 못한 권영국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6분 30초를 다른 후보에게 질의하고 토론하는 데 사용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후보자들의 질문이 토론주제와 연관되어 있는가이다. 〈그림 2〉의 키워드는 대체로 토론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일부 키워드는 토론분야와 거리가 먼 주제였으며 토론분야와 관계가 있는 키워드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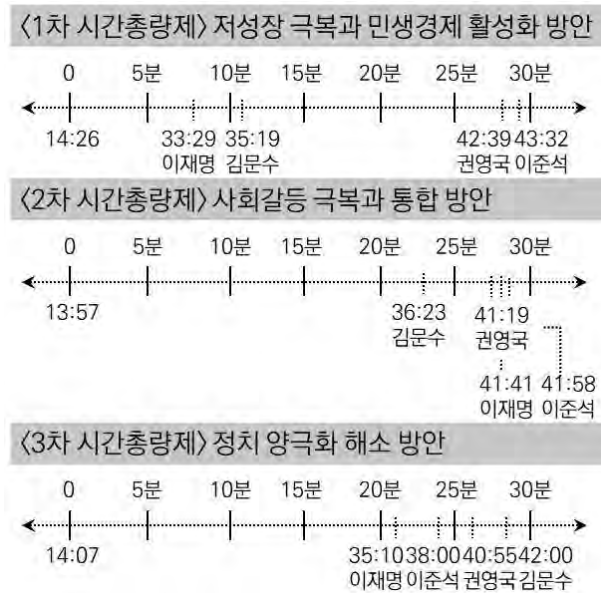
60) 〈그림 2〉와 〈그림 4〉의 화살표는 특정 주제로 다른 후보자에게 질문한 후보자에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한 후보자로 연결되어 있다. 후보자의 이름이 써어 있는 4개의 가운데 동그라미는 질문을 받은 후보 이름이고 바깥쪽 4개의 동그라미는 질문한 후보 이름이다. 키워드는 발언권을 요청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에게 질의한 질문에서만 발췌하여 작성하여, 상호 토론 과정의 내용 전부를 포괄하는 키워드는 아니다.

상호토론이 진행되면서 토론분야와 무관한 주제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다. 발언 하나하나를 별도로 본다면 토론분야와의 적합성은 대체로 없는 것이었으나 논리적 흐름이 해당분야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적합성 여부에 대한 의견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토론분야를 환기하거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였다. 그 이유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 특성으로 인해 특정 이슈가 해당영역과 무관하다는 판단의 현실적 주체는 사회자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의 의결로 특정 후보의 발언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진행 흐름에 따라 이미 제지할 시점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적절한 시점의 개입조차도 후보자의 발언 제지 등의 개입은 편파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림 3〉은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후보자별 발언 시간 종료시간을 표기한 것이다. 시간총량제 토론의 첫 발언은 초청 1차 권영국 후보가, 2차 김문수 후보가, 그리고 3차에서는 권영국 후보가 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다른 후보의 질문을 많이 받았던 후보일수록 주어진 시간이 조기에 끝나,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발언 시간이 다른 후보자보다 조기에 종료되었다는 점이다. 1차 경제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상호 토론이 초반에 집중되면서 두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 시작 10분 남짓의 시점에 6분 30초를 모두 사용하였으며 권영국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답변 시간은 후반에 종료되었다. 두 번째 특징은 후보자토론회 회차를 거듭하면서 후보자의 시간 안배가 달라졌다는 점이다. 두 후보자 사이의 상호토론이 집중되었던 1차와 달리, 2차 사회분야와 3차 정치분야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후보자들의 발언 시간은 모두 후반에 종료되었다. 2차와 2차 시간총량제 토론이 시작한 지 20여분이 경과한 후에 네 후보의 발언시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었다.

〈그림 3〉 시간총량제 토론의 토론 패턴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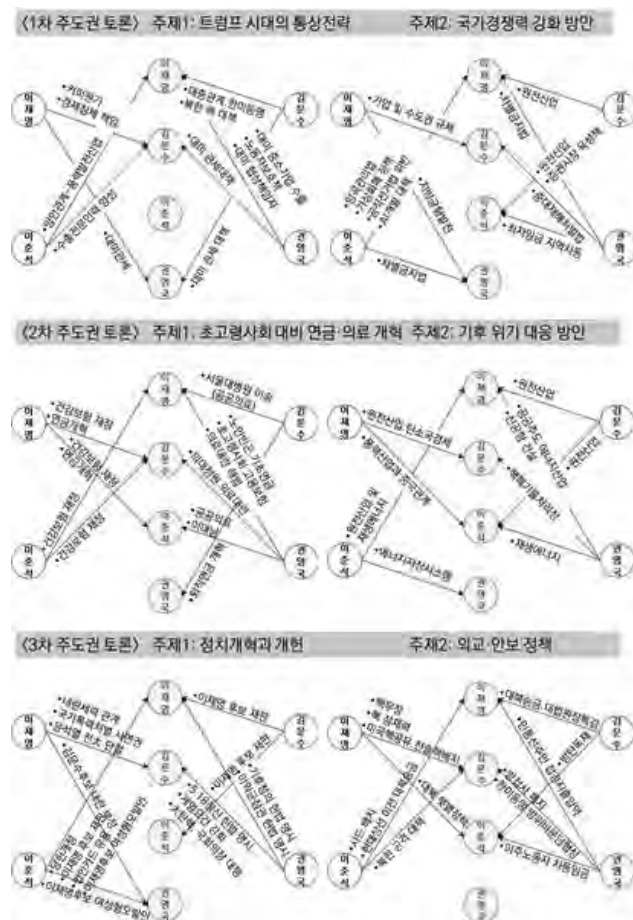
④ 주도권 토론의 키워드와 토론 대상의 집중

시간총량제 토론과 마찬가지로, 각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은 6분 30초이었다. 시간총량제 토론이 발언순서를 정하지 않고 본인의 시간 6분 30초 안에 질문 및 토론하는 방식이라면, 주도권 토론은 한 후보자가 6분 30초 동안 토론을 주도하고 시간이 종료되면 다음 순서의 후보자가 동일한 시간과 방식으로 토론을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한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 시간 6분 30초에는 토론을 주도하는 후보의 질문만이 아니라 답변하는 후보자 발언 시간까지 포함되었다. 시간총량제 토론과 또 다른 차이점은 토론의 주도권을 갖는 후보자는 반드시 2명 이상에게 질의하여야 하며 그 후보자들이 30초 이상의 답변을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었다는 점이였다.

61) 〈그림 3〉의 적힌 아래쪽의 숫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유튜브(수어방송)' 영상에서 시간총량제 토론이 시작된 시간과 각 후보자에게 주어진 6분 30초가 종료된 영상 속의 시간으로, 1초 안팎의 오차가 있을 수 있다. 0분에 표기된 시각은 각 토론의 첫 발언 시간이며 종료 시간은 사회자가 후보자의 시간 종료를 알려주거나 발언자의 마이크 소리가 소거된 시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그림 4〉는 총 여섯 차례 진행된 주도권 토론의 후보자별 질문을 키워드로 정리한 것이다. 1차 주도권 토론은 “트럼프 시대의 통상전략”과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나타난 첫 번째 패턴은 후보자 1명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논박을 이어가다가 다른 한 후보자에게 간략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이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서로 질의와 답변을 이어갔으며 짧은 시간만을 할애하여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하였다. 대체로 한 후보자에게 집중하면서, 사회자가 시간종료를 고지하거나 주제 전환이 필요할 경우, 2명 이상의 후보자와 토론하여야 하는 요건에 맞추기 위해 나머지 짧은 시간만을 다른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패턴이었다.

〈그림 4〉 주도권 토론 키워드



그에 따라 나타난 두 번째 패턴은 권영국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 모두 다른 후보자 모두와 토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명에게만 질문하고 상호 토론하였더라도 실제로는 후보자 1명에게만 질문하고 토론한 것이다. 이러한 패턴은 2차와 3차 주도권 토론에서도 비슷하였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2명에게만 질의하였다.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와 토론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부 시간만 다른 1명에게 질의하고 토론하였다. 1차 주도권 토론의 패턴과 다른 차이점은 권영국 후보의 토론 대상 수였는데, 권영국 후보는 세 후보자 모두에게 질의하고 토론하였다.

문제는 한 후보자와의 토론에 집중하는 패턴으로 인해 또 다른 후보자에게는 답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모두 2명 이상의 후보 이상에게 질의하여 주도권 토론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후보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주는 사회자 발언 때문에 다른 후보자에게 촉박하게 질의하면서 30초 이상을 주어야 하는 최소 답변시간을 보장하지 못한 채 마이크가 꺼지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처럼 토론 대상의 집중이라는 문제는 토론내용과 주제영역과의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림 4>의 키워드는 대체로 주제영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주제였지만 상호 토론이 진행되면서 토론분야와 무관한 이슈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자가 토론분야를 환기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보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않았다.

⑤ 사회자 역할의 한계

제한된 시간의 실시간 토론이기 때문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는 사회자 개입은 불가피하였다. 사회자 개입이 필요한 상황은 우선, 후보자들의 발언권 요청 시였다.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발언권은 후보자가 발언하겠다고 손을 들면 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에게 사회자가 발언권을 부여하였다. 6분 30초 중 잔여시간이 많은 후보자가 발언권을 우선 부여받는 발언 순서의 원칙은 사전에 고지되었고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발언권을 요청한 경우에는 사회자가 발언 순서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러한 우선권이 정확히 지켜지지 않거나 순서가 변경될 경우, 사회자가 이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지도 논쟁적이다. 복수의 후보자가 손을 들어 발언권을 요청할 경우, 사회자가 다음 발언 순서를 고지하였지만 일부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 순서에 답변하면서 그 답변에 이어 다른 후보자에게 다시 질의하여 토론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또 다른 문제는 주요 쟁점이 제기되었을 때 후보자들의 경쟁적인 발언권 요청은 사회자가 그 순서를 반복적으로 고지하여 토론의 흐름을 방해하는 원인일 수 있다.

이러한 후보자토론회 운영과정에서 사회자를 비롯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개입의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상호토론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권 요청이 있다면 어느 시점에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시점에 진행하고 있는 상호토론을 중단시키는 것은 적절한지, 그리고 이러한 사회자 개입이 적절한지이다. 즉, 어느 정도의 답변이나 토론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그 다음 발언권 요청을 한 후보자에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권한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나 사회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는 발언권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답변권이 우선이어야 하는가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사실 후보자의 질문에 대한 또 다른 후보자의 답변이 충분한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발언이 끝났다는 판단은 사회자의 몫으로 둔 상황에서 이때 발언권 요청을 사회자가 어떻게 고지할 것인가는 논쟁적일 수 있다. 이번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더라도 발언권과 답변권의 우선 순위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토론분야와 관련 없는 발언과 토론에 대한 사회자 역할의 한계이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의 첫 토론부터 토론분야에서 벗어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분야와 관계없는 주제가 반복적으로 질문되고 심지어 다음 차수의 후보자토론회에서 답변하기도 하였다. 사회자가 토론주제를 환기하는 발언을 반복하였으나 토론방향은 좀처럼 선회하지 않았다. 이를 어떻게 제지할 것인지, 그 판단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헌법재판소 판결 직후 진행된 이번 조기대선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사실상의 달 남짓 동안의 기간에 후보자토론회를 준비하여야 하였다. 정당 후보자 공천과 일부 정당의 후보교체론 등은 후보자토론회 세부계획 확정에 고민거리였다. 후보자의 중도사퇴 또한 그 세부계획을 조정하여야 하는 이유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통상적인 선거과정 중 하나인 후보자토론회가 압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였다. 여기에서 관건은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가 선거정보를 확인하는 기회였는지, 정당과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충분한 선거운동의 장이었는지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우선 고려할 부분은 정책경쟁을 도모하기에 충분하였는지이다. 통상적 정례 선거는 대선 전 세 차례 정도의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이번 대선의 정책토론회는 한 차례에 불과하였다. 유권자 요청에 부합하는 정책과 공약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정당정책을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당정책과 쟁점이슈에 대한 정당의 입장을 알리는 정책토론회가 후보자토론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 차례의 정책토론회 개최는 다소 아쉽다. 정책토론회와 후보자의 공약이 직접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더라도 정당의 쟁점이슈 제기와 정책 방향은 정책경쟁과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토대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토론분야에 부합하는 발언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시작발언을 비롯하여 공통질문과 공약검증토론에 대한 답변이나 토론 등 전반적으로 해당 토론분야에 적합하지 않은 토론내용이 적지 않았다. <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은 토론분야와 직접 관련 없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았다. 두 발언은 모두 일반적인 선거문구이거나 차수마다 반복되는 선거전략의 차원에 지나지 않은 발언이 다수였다. 공약보다는 쟁점이슈를 언급하는데 급급한 후보자들의 발언은 구체적인 공약을 확인하는 선거정보 제공 기능의 한계를 시사한다. 또한 후보자토론회마다 제시된 한 가지의 공통질문에 대한 시간총량제 토론과 공약검증토론에서 진행된 두 번의 주도권 토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2>와 <그림 4>에서 후보자별 질문의 키워드가

토론분야에 어느 정도 부합해 보이지만 각 후보자의 질문에 이은 상호토론이 진행되면서 점차 다른 이슈와 결합하면서 주제를 벗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이 해당 토론분야를 집중적으로 토론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조기대선의 책임을 묻는 질문이 각 차수마다 있었던 것은 조기대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토론주제에 대한 집중적 토론을 위한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대안은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 의존하였던 사회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정책토론을 위한 사회자 역할에 의존하기에는 사회자가 판단할 사안과 제한이 너무 많다는 한계가 있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요청한 경우에만 사회자가 토론주제를 환기하는 발언을 몇 차례 하였다. 이러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요청과 전달의 시간 차가 있어, 사회자가 이를 후보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또한 사회자의 토론분야 고지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들의 반응은 그다지 석연치 않아 토론분야 이외의 발언 제지에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자 역할의 또 다른 한계는 후보자의 발언권 요청에 대한 사회자의 인지와 이에 대한 고지 시점에 있다. 후보자의 발언권 요청 시에 후보자 간 상호토론이 진행되고 있다면 사회자는 어느 시점에 이를 고지할 것인지, 혹은 그 중간에 바로 다른 후보자에게 발언권을 부여할 것인가는 온전히 사회자의 몫으로 두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의 방식이 정책경쟁 제고에 기여하는가이다. 두 토론방식 모두 후보자에게 발언시간을 동등하게 부여하기 때문에, 동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후보자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려할 부분은 두 토론방식의 실질적 차이일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권영국 후보는 시간총량제 토론에서 질문을 받지 못하였고 <그림 4>와 같이 권영국 후보만이 세 후보자 모두와 토론을 이끌었고 다른 후보자들은 주도권 토론 요건에 맞춰 두 명의 후보자와 토론하였다. 주도권 토론에서 한 후보자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다른 후보자에게 단편적 질문을 하는 이번 후보자토론회의 패턴은 시간총량제 토론과 주도권 토론 운영의 토론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도권 토론이 한 후보자가 자신의 정책을 제시하여 후보자간 입장 차이에 집중해 토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관점에서 주도권 토론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 후보자가 질문하는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보장하는

최소 답변시간인 30초가 형식적 토론을 유도하는 조건일 수 있다면 두 가지 방식, 최소 답변시간을 늘리거나 후보자 수에 따라 최소 답변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토론 대상의 집중성과 토론방식 숙지이다.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토론되었다. 총 발언시간이 동등하기 때문에 후보자토론회에서 두 후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후보자들과 같더라도 정책 제시와 이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토론 대상의 집중성은 선거경쟁의 양상이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고 토론 대상의 선택은 후보자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로 제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초청 1차 이후 차수를 거듭할수록 다른 후보자들과의 토론이 비교적 원활해져, 후보자의 토론방식 숙지는 중요하였다. 1차와 2차 후보자토론회에 토론방식을 착각하는 후보자가 있었지만 후보자의 정보 숙지 미비나 일시적인 착각 중 어느 한쪽이라도 토론방식의 숙지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유권자의 선거정보 확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유권자들이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후보자토론회 개최 직전 후보자의 중도사퇴는 후보자토론회 진행에 영향을 미쳤다. 후보자 중도사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지상파 3사에게 재정적·행정적 비용의 부담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정치적 자유와 후보자토론회 운영의 현실화는 충돌하는 이슈일 수 있지만 후보자토론회 운영의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이 이미 확정된 상태로 준비된 후보자토론회가 참여 후보자 수 변화에 따른 조정 및 수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소요되고 유권자에게 선거정보를 충분히 알려주는 안정적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도사퇴로 인한 후보자토론회 불참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은 대체로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후보자토론회에서 나타난 특징과 패턴을 고려하여 후보자토론회가 유권자에게

정책선거를 위한 선거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는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민과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10여년 사이의 대선 투표율은 유권자의 정치적 관심 증가를 반영하여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시청률은 급감하고 있어, 후보자토론회의 기능과 역할을 위한 홍보와 방송의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관규.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 내용 평가.” 『사회과학연구』 14(2): 145-171.
- 김연중. 2008. “17대 대선 합동선거방송토론회의 설득 커뮤니케이션 효과.” 『한국소통학보』 9, 167-206.
- 김춘식·전영란. 2005. “TV토론회의 후보자 수사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1997년과 2002년 대통령 선거 비교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13(2): 33-53.
- Benoit, William L. and Glenn J. Hansen. 2004. “Presidential Debate Watching, Issue Knowledge, Character Evaluation, and Vote Choic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0(1): 121-144.
- Geer, John G. 1988. “The Effects of Presidential Debates on the Electorate’s Preferences for Candidat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16(4): 486-501.
- Gordon, Ann and Jerry L. Miller. 2004. “Values and Persuasion during the First Bush-Gore Presidential Debate.” *Political Communication* 21(1): 71-92.
- Jamieson, Kathleen Hall and David S. Birdsell. 1988. *Presidential Debates: The Challenge of Creating an Informed Electorat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roeder, Alan. 2008. *Presidential Debates: Fifty Years of High-Risk TV*.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나. 제2주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박 영 득(충남대 교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유권자 평가 분석

박영득(충남대), 강신재(연세대), 정다빈(충남대), 차현진(한국교통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세미나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
2025.07.28.

연구목적

- 후보자 토론회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이후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주요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하였음
-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대선으로서 선거일정, 후보자결정 및 등록, 선거운동 등 선거과정의 매우 급박하게 진행되었음
 - 비상계엄과 탄핵이라는 배경의 영향이 매우 커 정책과 공약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 되기에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므로 후보자토론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함
- 본 연구는 후보자토론회 제도, 인식, 효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후보자토론회의 실태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분석하며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후보자토론회의 제도적 측면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
 - 후보자토론회 개최횟수, 진행시간, 토론방식, 사회자 역할 등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인식
 -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흥미도, 유용성 등
-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 선거관심 및 참여, 후보자에 대한 평가, 호감도, 투표선택

조사개요

- 조사설계: 후보자토론회 전/후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는 온라인패널조사 방식으로 설계됨
- 조사방법: 엠브레인 패널을 활용한 웹조사
- 조사대상: 사전조사에서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현황에 따른 비례할당표집방식으로 2,151명을 표집한 뒤, 토론회 시청의향과 사후조사(2차 설문조사)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1,550명)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함
 - 사후조사는 사전조사 응답자 1,550 중 1,233명이 응답(패널 유지율 79.5%)
- 조사기간
 - 사전조사: 2025년 5월 15일~5월 17일
 - 사후조사: 2025년 6월 4일~6월 9일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

제도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구분	사전설문조사(%)	사후설문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66.5	63.3
어느 정도 필요하다	31.2	32.2
별로 필요하지 않다	1.9	3.8
전혀 필요하지 않다	0.4	0.7

-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을 긍정하는 비율은 사전조사에서 97.7%, 사후조사에서 95.5%
 - 사후조사에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 비율은 압도적인 수준임
 - 사후조사에서 필요성 긍정 비율의 감소는 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매우 넓음

제도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 개최 횟수의 적정성

구분	사전설문조사(%)	사후설문조사(%)
적당했다	72.2	45.4
부족했다	27.8	54.6

- 사전조사에서는 4회로 예정된 후보자토론회 개최횟수가 적당하다는 비율이 70%를 상회하였으나 사후설문조사에서는 45%로 급감
 - 사후조사에서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것은 이전 선거에서도 나타난 현상이지만 21대 대선에서는 변화 폭이 더 큼
 - 20대 대선 사전조사에서는 63.7%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사후조사에서는 53.1%가 충분하다고 응답
- 이는 기본적으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 간의 토론을 더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아쉬움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제도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 진행 시간의 적정성

구분	비율(%)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	42.8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	53.5
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	3.7

- 후보자토론회 진행시간(2시간)을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5%,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42.8%
 - 응답자들은 2시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진행됨에도, 후보자토론회를 2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할애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제도에 대한 평가: 공약검증토론에 대한 선호

구분	비율(%)
새로 도입된 공약검증토론이 더 좋다	53.7
별 차이 없다	32.1
기존의 주도권토론이 더 좋다	14.2

-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주도권토론'을 대체하는 '공약검증토론' 포맷이 도입되었음
 - 주도권토론: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9분) 동안 자유롭게 발언하거나 토론상대를 지목하여 토론하는 방식
 - 공약검증토론: 자신의 공약을 발표(1분 30초)한 뒤, 주어진 시간(6분 30초)동안 주도권토론을 진행
- 공약검증토론은 기존의 주도권토론 방식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음

제도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 토론방식 선호도

구분	비율(%)
시간총량제토론	14.2
공약검증토론	40.3
유권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16.2
사회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8.2
전문가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	11.5
후보가 공약 발표 후 1대1 토론 방식	9.3
기타	0.4

- 여러 토론방식을 열거하여 그 중 선호하는 토론방식을 질문한 경우에도 공약검증토론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현재 채택중인 시간총량제토론 방식은 유권자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포맷에 비해서도 낮은 선호도를 보임

*시간총량제토론: 각 후보가 주어진 시간 총량 내에서 주장, 반론, 재반론 등 사회자에게 발언권을 얻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

제도에 대한 평가: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문제점

구분	1순위 비율(%)	1+2+3순위 비율(%)
정책토론의 부재	23.1	57.4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방	49.1	76.3
후보들의 토론규칙 미준수	14.5	53.5
사회자의 제한된 역할	3.6	20.3
토론 및 답변 시간의 부적절한 배분	7.5	37.3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다	1.2	4.5
기타	1.0	2.1

- 후보자토론회 진행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네거티브 공방이며 그 뒤를 정책토론의 부재, 후보자의 토론규칙 미준수가 있었음

- 이 세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후보자토론회의 발전과제는 토론회의 도입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토론회 운영방식을 고안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제도에 대한 평가: 사회자 개입의 적정성 평가

구분	비율(%)
토론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	33.7
토론에 적절하게 개입했다	59.5
토론에 지나치게 많이 개입했다	6.8

- 토론회 진행에서 사회자가 발언시간 배분과 같은 기계적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토론규칙 미준수에 대한 지적 등 적극적 개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제기됨
 - 사회자 개입이 적절한 수준이었는지를 묻는 문항에서 60%에 가까운 응답자가 절절히 개입했다고 평가하였는데 이는 20대 대선에서의 조사 결과와 거의 동일
 - 그러나 20대 대선에서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33%로 상승
 - 즉, 전반적으로 사회자 개입은 적절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되나, 사회자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제도에 대한 평가: 사회자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1)

구분	비율(%)
매우 동의한다	24.4
동의한다	57.8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1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0

- 토론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후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하였으며 동의 비율이 약 83%
 - 토론을 토론답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들이 토론의 규칙을 준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토론 규칙 준수를 위해 사회자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는 것임

제도에 대한 평가: 사회자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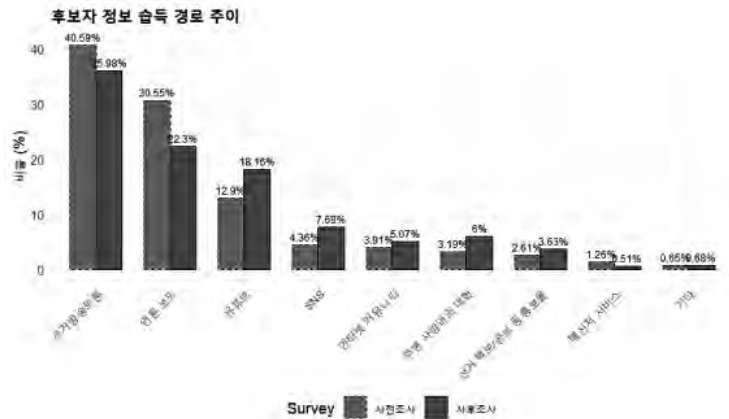
구분	재량권 확대(%)	지지 후보 제지(%)
매우 동의한다	22.9	25.5
동의한다	67.7	70.5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8.9	3.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5	0.6

- 사회자가 후보자의 규칙위반에 대해 개입하는 것은 곧 사회자의 재량권 확대를 의미
 - 사회자의 주관에 의해 후보자의 발언이 규칙위반인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이 인정되어야만 함
 - 재량권 확대에 찬성하는 비율은 90%를 상회
 -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제지될 경우에도 96%의 응답자가 사회자의 개입에 찬성한다고 응답
- 실무적으로 토론회 진행 중 사회자가 '어떻게' 개입여부를 판단할 것인지가 관건이나 사회자의 역할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된 것으로 보임

제도에 대한 평가: 소결

- 후보자토론회의 필요성, 횟수, 시간 등에 대한 유권자 평가 및 인식을 보았을 때 후보자토론회는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미 자리잡았음을 확인
- 공약검증토론 방식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 즉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발표가 형성한 토론의 맥락적 환경 위에서 토론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확인됨
- 사회자의 역할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확인됨
 -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회자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선거정보습득 수단 유용성 평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선거정보습득 수단 유용성 평가

- 후보자토론회는 다른 수단들과 비교했을 때 선거정보를 습득하는데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됨(사전: 40.59%, 사후: 35.98%)
 - 그러나 사후조사에서는 약 4% 가량 유용성 평가가 낮아짐
 - 언론보도의 유용성 하락폭이 8%로 가장 컸으며 유튜브의 유용성 평가는 사전조사에 비해 약 6% 증가
- 선거방송토론은 미디어환경의 변화에도 여전히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개인화된 디지털 미디어의 도전에 직면해 있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후보 자질 비교	정책 공약 비교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비교
매우 도움이 되었다	30.65	19.68	25.11
약간 도움이 되었다	44.85	43.77	42.46
그저 그렇다	16.91	23.74	22.1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6.51	9.93	8.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08	2.89	1.9

- 후보자토론회가 후보의 자질 비교, 정책과 공약비교,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 비교 각각에 대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
 - 종합적으로, 후보 자질비교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정책공약을 비교하는데 덜 도움이 된 것으로 파악됨
 - 물론 종합적으로는 세 목적에 대해 모두 긍정적인 의견임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공정성 평가

	19대	20대	21대
매우 그렇다	22.5	16.2	5.19
그런 편이다	55.9	54.6	63.3
별로 그렇지 않다	17.1	23.8	26.61
전혀 그렇지 않다	3.2	5.0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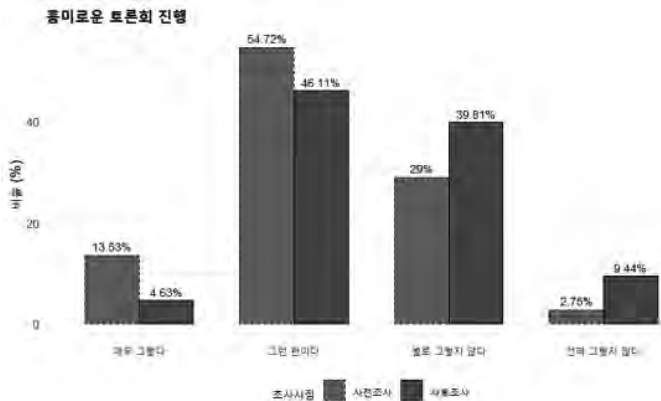
- 후보자토론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응답이 30%를 초과하였음
 - 과거 대선에 비해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하나, 실제로 후보자토론회 진행은 오히려 과도한 경직성이 문제가 되고 이전 선거에 비하여 실질적인 공정성 관련 문제가 뚜렷하게 제기되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
 - 공정성인식을 종속변수로 두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양당후보에 대한 호감도 차이가 클 수록 공정성인식이 낮아짐
 - 실제로 공정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양극화가 토론회의 공정성이 '낮아보이게' 만든 것일 수 있음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흥미도 평가

	19대	20대	21대
매우 그렇다	24.4	15.8	4.63
그런 편이다	50.7	48.4	46.11
별로 그렇지 않다	21.3	29.4	39.81
전혀 그렇지 않다	2.4	6.1	9.44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도 평가는 이전 대선에 비교해보았을 때 부정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남
 - 선거구도의 영향일 가능성?: 21대 대선은 선거 경쟁구도에서 이재명 후보의 우세가 처음부터 지속되어 상대적으로 흥미도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19대 대선 역시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으로 선거구도의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음
 - 즉 21대 대선을 19대 대선과 유사한 선거구도라고 본다면, 뚜렷하게 악화된 흥미도 평가는 후보자토론회에 큰 도전과제를 부여하고 있음
- 흥미도 평가의 사전/사후 조사 응답을 비교해보더라도 이전의 후보자 토론회의 흥미도 평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았음이 나타남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후보자토론회 진행의 흥미도 평가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 소결

- 종합적으로,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인식적 차원의 평가는 긍정적이나 과거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비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약화되었음이 확인됨
 - 후보자토론회에 대한 관심은 이전 선거에 비해 다소 감소
 - 후보자토론회는 다른 선거정보 획득 수단에 비해 높은 유용성 평가를 받았으나 사후조사에서 유용성 평가가 일정부분 감소
 - 후보자토론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이전 선거에 비해서는 긍정평가가 감소
 - 다만 이 부분은 토론회의 실질적 공정성과 무관할 가능성 고려해야 함
 - 후보자토론회의 흥미도 역시 이전 선거에 비해 낮은 수준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후보자토론회 시청 후 선거관심도 변화

구분	비율(%)
매우 높아졌다	19.3
조금 높아졌다	40.5
변화가 없었다	33.3
조금 낮아졌다	4.1
매우 낮아졌다	1.6

- 약 60%의 응답자가 후보자토론회 시청 이후 선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응답하고 있음
 - 토론회가 관심도 제고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토론회가 관심도를 오히려 낮추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6%에 못미치는 소수에 불과
 - 그러나 이전 대선과 비교해보면 선거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21대가 가장 낮고,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가장 높음
 - *긍정응답: 19대(74.6%), 20대(65.7%)
 - *부정응답: 19대(2.0%), 20대(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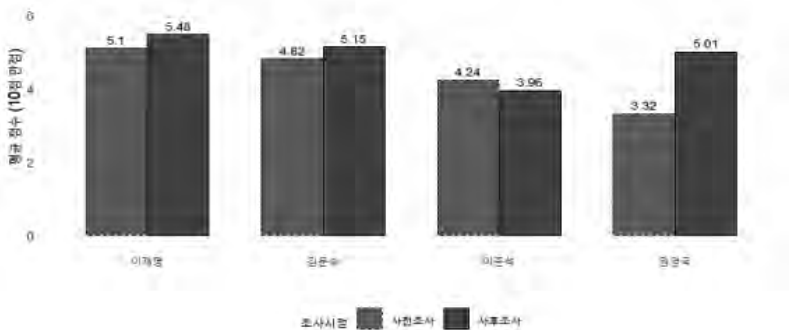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후보자토론회의 참여적 효과(선거 관련 대화)

구분	시청자(%)	미시청자(%)
매우 많이 했다	15.1	7.7
조금 했다	54	43.6
별로 하지 않았다	22.7	22.8
전혀 하지 않았다	7	15

- 주변 사람들과 선거 관련 대화 빈도를 조사한 결과, 시청자는 미시청자에 비해 대화 참여 빈도가 높아 참여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이 또한 이전 대선에서 나타난 효과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됨
 - *긍정: 19대(86.2%), 20대(77.6%)
 - *부정: 19대(13.8%), 20대(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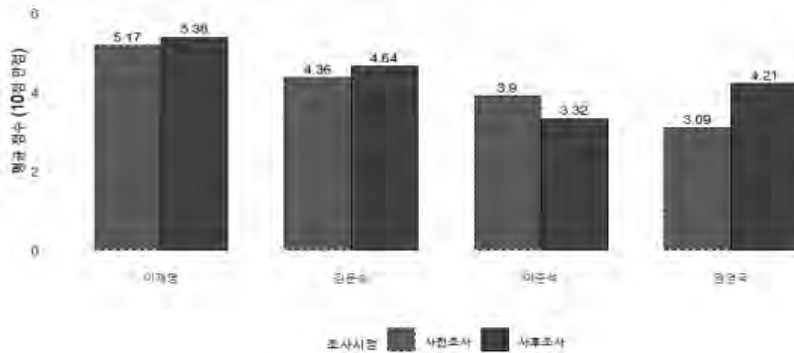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국익 vs.사익)

후보별 인식: 개인적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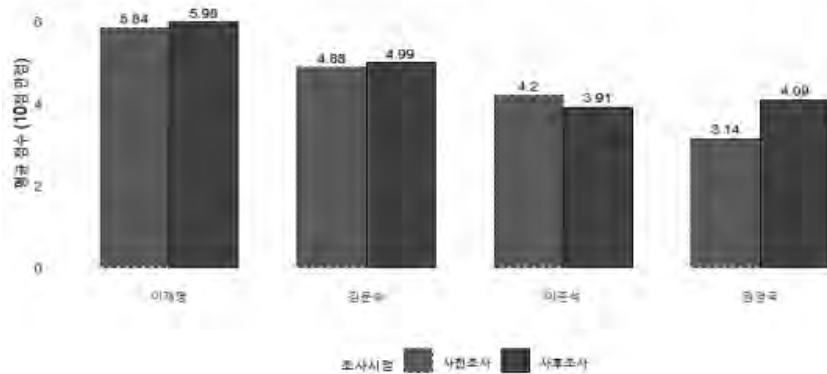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사회갈등 통합 역량)

후보별 인식: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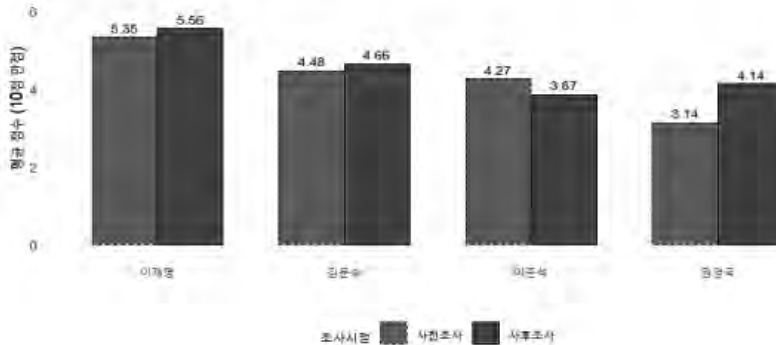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국정운영 능력)

후보별 인식: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능력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국가비전의 혁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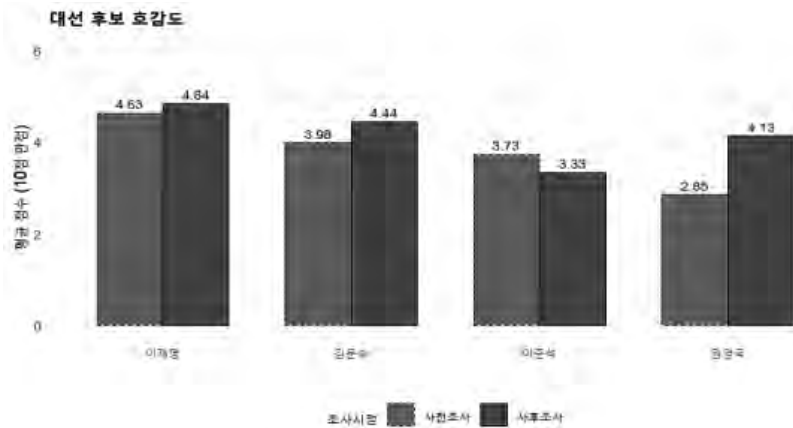
후보별 인식: 국가 발전을 위한 혁신적 비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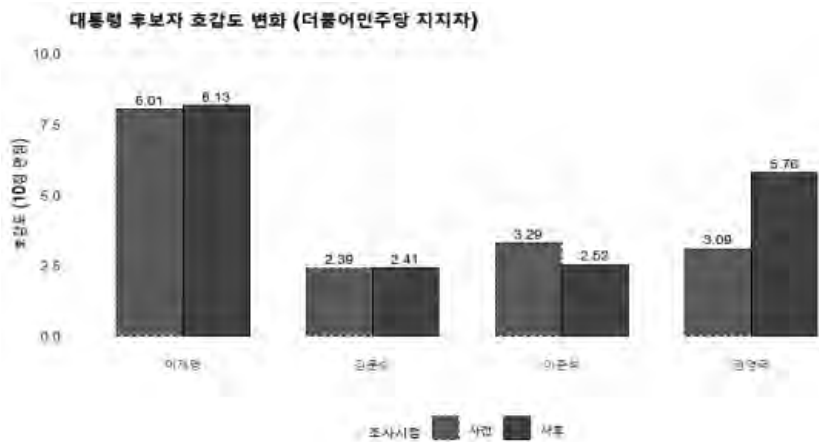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

- 유권자들이 각 후보자가 국가지도자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자질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전/사후 조사를 통해 질문
 -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선거 이전보다 이후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
 - 오직 이준석 후보만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이준석 후보의 문제발언 등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특히, 네 명의 후보 중 권영국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때문인지 모든 영역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토론회 이후 평가가 매우 향상되었음
 - 후보자토론회가 최종적인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더라도 후보자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는데는 의미있는 영향을 갖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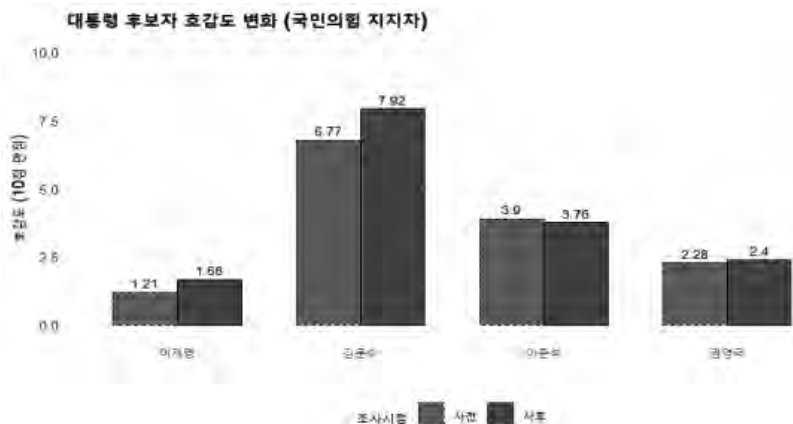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호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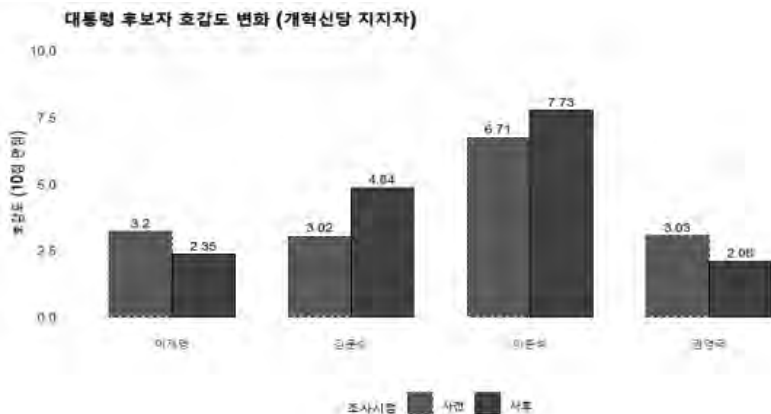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호감도[지지정당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호감도[지지정당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호감도[지지정당별])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대선후보에 대한 인식 변화(호감도)

- 후보에 대한 호감도 역시 모든 후보가 토론회 이후 호감도가 높아졌으나 이준석 후보만이 낮아졌음
 - 세부 응답 값의 변화를 보면 양당 후보들에 대한 극단적 평가는 완화되어 수렴하는 현상을 보였음
 - 인지도가 낮았던 권영국 후보는 부정적 인식을 크게 개선하였음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

구분	비율(%)
매우 많은 영향을 미쳤다	14
영향을 미친 편이다	41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34.9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8.7

- 후보자 선택에 미친 영향이 있었는지 직접 질문한 결과, 약 55%의 응답자들이 영향을 긍정하는 응답을 보임
 - 그러나 이 문항에서 '영향'은 다양한 방향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추가적 분석이 필요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후보자 지지변경에 미친 영향

구분	비율(%)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되었다	49.3%
별로 영향이 없었다	24.7%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바뀌었다	9%
지지하던 후보가 있었는데 아무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7.7%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토론회를 보고 지지하는 후보가 생겼다	6.7%

- 종합적으로 보면, 지지하던 후보를 더 지지하게 되는 강화효과가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후보 지지에 어떤 변화가 발생한 응답을 모두 합하면 약 23.4%
 - 지지변경 유형에 대한 다항회귀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시청빈도가 높아질수록 지지강화, 지지변경, 지지포기 확률이 높아짐
 - 후보자 선택에 대한 다항회귀분석 결과, 후보자토론회 시청빈도는 이재명 후보에게는 영향이 없었고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긍정적,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종합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후보자토론회의 효과: 소결

- 21대 대선 후보자토론회는 과거 대선 후보자토론회에 비해 다소 약화되었으나 인지적, 참여적 효과를 여전히 드러내고 있음
- 후보자선택 외에도 후보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에 대한 영향도 분석에 포함한 결과, 후보자토론회는 후보자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침
- 후보자 선택에 대해서는 전환효과보다는 강화효과가 우세하게 나타났음
 - 그러나 후보자에 대한 선택은 정당일체감 등 장기적 요인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선거구도, 유권자 개인의 전략적 선택 등 다양한 요인이 동시에 작동함
 - 후보자토론회라는 단기적인 요소가 '다른 요인에 비하여'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기대일 수 있으므로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

나. 제3주제

언론에서 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최 성 민(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 Ⅲ. 언론사의 시각으로 바라본 분석 -

KBS 선거방송기획단 최성민 팀장

2025. 7. 28.

목차

1. 서문
2.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요
3. 후보자 토론회 지상파 3사 시청률 현황
4.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
5. 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및 평가 내용 분석(사설 오피니언 포함)
6. 대선 후보자 토론회 관련 주요 이슈 및 논란
7. TV 토론회 중계방송 시청환경 변화
8. 개선 과제 및 제언
9. 결론

1. 서문

-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TV토론회를 방송사 및 언론사의 시각에서 분석
- 방송사는 후보자 간 정책 검증과 유권자 판단을 돕는 중립적 매개자 역할을 수행
- 후보자 토론회의 기획·제작·편성·진행 과정에서 방송사가 직면한 현실과 고민을 조명
- 향후 개선 방향 제시

2.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개요

○ 실시 내용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
초청	1차	5. 18.(일) 20:00~22:00	SBS 스튜디오	KBS·MBC·SBS 종합, 보도전문채널 NATV, 복지TV 등 동시 생중계
	2차	5. 23.(금) 20:00~22:00	KBS 스튜디오	
	3차	5. 27.(화) 20:00~22:00	MBC 스튜디오	
초청외		5. 19.(월) 22:00~23:00	SBS 스튜디오	

○ 토론회 주요 내용:

구 분		방 식	분 야
초청	1차	시간총량제 공약검증토론	경제
	2차		사회
	3차		정치
초청 외		시간총량제	국정전반

3. 후보자 토론회 지상파 3사 시청률 현황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프로그램	일시	출연자	전국시청률	프로그램	일시	출연자	전국시청률
초청1차	5.18(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권영국	14.9	초청1차	2.21(월)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17.5
초청2차	5.23(금)		12.6	초청2차	2.25(금)		18.6
초청3차	5.27(화)		14.2	초청3차	3.2(수)		17.9
초청외	5.19(월)	황교안, 송진호	3.7	초청외	2.22(화)	김민찬 등 9명	4.0

○ 2025년 7개 채널 총합 시청률 (KBS, MBC, SBS, TV조선, JTBC, 채널A, MBN)

1차 토론	19.6%	2차 토론	18.4%	3차 토론	20.5%
-------	-------	-------	-------	-------	-------

4. 후보자 토론회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역할

- 공공성과 중립성 유지
- 공론의 장 제공
- 시청 접근권 보장

5. 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및 평가 내용 분석(사설 오피니언 포함)

문화일보	겉도는 대선 TV 토론과 유권자 책무[포럼] (2025.05.26.)
노컷뉴스	[CBS칼럼] 대선후보 TV토론, 왜 유권자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2025.05.26.)
조선일보	[사설] 공약 깜깜이 대선, 판단 근거 역할 하는 TV 토론 (2025.05.27.)
동아일보	겉돌다 끝나는 맹탕 TV토론... "사회자,美처럼 돌직구 질문해야" (2025.05.27.)
중앙일보	[사설] 대선 TV토론 이런 식으로 안 된다 (2025.05.28.)
한국기협	정치도, 대선 TV토론도... "이대로는 안 된다" (2025.05.28.)
세계일보	"역대 가장 역겨운 TV 토론... 정치혐오, 토론 방식 개선해야" (2025.05.28.)
아이뉴스	정책검증 실종, '네거티브·비방전' 만...TV토론 왜 하나 (2025.05.28.)
오마이뉴스	이준석 혐오 발언에, 언론 책임론도... "선거방송토론위 책임 커" (2025.05.28.)
아시아경제	박근혜 탄핵 후에도 6번 했는데...논란 남긴 대선후보 TV토론 (2025.05.31.)
한겨레	선방위, 이준석 TV 토론 중 '성폭력 발언'에 재발방지 의견 낸다 (2025.06.04.)
한국일보	"대선 공약 검증 돋보여...TV토론과 발언 팩트체크는 부실 아쉬워" (2025.06.18.)

○ 주요 언론 보도 사례

(중앙일보)

TV토론의 횟수와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아시아경제)

"특정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되거나 정책 검증을 위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계는 여전하다는 지적

(한국기자협회)

"예상 답변만 내놓거나 말꼬리 잡기, 흠집 내기에만 열을 올리는 TV 토론 방식을 크게 바꿔야 한다"

"충분한 양자토론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오마이뉴스)

주제를 좁힌 맞수토론을 활성화해야 한다

○ 주요 언론 보도 사례

(노컷뉴스)

후보간 양자토론을 활성화하거나 전문가가 질의하고 후보자가 답하게 하는 방식을 추가로 도입할 필요
성

기존의 포맷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국일보)

"후보의 선의에 기대지 말고 유권자 입장에서 대담을 이끌어낼 방법이 필요하다"

(세계일보)

"사회자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후보자들이 일대일 방식으로 여러 번 토론하면 네거티브로 흘러가는 것을 막고

유권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

○ 언론이 평가한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 주요 내용 정리

- * 정책 대결보다는 후보자 간의 소모적인 신경전이나 인신공격과 비방에 치중
- * 시간 제약과 경직된 포맷, 현재의 형식과 내용으로는 효용성이 극히 제한적
- * 종편, 보도 채널, 유튜브, SNS 등 다양한 플랫폼 출현...변화된 미디어 환경
- * 혐오 발언 여과 없이 생방송. 토론회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
- * 사회자(moderator)의 적극적인 역할 부재, 사회자의 권한 강화로 적극적인 개입 필요
- * 방송인보다는 높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전문가를 사회자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
- * 짧은 토론회 시간에 광범위한 주제로 후보들을 충분히 검증하긴 어려워
- * 토론 횟수와 시간 늘려야...양자토론 등 다양한 토론 방식을 활용해야
- * 실시간 팩트체크 부족과 발언 내용 검증 체계 미비 우려

MBC [시선집중] (2025.05.29.) 출연 <송요훈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의견>

- TV토론, 유권자 중심 판단의 장... 후보의 태도·인성도 정보
- 토론 의제는 여론조사 기반, 국민이 결정한 주제
- 선관위가 주관하는 법정 토론, 공정성 중요
- 이준석 발언, 제어 어려워...판단은 유권자 몫
- 사회자 개입, 과도하면 흐름 끊겨...사후 제재만 가능
- 토론 규칙 위반, 법적 패널티 없어...투표로 심판해야
- 방송사 사정상 시간 제약... 선관위 권한·예산 강화 필요

○ 종합평가

TV토론이 유권자에게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운영상 구조적 한계(사회자 권한, 시간 제약, 제재 수단 부족)가 토론의 질을 저해 공정성 확보에도 도전 과제로 남음.

특히, 후보자 태도와 발언 통제가 어려운 구조
유권자의 비판적 시청 태도와 판단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현실을 재확인
선관위의 제도적 권한 강화와 방송 환경 개선은 앞으로의 과제로 남음.

6. 대선 후보자 토론회 관련 주요 이슈 및 논란

- 중계주관방송사별 화면 구성에 따른 차이
경향신문 토론회 ‘단독 샷’ 존재감, 이재명·이준석·권영국·김문수 순(2025.06.02.)

(주요 내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37.2분, 이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36.9분,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34.3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4.1분 순으로 단독 샷이 잡혔다.

○ 종합 의견

- * 각 방송사의 진행 PD의 성향과 그래픽 활용 등에 따라 방송사별 화면 구성 차이 발생
- * 단독 샷은 후보자의 발언 내용과 토론 방식에 따라 달라짐.
- * 상대 후보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경우 단독 샷은 줄어들고,
반면 정책 설명, 해명 위주의 본인 발언이 많을 경우 단독샷이 분량이 많음.
- * 후보자의 발언 중에도 상대 후보의 표정과 반응을 시청자에게 보여줘야 하기에
2분할 화면을 주로 사용 (시작, 마무리, 주제별 정견 발표에는 단독샷)
- * 중계방송사별 [자막, 그래픽, 수어 창, 포맷] 등 선관위 통합 제공 및 관리 필요

○ JTBC 유튜브 중계(실시간 팩트체크 관련)

한국일보 "대선 공약 검증 돋보여...TV토론과 발언 팩트체크는 부실 아쉬워"
(2025.06.16.)

(주요내용)

후보 주장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는 선거에서 특히 중요함에도 빈약했다.

검증할 내용이 많았던 TV토론회 관련 팩트체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팩트체크 기사 수가 절대적으로 적었다.

JTBC의 경우 TV토론회 발언을 실시간으로 검증했는데,

실시간까진 아니어도 적절히 다뤄줬다면 좋았겠다"

○ 종합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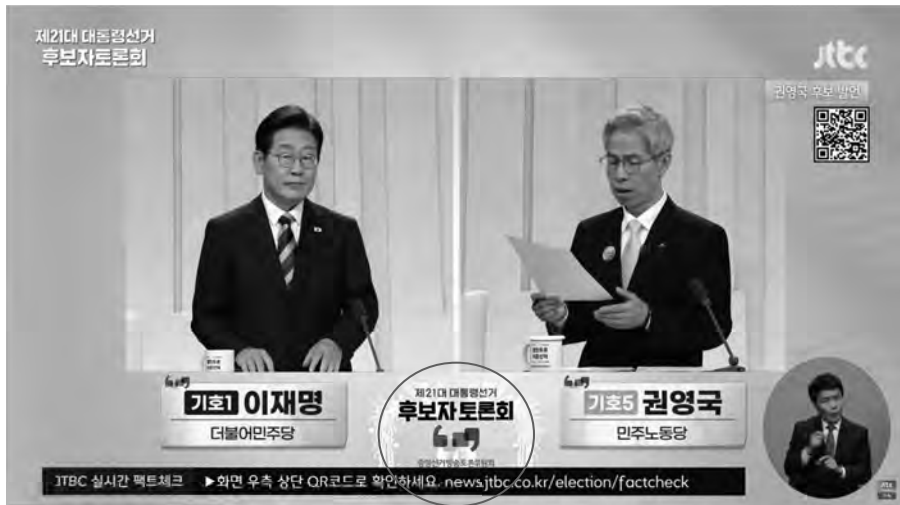
- * 후보자가 제시하는 통계, 정책효과, 상대후보 비판 내용 등이 사실에 기반했는지
실시간 및 방송 후 팩트체크는 후보자의 발언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중요
- * TV 토론의 신뢰도와 질 향상과 정치인의 책임정치 실현에 기여
- * 언론의 감시 기능 중 핵심 수단, 가짜뉴스 확산을 차단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는 역할

※ 단, 팩트체크는 방송사별로 별도의 온라인 페이지에서 운용 바람직

- * 후보자 얼굴이 가려지는 장면 발생 1.



* 선관위 로고와 토론회 제목이 가려지는 상황 발생 2.



○ 후보자 토론회 영상 저작권 관련, 유튜브 게시 등 활용에 관한 입장

미디어오늘 대선 TV토론, 유튜브로 중계하려면 200만 원 내라? (2025.06.11.)

(주요내용)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는 공공재 성격

하지만, 영상의 저작권은 중계 방송사 소유 → 유튜브 게시·활용 시 허가 필요

공익성 vs 상업성 기준 논쟁 지속—하지만 다수 언론은 유튜브 게시에 대해 공공성 강조

지상파, 대선 TV토론 유튜브 중계에 콘텐츠 이용료 100~500만 원 요구

선거법상 지상파 의무이자 저작권 독점...“시대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합의서 및 선거방송 콘텐츠 이용료]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 합의서

방송 3사(KBS, MBC, SBS) (이하 POOL이라 한다)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중계방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한다.

가. 중계대상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수반 31명,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나. 중계기간 : 2025년 5월부터 2025년 8월 2일 선거일까지
다. 중계대상, 중계횟수, 중계시간, 편집일시 등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결정내용에
이름

-1차 (5.13(일)) 30:00 세팅 / -2차 (5.13(일)) 30:00 세팅
-3차 (5.13(일)) 30:00 세팅 / -4차 (5.13(일)) 30:00 세팅
-5차 (5.13(일)) 30:00 세팅 / -6차 (5.13(일)) 30:00 세팅
-7차 (5.13(일)) 30:00 세팅 / -8차 (5.13(일)) 30:00 세팅
-9차 (5.13(일)) 30:00 세팅 / -10차 (5.13(일)) 30:00 세팅
-11차 (5.13(일)) 30:00 세팅 / -12차 (5.13(일)) 30:00 세팅
-13차 (5.13(일)) 30:00 세팅 / -14차 (5.13(일)) 30:00 세팅
-15차 (5.13(일)) 30:00 세팅 / -16차 (5.13(일)) 30:00 세팅
-17차 (5.13(일)) 30:00 세팅 / -18차 (5.13(일)) 30:00 세팅
-19차 (5.13(일)) 30:00 세팅 / -20차 (5.13(일)) 30:00 세팅
-21차 (5.13(일)) 30:00 세팅 / -22차 (5.13(일)) 30:00 세팅
-23차 (5.13(일)) 30:00 세팅 / -24차 (5.13(일)) 30:00 세팅
-25차 (5.13(일)) 30:00 세팅 / -26차 (5.13(일)) 30:00 세팅
-27차 (5.13(일)) 30:00 세팅 / -28차 (5.13(일)) 30:00 세팅
-29차 (5.13(일)) 30:00 세팅 / -30차 (5.13(일)) 30:00 세팅
-31차 (5.13(일)) 30:00 세팅 / -32차 (5.13(일)) 30:00 세팅
-33차 (5.13(일)) 30:00 세팅 / -34차 (5.13(일)) 30:00 세팅
-35차 (5.13(일)) 30:00 세팅 / -36차 (5.13(일)) 30:00 세팅
-37차 (5.13(일)) 30:00 세팅 / -38차 (5.13(일)) 30:00 세팅
-39차 (5.13(일)) 30:00 세팅 / -40차 (5.13(일)) 30:00 세팅
-41차 (5.13(일)) 30:00 세팅 / -42차 (5.13(일)) 30:00 세팅
-43차 (5.13(일)) 30:00 세팅 / -44차 (5.13(일)) 30:00 세팅
-45차 (5.13(일)) 30:00 세팅 / -46차 (5.13(일)) 30:00 세팅
-47차 (5.13(일)) 30:00 세팅 / -48차 (5.13(일)) 30:00 세팅
-49차 (5.13(일)) 30:00 세팅 / -50차 (5.13(일)) 30:00 세팅
-51차 (5.13(일)) 30:00 세팅 / -52차 (5.13(일)) 30:00 세팅
-53차 (5.13(일)) 30:00 세팅 / -54차 (5.13(일)) 30:00 세팅
-55차 (5.13(일)) 30:00 세팅 / -56차 (5.13(일)) 30:00 세팅
-57차 (5.13(일)) 30:00 세팅 / -58차 (5.13(일)) 30:00 세팅
-59차 (5.13(일)) 30:00 세팅 / -60차 (5.13(일)) 30:00 세팅
-61차 (5.13(일)) 30:00 세팅 / -62차 (5.13(일)) 30:00 세팅
-63차 (5.13(일)) 30:00 세팅 / -64차 (5.13(일)) 30:00 세팅
-65차 (5.13(일)) 30:00 세팅 / -66차 (5.13(일)) 30:00 세팅
-67차 (5.13(일)) 30:00 세팅 / -68차 (5.13(일)) 30:00 세팅
-69차 (5.13(일)) 30:00 세팅 / -70차 (5.13(일)) 30:00 세팅
-71차 (5.13(일)) 30:00 세팅 / -72차 (5.13(일)) 30:00 세팅
-73차 (5.13(일)) 30:00 세팅 / -74차 (5.13(일)) 30:00 세팅
-75차 (5.13(일)) 30:00 세팅 / -76차 (5.13(일)) 30:00 세팅
-77차 (5.13(일)) 30:00 세팅 / -78차 (5.13(일)) 30:00 세팅
-79차 (5.13(일)) 30:00 세팅 / -80차 (5.13(일)) 30:00 세팅
-81차 (5.13(일)) 30:00 세팅 / -82차 (5.13(일)) 30:00 세팅
-83차 (5.13(일)) 30:00 세팅 / -84차 (5.13(일)) 30:00 세팅
-85차 (5.13(일)) 30:00 세팅 / -86차 (5.13(일)) 30:00 세팅
-87차 (5.13(일)) 30:00 세팅 / -88차 (5.13(일)) 30:00 세팅
-89차 (5.13(일)) 30:00 세팅 / -90차 (5.13(일)) 30:00 세팅
-91차 (5.13(일)) 30:00 세팅 / -92차 (5.13(일)) 30:00 세팅
-93차 (5.13(일)) 30:00 세팅 / -94차 (5.13(일)) 30:00 세팅
-95차 (5.13(일)) 30:00 세팅 / -96차 (5.13(일)) 30:00 세팅
-97차 (5.13(일)) 30:00 세팅 / -98차 (5.13(일)) 30:00 세팅
-99차 (5.13(일)) 30:00 세팅 / -100차 (5.13(일)) 30:00 세팅

4월부 > 선거방송 콘텐츠 이용료

선거방송 콘텐츠 이용료

방송 3사(KBS, MBC, SBS) (이하 POOL이라 한다)가 중계제작자 제공하는 선거방송 콘텐츠의 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콘텐츠 내역 : 선거방송 영상 및 음향 (Clean Feed)

2. 이용대상 및 이용료

구분	이용대상	이용료	비고
A그룹	POOL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B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C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D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E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F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G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H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I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J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K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L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M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N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O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P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Q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R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S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T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U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V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W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X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Y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Z그룹	TV방송사	방송시간 당 1회씩 1회씩	(1회씩 1회씩)

3. 이용절차

3.1. POOL사

3.2. 방송사

3.3. 방송사

3.4. 방송사

3.5. 방송사

3.6. 방송사

3.7. 방송사

3.8. 방송사

3.9. 방송사

3.10. 방송사

3.11. 방송사

3.12. 방송사

3.13. 방송사

3.14. 방송사

3.15. 방송사

3.16. 방송사

3.17. 방송사

3.18. 방송사

3.19. 방송사

3.20. 방송사

3.21. 방송사

3.22. 방송사

3.23. 방송사

3.24. 방송사

3.25. 방송사

3.26. 방송사

3.27. 방송사

3.28. 방송사

3.29. 방송사

3.30. 방송사

3.31. 방송사

3.32. 방송사

3.33. 방송사

3.34. 방송사

3.35. 방송사

3.36. 방송사

3.37. 방송사

3.38. 방송사

3.39. 방송사

3.40. 방송사

3.41. 방송사

3.42. 방송사

3.43. 방송사

3.44. 방송사

3.45. 방송사

3.46. 방송사

3.47. 방송사

3.48. 방송사

3.49. 방송사

3.50. 방송사

3.51. 방송사

3.52. 방송사

3.53. 방송사

3.54. 방송사

3.55. 방송사

3.56. 방송사

3.57. 방송사

3.58. 방송사

3.59. 방송사

3.60. 방송사

3.61. 방송사

3.62. 방송사

3.63. 방송사

3.64. 방송사

3.65. 방송사

3.66. 방송사

3.67. 방송사

3.68. 방송사

3.69. 방송사

3.70. 방송사

3.71. 방송사

3.72. 방송사

3.73. 방송사

3.74. 방송사

3.75. 방송사

3.76. 방송사

3.77. 방송사

3.78. 방송사

3.79. 방송사

3.80. 방송사

3.81. 방송사

3.82. 방송사

3.83. 방송사

3.84. 방송사

3.85. 방송사

3.86. 방송사

3.87. 방송사

3.88. 방송사

3.89. 방송사

3.90. 방송사

3.91. 방송사

3.92. 방송사

3.93. 방송사

3.94. 방송사

3.95. 방송사

3.96. 방송사

3.97. 방송사

3.98. 방송사

3.99. 방송사

3.100. 방송사

○ 종합 의견

- * EBS, KTV, 국회방송, 아리랑TV, 한국선거방송, 복지TV 등에는 무상으로 제공
- * 그 외의 토론회 방송 전후로 붙는 광고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는 방송사와 유튜브를 기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언론사들은 유상 제공
-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TV토론은 타 방송사나 언론사의 관심도 낮고 수증계 요청 없음.
- * 선거방송 TV토론회 의무 중계 방송사 확대 방안 검토해야

○ 토론자 발언 내용 등 일반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심의 관련 적용 여부

연합뉴스 선방위, 이준석 토론발언 관련 중앙선거방송토론위에 의견 내기로
(2025.06.04.)

(주요 내용)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

21대 대선 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토론회를 주관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재발 방지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내기로 했다.

▶ 적용조항: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공정성)제1항, 제5조(공정성)제2항, 제6조(정경성)제1항, 제12조(사실보도)제1항				
제205-대선-05-0022호	KBS-TV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2025.05.27 화, 20:00~22:00)		인원
○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진행자 또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불우유지)제5호				
제205-대선-05-0023호	MBC-TV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토론회* (2025.05.27 화, 19:55~21:55)		인원
○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진행자 또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TV 토론회를 수중계한 방송사에 보낸 내용				
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불우유지)제5호				
	SBS-TV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3차 토론회-결정본회* (2025.05.27 화, 19:50~22:00)		인원
○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진행자 또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 적용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불우유지)제5호				
제205-대선-05-0025호	OBS-TV	「당권·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 (2025.05.27 화, 20:00~22:10)		인원
○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여성 혐오적 발언을 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고 다수의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주었으며, 진행자 또한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됨.				

○ 종합 의견

- * 선거방송토론은 선거방송심의 규정(공직선거법, 방송법) 적용 대상 (사후 심의)
- * 비방·허위사실 유포 금지 엄격히 적용
- * 상호 비방·정책 회피 남발 시 제재 조치 가능
- * 차후 토론회에서는 후보자가 발언을 신중히 하도록 사전 고지할 필요가 있음

○ 후보 마무리발언 때 들린 웃음소리에 대해 해명

성창경TV TV토론 김문수 후보 마무리 발언 중 터져나온 기괴한 소리(2025.05.24.)

(내용)

[국민의힘 팩트체크단 성명서]

■ KBS는 어제 TV토론 김문수 후보 마무리발언 때 들린 웃음소리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어제(5. 23.) 대선 방송토론 역사상 유례없는 해괴한 방송사고가 일어났습니다.

KBS가 키(Key)사가 되어 제작한 22대 대선 2차 TV토론에서

김문수 후보가 마무리 발언을 할 때 비웃는 소리로 들리는 소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 종합 의견

토론회 생방송 중 진행자의 '목 가다듬는 소리'가 MC 마이크를 통해 방송된 것.

김문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 때 별도의 음향이 유입되는 사고 인정
 생방송 중 진행자의 목 가다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방송된 소리로 확인
 생방송 토론에 개입해야 하는 진행자의 마이크가 방송 중 켜있기에 발생한 사고
 철저한 원인분석과 함께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생방송 토론 중계시 오디오 사고 빈발...주의 요망

7. TV 토론회 중계방송 시청환경 변화

① 레거시 미디어 지상파의 침체

디지털 환경의 확산 스마트폰 보급과 유튜브 등 플랫폼 이용 증가

시청자의 능동성 증가 원하는 정보만, 원하는 시간에 선택적으로 소비

지상파 중심성 약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TV 없는 집' 증가

정보 유통 속도의 변화 짧고 자극적인 정보가 더 빨리 확산

○ 전통 TV 미디어 시청률의 감소

○ 유튜브 및 온라인 플랫폼의 부상

○ 시청 방식의 개인화·선택적 소비

○ SNS 확산과 이슈화 속도 증가

② 법정 토론회 의무 대상 방송사 확대 고려

○ 법정토론 의무방송사 :

기존 지상파 3곳 ⇒ 종편 4곳, 보도채널 2곳 등 9곳으로 확대 고려

* 현재 공직선거법상 TV토론회 의무 방송사는 지상파 3개 사로 한정

* 반면, 2022년 공직선거법 개정(2022. 1.21.)으로 방송사의 수익과 연관된 연설방송, 방송광고는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편성 채널로 확대 실시함.

8. 개선 과제 및 제언

○ 토론 형식 .내용	1;1 토론 등 후보자 간 상호 토론 강화 (법제화) 실시간 댓글질문 반영 시스템 도입 (채팅, ARS, 앱 등)
○ 토론 시간 . 화면	토론 횟수와 시간 확대 편성 (토론 의무 방송사 대상 확대 시 가능) 중계방송사 자막, 그래픽, 수어 창, 포맷 등 통합 관리 및 제공 필요
○ 사회자	전문성과 중립성, 경험을 갖춘 사회자 선정 발언 제한, 패널티 부여 등 사회자 권한 강화
○ 검증기능	AI 기반 실시간 팩트체크 시스템 도입 발언 내용 실시간 검증 후 사회자 질문
○ 방송 플랫폼	TV토론 의무 대상 종편, 보도채널 등으로 확대(선거법 개정) 유튜브, SNS 등 변화된 미디어 기술 적극 활용

9. 결론

후보자 TV토론은 유권자를 돕는 민주주의 실천의 무대

방송사의 영향력은 줄고, 한계도 드러나...아직까지 '정치 커뮤니케이션 설계자' 역할 수행

언론사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제도적 개선과 지원 고민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부록

1. 주요업무 추진 연표
2. 토론진행표
3. 언론보도 현황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1. 주요 추진 연표

2024년

- | | |
|---------|-----------------|
| 12. 3. | 대통령 비상계엄령 공표 |
| 12. 14. |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

2025년

- | | |
|-----------------|---|
| 3. 5. | (제1차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일반사항 안내, 방송 시간 협의, 중계방송 확대 논의 |
| 4. 4.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 |
| 4. 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일 결정·공표 |
| 4. 8. |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관리단 편성·운영(3팀) |
| 4. 10. | (제2차 위원회의) 정책토론회 개최일시·장소 등 결정 |
| 4. 11. ~ 4. 15. | 정책토론회 의제선정 국민여론조사 실시(한국리서치) |
| 4. 16 ~ 5. 6. | 후보자토론회 토론의제개발 연구용역 실시(한국정당학회) |
| 4. 18. | (제2차 방송관계자 업무협의회) 후보자토론회 관련 세부사항 논의 |
| 4. 21. | (제1차 전문위원회의) 정책토론회 토론주제·진행방식 및 후보자토론회 진행방식 검토 |
| 4. 22. | (제1차 준비소위원회의) 정책토론회 토론주제·진행방식 및 사회자 검토 |
| 4. 23. | (제3차 위원회의) 정책토론회 주제·진행방식 결정, 사회자 선정 |
| 4. 24. |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KBS, 정책토론회) |
| 4. 28. |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기획보도 방송제작 참여 |
| 4. 29. |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KBS·SBS·MBC) |
| 4. 29. | (제2차 준비소위원회의)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검토 |
| 4. 30. | (제4차 위원회의) 정책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

2025년	
4. 30. ~ 7. 31.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 연구용역 실시(한국정치학회)
5. 1. ~ 5. 2.	후보자토론회 의제선정 국민여론조사 실시(엠브레인퍼블릭)
5. 2.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4개 정당)
5. 7.	(제2차 전문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검토
5. 8.	(제3차 준비소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등 검토
5. 9.	(제5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선정
5. 10. ~ 5. 11.	후보자등록기간
5. 12. ~ 6. 2.	선거운동기간
5. 12.	(제6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등 선정, 초청의 후보자토론회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추가 결정
5. 12.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SBS·MBC, 후보자토론회)
5. 13.	방송제작 실무회의 개최(KBS, 후보자토론회)
5. 15.	(제4차 준비소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등 검토
5. 16.	(제7차 위원회의) 후보자토론회 질문사항 선정
5. 16.	SBS 유튜브 채널 '비디오머그' 기획보도 방영
5. 18.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1차, SBS)
5. 19.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외, SBS)
5. 23.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2차, KBS)
5. 27.	후보자토론회 개최(초청 3차, MBC)
7. 28.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9. 12.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토론진행표

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일시		2025. 5. 2.(금) 10:00~12:00(120분 생방송)		장소	KBS TS-4 스튜디오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 메인 타이틀		20초	10:00:00	VCR		
2	오프닝	▶ 사회자 오프닝 및 토론자 소개		2분	10:02:00		김 용 준 (KBS 기자)	
3	주제 · 진행방식 설명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	10:03:00			
4	시작발언	▶ 박수민/김한규/임승호/권영국 토론자 순 시작발언(각 1분)		4분30초 (4분)	10:07:30			
5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1: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7분 (6분30초)	10:14:30	MC/ S/T 수어 MIX	박 수 민 (국민의힘 국회의원)	
		▶ 김한규/임승호/권영국/박수민 토론자 순 답변(각 1분30초)	토론자 01:30					
6	시간총량제 토론	▶ 김한규 토론자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토론자당 총 7분		토론자 01:30 07:00	30분 (28분)			10:44:30
7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2: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7분 (6분30초)	10:51:30			
		▶ 임승호/권영국/박수민/김한규 토론자 순 답변(각 1분30초) (※ 수어통역사 교체)	토론자 01:30					
8	시간총량제 토론	▶ 임승호 토론자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토론자당 총 7분 ▶ 사회자 Bridge		토론자 01:30 07:00	30분 (28분)	11:21:30		
9	주도권토론	[주제3: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 권영국/박수민/김한규/임승호 토론자 순 주도권토론(각 7분)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토론자 07:00	29분 (28분)	11:50:30	김 한 규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 정책조정위원장)	
				답변 00:30				
10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박수민/김한규/임승호/권영국 토론자 순 마무리발언(각 1분)		토론자 01:00	5분 (4분)	11:55:30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11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11:56:30		김용준 (KBS 기자)	
12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11:56:50	S/T F.S	위원회 명단	
13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11:57:00	VCR		

나.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1) 초청 1차

일시	2025. 5. 18.(일) 20:00~22:00(120분 생방송)			장소	SBS 상암 공개홀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사회자 오프닝		1분	20:01:00		
3	시작발언	▶ 김문수/권영국/이준석/이재명 후보 순 시작발언(각 1분)	후보자 01:00	4분30초 (4분)	20:05:30		편 상 욕 (SBS 기자) 편 상 욕
4	주제 등 안내	▶ 사회자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	20:06:30		
5	사회자 공동질문	[주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권영국/이준석/이재명/김문수 후보 순 공동질문 답변(각 1분30초)	후보자 01:30	7분 (6분30초)	20:13:30		
6	시간총량제 토론	▶ 권영국 후보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후보자당 총 6분30초	후보자 01:30 06:30	28분 (26분)	20:41:30		
7	공약검증 토론 ①	[주제: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 사회자 Bridge ▶ 이준석/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 순 공약발표(각 1분30초) ▶ 이준석/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 순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후보자 01:30 후보자 06:30 답 변 00:30	7분 (6분30초) 28분 (26분)	20:48:30 21:16:30	MC/ S/T 수어 MIX	김 문 수 기호 2번 국민의힘 권 영 국 기호 5번 민주노동당 이 준 석 기호 4번 개혁신당 이 재 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8	공약검증 토론 ②	[주제: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 사회자 Bridge ▶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후보 순 공약발표(각 1분30초) ▶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후보 순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후보자 01:30 후보자 06:30 답 변 00:30	7분 (6분30초) 28분 (26분)	21:23:30 21:51:30		
9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김문수/권영국/이준석/이재명 후보 순 마무리발언(각 1분) ※ 시간이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후보자 01:00	5분 (4분)	21:56:30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30		편 상 욕 (SBS 기자)
11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1:57:50	S/T F.S	위원회 명단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8:00	VCR	

부록

2) 초청 2차

일시		2025. 5. 23.(금) 20:00~22:00(120분 생방송)		장소	KBS 본관 TS-4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2	오프닝	▶ 사회자 오프닝		1분	20:01:00		이 윤 희 (KBS 기자)
3	시작발언	▶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후보 순 시작발언(각 1분)	후보자 01:00	4분30초 (4분)	20:05:30		
4	주제 등 안내	▶ 사회자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	20:06:30		
5	사회자 공통질문	[주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7분 (6분30초)	20:13:30		
		▶ 김문수/권영국/이준석/이재명 후보 순 공통질문 답변(각 1분30초)	후보자 01:30				
6	시간총량제 토론	▶ 김문수 후보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후보자당 총 6분30초		후보자 01:30 06:30	28분 (26분)	20:41:30	이 재 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 문 수 기호 2번 국민의힘 권 영 국 기호 5번 민주노동당 이 준 석 기호 4번 개혁신당
7	공약검증 토론 ①	[주제: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사회자 Bridge		7분 (6분30초)	20:48:30		
		▶ 권영국/이준석/이재명/김문수 후보 순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보자 01:30				
			▶ 권영국/이준석/이재명/김문수 후보 순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후보자 06:30 답 변 00:30	28분 (26분)	21:16:30	
8	공약검증 토론 ②	[주제: 기후 위기 대응 방안] ▶ 사회자 Bridge		7분 (6분30초)	21:23:30		
		▶ 이준석/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 순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보자 01:30				
			▶ 이준석/이재명/김문수/권영국 후보 순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후보자 06:30 답 변 00:30	28분 (26분)	21:51:30	
9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이재명/김문수/권영국/이준석 후보 순 마무리발언(각 1분)	후보자 01:00	5분 (4분)	21:56:30		
		※ 시간이 넘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30		이 윤 희 (KBS 기자)
11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1:57:50	S/T F.S	위원회 명단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8:00	VCR	

3) 초청 3차

일시		2025. 5. 27.(화) 20:00~22:00(120분 생방송)		장소	MBC 상암 미디어센터 D공개홀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 메인 타이틀		20초	20:00:00	VCR	전 종 환 (MBC 아나운서)	
2	오프닝	▶ 사회자 오프닝		1분	20:01:00			
3	시작발언	▶ 이재명/권영국/김문수/이준석 후보 순 시작발언(각 1분)	후보자 01:00	4분30초 (4분)	20:05:30			
4	주제 등 안내	▶ 사회자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1분	20:06:30			
5	사회자 공통 질문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7분 (6분30초)	20:13:30	MC/ S/T 수어 MIX	이 재 명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 권영국/김문수/이준석/이재명 후보 순 공통질문 답변(각 1분30초)	후보자 01:30					
6	시간총량제토론	▶ 권영국 후보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진행방식 설명: 후보자당 총 6분30초	후보자 01:30 06:30	28분 (26분)	20:41:30			
7	공약검증 토론 ①	[주제: 정치 개혁과 개헌] ▶ 사회자 Bridge		7분 (6분30초)	20:48:30			권 영 국 기호 5번 민주노동당
		▶ 김문수/이준석/이재명/권영국 후보 순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보자 01:30					
		▶ 김문수/이준석/이재명/권영국 후보 순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후보자 06:30	28분 (26분)	21:16:30			
			답 변 00:30					
8	공약검증 토론 ②	[주제: 외교·안보 정책] ▶ 사회자 Bridge		7분 (6분30초)	21:23:30	김 문 수 기호 2번 국민의힘		
		▶ 이준석/이재명/권영국/김문수 후보 순 공약발표(각 1분30초)	후보자 01:30					
		▶ 이준석/이재명/권영국/김문수 후보 순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에게 질문, 답변시간 30초 보장	후보자 06:30	28분 (26분)	21:51:30			
			답 변 00:30					
9	마무리발언	▶ 사회자 Bridge ▶ 이재명/권영국/김문수/이준석 후보 순 마무리발언(각 1분)	후보자 01:00	5분 (4분)	21:56:30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10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1분	21:57:30		전 종 환 (MBC 아나운서)	
11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1:57:50	S/T F.S	위원회 명단	
12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1:58:00	VCR		

부록

4) 초청외

일시		2025. 5. 19.(월) 22:00~23:00(60분 생방송)		장소	SBS 상암 공개홀		
	항 목	내 용		소요시간	리얼타임 (누적)	영 상	비 고
1	타이틀	▶ 메인 타이틀		20초	22:00:00	VCR	고 희 경 (SBS 기자)
2	오프닝	▶ 사회자 오프닝		1분	22:01:00	MC/ S/T 수어 MIX	
3	시작발언	▶ 황교안/송진호 후보 순 시작발언(각 1분30초)	후보자 01:30	3분 (3분)	22:04:00		
4	주제 등 안내	▶ 주제 및 진행방식 안내		30초	22:04:30		
5	사회자 공통질문 ①	[주제1: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4분 (3분30초)	22:08:30		
		▶ 송진호/황교안 후보 순 공통질문 답변 (각 1분30초)	후보자 01:30				
6	시간총량 제토론 ①	▶ 송진호 후보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총량)	후보자 01:30 06:00	13분 (12분)	22:21:30		
7	사회자 공통질문 ②	[주제2: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4분 (3분30초)	22:25:30		
		▶ 황교안/송진호 후보 순 공통질문 답변 (각 1분30초)	후보자 01:30				
8	시간총량제 토론 ②	▶ 황교안 후보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총량)	후보자 01:30 06:00	13분 (12분)	22:38:30		
9	사회자 공통질문 ③	[주제3: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4분 (3분30초)	22:42:30		
		▶ 송진호/황교안 후보 순 공통질문 답변 (각 1분30초)	후보자 01:30				
10	시간총량제 토론 ③	▶ 송진호 후보 발언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 총량)	후보자 01:30 06:30	13분 (12분)	22:55:30		
11	마무리 발언	▶ 사회자 Bridge ▶ 황교안/송진호 후보 순 마무리발언(각 1분)	후보자 01:00	2분 (2분)	22:57:30		
		※ 시간이 남거나 모자라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 조정					
12	클로징	▶ 사회자 클로징		30초	22:58:00		고 희 경 (SBS 기자)
13	엔딩	스튜디오 F.S + 엔딩스크롤		20초	22:58:20	S/T F.S	위원회 명단
14	타이틀	엔딩 타이틀		10초	22:58:30	VCR	

3. 언론보도 현황

가. 보도자료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4. 23.
총 10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초청 후보자토론회 3회, 초청 외 후보자토론회 1회 개최

부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초청대상’ 후보자 3회, 초청 외 후보자 대상 1회로, 총 4회 개최한다.

3회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5월 18일(일) 경제 분야(초청 1차, SBS), ▲5월 23일(금) 사회 분야(초청 2차, KBS), ▲5월 27일(화) 정치 분야(초청 3차, MBC)로 각각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입식 토론으로 진행된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석 이상 의석을 가진 정당 추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추천 후보자, ▲언론기관이 4월 12일(토)부터 5월 11일(일)까지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이다.

‘초청대상’ 후보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5월 12일(월) 위원회의를 열어 확정한다.

세 차례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모두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총량제토론’을 우선 진행하고,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시간총량제토론’은 후보자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 총량 내에서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이다. ‘공약검증토론’은 모든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한 후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상대 후보자를 지목하여 토론함으로써 토론의 역동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SBS)는 5월 19일(월)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좌식으로 진행된다.

모든 후보자토론회는 KBS, MBC, SBS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1부.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개최 공표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2025년4월23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부록

□ 개최일시·장소 등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방송방법	토론분야
1차	2025. 5. 18.(일) 20:00~22:00	SBS 스튜디오 (상암)	KBS, MBC, SBS 동시 중계	생방송	경제
2차	2025. 5. 23.(금) 20:00~22:00	KBS 스튜디오 (여의도)			사회
3차	2025. 5. 27.(화) 20:00~22:00	MBC 스튜디오 (상암)			정치

■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구 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방송방법	토론분야
-	2025. 5. 19.(월) 22:00~24:00	SBS 스튜디오 (상암)	KBS, MBC, SBS 동시 중계	생방송	국정전반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및 자막방송 실시

2 진행방식

가. 기본구성

구 분		진행방식	비고
초청	경제분야 사회분야 정치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1) •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2) • 마무리발언 	입식 (스탠딩)
	양자토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분야' 주도권토론 • [자유주제]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초청외	9명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1, 2]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좌식
	10명~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주제]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16명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작발언 • 후보자 공약발표 • 마무리발언 	

나. 진행방식

■ (초청대상) 시간총량제토론+후보자 공약검증토론

[시작발언 ➡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후보자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30초 총량)	26분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분야 주요 공약〉 • C/D/A/B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 분야 주요 공약〉 • D/A/B/C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D/A/B/C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마무리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계		104분30초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공약발표시간(1분30초) 고정

구 분	6명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	각 3분30초	각 5분	각 6분30초	각 9분30초

세부 운영 방법

■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모든 후보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약발표 후 같은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함.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하여야 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시간 운용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함.
 - 상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상대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
 - 진행 중 사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은 멈추지 않음.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함.
-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후보자(A)가 다른 후보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후보자(B)의 잔여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후보자(A)는 후보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초청: 양자토론안) 시간총량제토론 + 주도권토론

[시작발언 ➡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 후보자(각 1분30초)	3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3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10분 총량)	20분
주도권토론	<‘○○분야’> • 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20분)	40분
	<자유주제> • B/A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20분)	40분
마무리발언	• A/B 후보자(각 1분)	2분
계		108분30초

부록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 2명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후보자에게 우선 발언하도록 함.

■ 주도권토론

- 정해진 순서에 따라 각 후보자가 주도권을 갖고 토론 진행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에게 "답변시간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시간 운용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함. 그러나 상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상대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
 - 진행 중 사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은 멈추지 않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초청외) 후보자수 9명 이하인 경우 (※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시작발언 ➡ <주제1, 2>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E 후보자(각 1분30초)	7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8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8분 총량)	40분
	<주제2>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D/E/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8분
	• C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8분 총량)	40분
마무리발언	• D/E/A/B/C 후보자(각 1분)	5분
계		108분30초

〈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

구 분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주제별) 시간총량제토론	각 15분	각 11분	각 8분	각 6분	각 5분	각 4분	각 3분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함.
-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후보자(A)가 다른 후보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후보자(B)의 잔여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후보자(A)는 후보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초청외) 후보자수 10명~15명인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시작발언 ➡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E/F/G/H/I/J 후보자(각 1분30초)	15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 총량제토론	〈주제〉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E/F/G/H/I/J/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15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7분 총량)	70분
마무리발언	• C/D/E/F/G/H/I/J/A/B 후보자(각 1분)	10분
계		110분30초

〈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

구 분	7명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시간총량제 토론	각 11분	각 9분	각 8분	각 7분	각 6분	각 5분	각 4분	각 3분30초	각 3분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함.
-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후보자(A)가 다른 후보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후보자(B)의 잔여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후보자(A)는 후보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초청외) 후보자수 16명 이상인 경우 (※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시작발언 ➡ 후보자 공약발표 ➡ 마무리발언]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E/F/G/H/I/J/K/L/M/N/O/P 후보자 (각 1분30초)	32분
후보자 공약발표	〈후보자 대표 공약〉 ■ B/C/D/E/F/G/H/I/J/K/L/M/N/O/P/A 후보자 공약발표(각 2분*2)	64분
마무리발언	• C/D/E/F/G/H/I/J/K/L/M/N/O/P/A/B 후보자 (각 1분)	16분
계		104분

〈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

구 분	13명	14명	15명	16명	17명	18명	19명	20명
후보자 공약발표	①각 3분	①각 2분 30초	①각 2분 30초	①각 2분	①각 2분	각 3분30초	각 3분	각 3분
	②각 3분	②각 2분 30초	②각 2분	②각 2분	②각 2분			

세부 운영 방법

■ 후보자 공약발표

- 각 후보자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된 순서대로 주어진 시간 동안 대표 공약을 발표함.
- (13~16명인 경우) 각 후보자의 공약발표를 2회 실시함. 단, 두 번의 공약발표 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1회 발표가 끝나는 즉시 잔여발언시간이 있어도 소멸된 것으로 봄. (18명 이상인 경우) 각 후보자의 공약발표를 1회만 실시함. 공약발표의 발언시간은 나눠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언을 종료하면 잔여발언시간이 있어도 소멸된 것으로 봄.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4. 30.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경제·사회 분야 등 국정현안에 대하여 4개 정당 토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를 5월 2일(금)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정책토론회를 3차례 개최하나, 이번 대통령선거는 궐위로 인한 선거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3에서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4. 4.)의 다음 달(5. 1.)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5. 9.)까지 개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5월 중 한 차례만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각 정당의 입장과 정책을 다룬다. 진행방식은 우선 두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및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하고 마지막 주제에 대하여 주도권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토론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국민의힘 박수민 국회의원, ▲개혁신당 임승호 대변인, ▲정의당 권영국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계의무방송사인 KBS, MBC, SBS 외에도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네이버TV, 카카오TV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정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단 한 차례의 기회인 만큼,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2조의2에 따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토론회는 총 4회[▲5월 18일(일) 초청 1차, ▲5월 19일(월) 초청 외, ▲5월 23일(금) 초청 2차, ▲5월 27일(화) 초청 3차] 개최한다.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부.

부록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토론회 개최 개요

1.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5. 5. 2.(금) 10:00~12:00

○ 장 소: KBS 스튜디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2. 중계방송: KBS1 · MBC · SBS · 국회방송 · KTV국민방송 · 복지TV · 카카오투 ·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네이버TV 동시 생중계

3. 토 론 자

더 불 어 민 주 당	김한규 [여성가족정책조정위원장]
국 민 의 힘	박수민 [국회의원]
개 혁 신 당	임승호 [대변인]
정 의 당	권영국 [대표]

4. 사 회 자: 김용준(KBS 기자)

5.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토론주제	미국발 관세 쇼크...대책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각 당의 주요 정책은? 각 당의 사회통합 방안은?
진행방식	• 시작발언 • [주제1, 2]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주제3] 주도권토론 • 마무리발언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5. 9.

총 3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등 선정

총 4차례 진행되는 후보자토론회의 차수별 토론주제·사회자 선정

부록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9일(금) 실시한 전체 위원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의 토론주제와 사회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총 4회 개최하는 토론회 중 3회의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 후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성되며,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회의 후보자토론회는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으로 진행한다.

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의 시간총량제토론주제는 ▲초청1차[5월 18일(일)] 토론회는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초청2차[5월 23일(금)] 토론회에서는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초청3차[5월 27일(화)] 토론회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 선정되었다.

각 토론회의 사회자는 편상욱 SBS 기자(초청1차), 이윤희 KBS 기자(초청2차), 전종환 MBC 아나운서(초청3차)이며,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0분간 진행한다.

한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후보자수 확정 상황에 따라 토론주제가 달라질 예정이며 5월 19일(월)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고희경 SBS 기자가 진행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11일(일) 후보자등록이 확정된 후 초청후보자 등을 선정할 예정이며 토론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비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든 토론회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아리랑TV,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 카카오TV 등에서 생중계 될 예정이며,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사회자 개요 1부.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주제 및 사회자 개요

■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제1차 (경제)	[시간총량제토론]	•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편 상 욱 (SBS 기자)
	[공약검증토론]	•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제2차 (사회)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이 윤 희 (KBS 기자)
	[공약검증토론]	•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기후 위기 대응 방안	
제3차 (정치)	[시간총량제토론]	•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전 종 환 (MBC 아나운서)
	[공약검증토론]	• 정치 개혁과 개헌 • 외교·안보 정책	

※ 양자토론의 경우 시간총량제토론 주제는 동일하고, 주도권토론에서는 공약검증토론 2개 주제를 모두 포함함.

■ 「공직선거법」제82조의2제5항에 따른 토론회(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토론회)

구분 (토론분야)	토론주제		사회자
- (국정전반)	[9명 이하: 주제 2개]	• 정치 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 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 방안	고 희 경 (SBS기자)
	[10명~15명: 주제 1개]	• 각 후보의 핵심 공약(정치·경제·사회)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5. 16.

총 6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및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개최

초청 1차 18일(일) 오후 8시, 참석 후보자 4명, 경제분야 공약검증토론 등 진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오는 5월 18일(일)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SBS 스튜디오에서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하며, 참석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국회 의석수, 직전 선거 득표율,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결정되었다.

초청 1차 후보자토론회는 경제분야를 주제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 후,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실시한다. 토론회는 입식으로 진행되며, 편상욱 SBS 기자가 진행을 맡는다.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다음날인 19일(월) 오후 10시부터 SBS에서 개최되며 구주와(자유통일당), 황교안(무소속), 송진호(무소속)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다.

초청외 후보자토론회는 국정전반에 대하여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2가지 주제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후 후보자별 각 15분 내에서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좌식으로 이루어지며, 고희경 SBS 기자가 진행을 맡는다.

이 외에도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는 사회분야에 대하여 이윤희 KBS 기자의 사회로

23일(금) KBS에서,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정치분야에 대하여 전종환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27일(화) MBC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초청 1차와 동일하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아리랑TV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후보자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1차’ 및 ‘초청외’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부록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초청 1차’및 ‘초청외’후보자토론회 개요

■ 개최일시·장소 등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초청 1차	2025. 5 18.(일) 20:00 ~ 22:00	SBS (상암)	KBS, MBC, SBS	편상욱 (SBS 기자)	경제
초청외	2025. 5 19.(월) 22:00 ~ 24:00	SBS (상암)	KBS, MBC, SBS	고희경 (SBS 기자)	국정전반

■ 토론자(초청 대상)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김문수
4	개혁신당	이준석
5	민주노동당	권영국

■ 토론자(초청 외)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6	자유통일당	구주와
7	무소속	황교안
8	무소속	송진호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초청)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공동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30초 총량)	26분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주제1: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 C/D/A/B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주제2: 국가경쟁력 강화 방안〉 • D/A/B/C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D/A/B/C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마무리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계		104분30초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공약발표시간(1분30초) 고정

구 분	6명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	각 3분30초	각 5분	각 6분30초	각 9분30초

세부 운영 방법

■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 모든 후보자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약발표 후 같은 순서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진행함.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후보자에게 질문”하여야 하고, “답변은 최소 30초를 보장”하여야 함.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음.
- 주도권토론 시간 운용
 -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가급적 질문을 ‘1분 이내’로 함.
 - 상대 후보자의 답변시간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의 시간에서 차감되므로, 상대 후보자의 답변이 너무 길어지면 제지할 수 있음.
 - 진행 중 사회자가 개입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어진 주도권토론 시간은 멈추지 않음.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함.
-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후보자(A)가 다른 후보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후보자(B)의 잔여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후보자(A)는 후보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초청외)

[시작발언 ➡ <주제1, 2>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 마무리발언]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후보자(각 1분30초)	4분30초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1: 정치개혁 및 외교·안보 정책>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5분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15분 총량)	45분
	<주제2: 경제 활성화 및 사회 통합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C/A/B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5분
	• C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15분 총량)	45분
마무리발언	• A/B/C 후보자(각 1분)	3분
계		107분30초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구 분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주제별) 시간총량제토론	각 15분	각 11분	각 8분	각 6분	각 5분	각 4분	각 3분

부록

세부 운영 방법

■ 시간총량제토론

- 사회자 공통질문에 대한 각 후보자의 순차적인 답변과 첫 번째 발언할 후보자는 지정되어 있고, 이후부터는 순서없이 각 후보자간 자유롭게 토론함. 이 경우, 미리 사회자에게 거수 등 신호를 보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함.
- 후보자의 1회 발언은 가급적 '1분30초 이내'로 함. 발언 신청자가 없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가 동시에 발언권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자는 각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을 우선 고려하여 시간이 많이 남은 순으로 발언할 후보자를 지명함.
-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를 지명하여 질문하는 경우
 - (발언신청이 없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의 답변 의사를 확인, 자연스럽게 이어받아 답변할 시 발언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후보자의 총량의 시간을 차감함.
 - (질문받은 후보자 외 다른 후보자의 발언신청이 있는 경우) 질문받은 후보자가 답변을 원할 경우, 사회자는 질문받은 후보자에게 발언기회를 우선 부여함. 단, 시간총량제토론은 진행방식 상 즉답 의무 없음(본인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강제할 수 없음).
 - 후보자(A)가 다른 후보자(B)에게 질문하고자 할 때, 후보자(B)의 잔여발언시간이 모두 소진된 경우, 후보자(A)는 후보자(B)에게 자신의 남은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시간을 줄 수 있음.

■ 공통

- 각 진행방식에서 잔여발언시간은 서로 이월·합산되지 않고, 해당 진행방식 종료 즉시 소멸 처리함.
- 후보자의 잔여발언시간이 5초 이하로 남았을 때는 소멸된 것으로 보고, 발언시간 종료 즉시 마이크 음소거함.
- 방송시간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 마무리발언 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총 방송시간: 120분).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5. 22.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5월 23일(금) 오후 8시, 사회 분야 공약검증토론 등 진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3일(금)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KBS 스튜디오에서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자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한다.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는 사회분야를 주제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에 대하여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 후,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차례의 ‘공약검증토론’을 실시한다. 토론회는 입식으로 진행되며, 이윤희 KBS 기자가 진행을 맡는다.

토론회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아리랑TV 등을 통해서 동시 생중계된다.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이다. 또한,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국민은 언제든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대통령선거의 마지막(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는 전종환 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27일(화) MBC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정치 분야에 대해 진행되며, 초청 2차와 동일하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입식으로 이루어진다.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2차 후보자토론회 개요

■ 개최일시·장소 등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초청 2차	2025. 5. 23.(금) 20:00 ~ 22:00	KBS (여의도)	KBS, MBC, SBS	이윤희 (KBS 기자)	사회

■ 토론자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김문수
4	개혁신당	이준석
5	민주노동당	권영국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공동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사회 갈등 극복과 통합 방안〉 • 사회자 공동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30초 총량)	26분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주제1: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의료 개혁〉 • C/D/A/B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주제2: 기후 위기 대응 방안〉 • D/A/B/C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D/A/B/C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마무리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계		104분30초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공약발표시간(1분30초) 고정

구 분	6명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	각 3분30초	각 5분	각 6분30초	각 9분30초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5. 26.

총 2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개최

5월 27일(화) 오후 8시, 정치 분야 공약검증토론 등 진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5월 27일(화)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MBC 스튜디오에서 이번 대통령선거의 마지막 후보자토론회(초청 3차)를 개최한다.

이번 후보자토론회는 정치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며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권영국(민주노동당) 후보가 참석한다.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사회자 공통질문에 답변한 후 6분 30초 내에서 다른 후보자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총량제토론을 진행한다. 이후 공약검증토론에서 각 후보자는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2명 이상의 후보자와 토론하며 최소 30초의 답변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토론회는 입식으로 진행되며, 사회는 전종환 MBC 아나운서가 진행한다.

토론회는 KBS, MBC, SBS, 국회방송, KTV국민방송, 복지TV, 아리랑TV 등에서 동시 생중계되며, 유튜브(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네이버TV(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도 실시간 생중계 될 예정이다. 토론회를 시청하지 못한 유권자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토론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제에 대한 각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검증할 수 있는 마지막 후보자토론회인 만큼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밝혔다.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개요 1부.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초청 3차 후보자토론회 개요

■ 개최일시·장소 등

구분	개최일시	개최장소	중계방송사	사회자	토론분야
초청 3차	2025. 5 27.(화) 20:00 ~ 22:00	MBC (상암)	KBS, MBC, SBS	전종환 (MBC 아나운서)	정치

■ 토론자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	국민의힘	김문수
4	개혁신당	이준석
5	민주노동당	권영국

■ 토론주제 및 진행방식

진행방식	내 용	소요시간
시작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사회자 공통질문 후 시간총량제토론	〈주제: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 • 사회자 공통질문(30초) ⇒ B/C/D/A 후보자 답변(각 1분30초)	6분30초
	• B 후보자 발언을 시작으로 시간총량제토론(각 6분30초 총량)	26분
공약검증토론 (후보자 공약발표 후 주도권토론)	〈주제1: 정치 개혁과 개헌〉 • C/D/A/B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C/D/A/B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주제2: 외교·안보 정책〉 • D/A/B/C 후보자 공약발표(각 1분30초)	6분
	• D/A/B/C 후보자 주도권토론(각 6분30초) * 2명 이상과 토론, 최소 답변시간 30초 보장	26분
마무리발언	• A/B/C/D 후보자(각 1분)	4분
계		104분30초

〈참석 후보자 수에 따른 시간배정〉 ※ 공약발표시간(1분30초) 고정

구 분	6명	5명	4명	3명
시간총량제토론·주도권토론	각 3분30초	각 5분	각 6분30초	각 9분30초

보도자료

투표하는 발걸음
민주주의를 위한 큰걸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 COMMISSION

제공일자 2025. 7. 25.

총 4면

www.debates.go.kr

Tel. 02)3299-3835

중앙선거방송토론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한국정당학회와 공동 주최, 선거방송토론 발전방안 등 모색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조용구)는 오는 7월 28일(월) 오후 2시,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정당학회(회장 서정건)와 공동 주최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실시한 제21대 대통령선거(6. 3.) 후보자토론회의 분석·평가 및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책 중심의 선거방송토론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전문가와 연구진, 언론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윤재수 상임위원의 개회사 및 한국정당학회 서정건 회장의 인사말로 세미나를 시작하여, 총 3개 주제의 발제와 토론,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사회는 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가 맡는다.

▲ 제1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및 개선방안'(발제: 박경미 전북대 교수)으로 토론회 개최·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및 토론회 진행방식, 사회자의 역할, 제도개선 사항 등을 살펴보고, 장혜영 명지대 교수, 정준희 한양대 교수, 고유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제2주제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분석'(발제: 박영득 충남대 교수)으로 유권자 대상 후보자토론회 시청 전·후의 여론조사를 통한 토론회의 효과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김희경 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성예진 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 마지막 제3주제는 ‘언론에서 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발제: 최성민 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으로 후보자토론회의 방송제작 환경 실태 및 토론회 관련 언론보도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강연곤 중앙대 교수와 우병득 인천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각계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수렴하는 소중한 기회로 삼고, 나아가 선거방송토론 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붙임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개요 1부.

[붙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세미나 개최 개요

■ 개최일시: 2025. 7. 28.(월) 14:00~17:00

■ 개최장소: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홀(서울 영등포구 소재)

■ 주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한국정당학회 공동 주최

■ 진행: 주제별 발제 및 토론, 질의응답

구분	시간	내용
개회	14:00~14:10 (10분)	국민의례
		개회사: 윤재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상임위원) 인사말: 서정건(한국정당학회 학회장)

사회자: 박주연(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주제1	14:15~15:05 (50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평가 및 개선방안
		발제(20분): 박경미(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20분): 장혜영(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교수) 정준희(한양대 미디어학과 교수) 고유나(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사무국장)
		질의응답

구분	시간	내용
주제2	15:05~15:50 (45분)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효과 분석
		발제(20분): 박영득(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15분): 김희경(공공미디어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성예진(성균관대 좋은민주주의연구센터 연구원)
		질의응답
	(10분)	〈중간휴식〉
주제3	16:00~16:45 (45분)	언론에서 본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발제(20분): 최성민(KBS 선거방송기획단 팀장)
		토론(15분): 강연곤(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우병득(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질의응답
폐회	16:50	〈폐회〉

나. 주요 언론보도 현황(지면보도)

매일경제

李 “美관세협상 조기타결 불필요” 金 “7월8일 전 끝내겠다”

대선후보 첫 TV토론

0%대 성장률 책임감

李 “가정부 장관 책임 없다”
金 “반대한 한 민주당도 책임”

경제활성화 책임 시작

李 “바로 주정부 내수진작”
金 “소상공인 재무 조정할 것”
이준석 “후, 맞으로 맞는 상황”

경제 분야를 주제로 한 6·3 대선 첫 TV토론에서 양대 정당 후보가 미국과의 경제협상 관련 주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8일 서울 삼성로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1대 대통령선거 후보간 토론회 1시간 30분 중에서 “가정부 장관을 줄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미국 내에서 우리 경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부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미 간혹의 불확실성도 있을 것이고 경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사이에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더라도 국익을 잃을 것 없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부수(국민의힘),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준석(자유한국당) 후보. 이날은 2025년 5월 2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방송된 SBS 8TV 토론회 중 한 장면이다.

이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한미FTA, 미국과의 경제협상, 정부 각료들의 미국 방문 등을 둘러싸고 “가정부 장관을 줄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발적 무역협상을 했다’고 언론했다”며 “정부 각료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사이에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더라도 국익을 잃을 것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한미FTA, 미국과의 경제협상, 정부 각료들의 미국 방문 등을 둘러싸고 “가정부 장관을 줄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발적 무역협상을 했다’고 언론했다”며 “정부 각료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사이에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더라도 국익을 잃을 것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선 국면에서 한미FTA, 미국과의 경제협상, 정부 각료들의 미국 방문 등을 둘러싸고 “가정부 장관을 줄조기 타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진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발적 무역협상을 했다’고 언론했다”며 “정부 각료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사이에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더라도 국익을 잃을 것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현재 살리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단기적으로도 어렵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도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도 안보지능(AD) 등 한미 간 산업 국익을 위해 산업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과 활성화를 제법으로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의 대외정책을 ‘달성 불가능’으로 규정하면서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협상에서 정부 각료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사이에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더라도 국익을 잃을 것 없다”고 밝혔다.

한미 FTA는 현재 살리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은 단기적으로도 어렵다. 이 후보는 단기적으로도 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도 안보지능(AD) 등 한미 간 산업 국익을 위해 산업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 후보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 등 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업 경영과 활성화를 제법으로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후보의 대외정책을 ‘달성 불가능’으로 규정하면서 집중 공격했다.

이 후보는 “미국과 협상에서 정부 각료들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이 우리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어보고 제책하면서 ‘그때까지 잘 견디라’고 밝혔다. 대선이 끝난 뒤 몇 년 동안 사이에 많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다.

이 후보는 이날 “미국과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이라며 “우리가 어떤 편을 택하더라도 국익을 잃을 것 없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TV토론 후 상승세”... 이준석, 두자릿수 지지율 총력

광주서 호남 표심 구애

개혁신당, 동탄의 기적 강조
컴프측 당내 조사 결과 공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주자가 20일 광주 북구 소재 전민당을 방문해 학생회관 앞에서 한 학생과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전민당 제공)

개혁신당이 대선후보 TV 토론회 이후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토론회 후 실시된 여론조사부터는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10%를 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TV 토론 이후 상승세를 탔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동탄모임 선거연호에 박자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지율 상승을 바탕으로 지난 총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승리한 동탄 지역(화성

을)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후보와 3자 대결을 벌여 승리를 재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준석 후보가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호형제계론 등을 거론한

며 존재감을 드러낸 게 먹혀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20일 학원계 개혁신당 공동선 대의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내 자체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음을 공개했다. 한 위원은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언급했다가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까지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보수진영 대선 후보로는 이재적으로 이준석 후보는 지난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 한 후 사흘째 ‘보수 협치’인 광주에 머물며 호남 표심 구애에 나섰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강기정 광주시장과 만담하고 전

남대에서 학생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민주당·진보 진영 지지세가 강한 호남과 2030세대를 흔들어 이변 표를 노리는 모습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인해 많이 늘렸을 광주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올린다”고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다시 한번 이준석 의원에게 단일화를 요구하며 만났다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준석 후보님께만 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자. 이준석 후보의 일정과 시간이 맞으셨다면 패시프를 통해 전했다. 안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에서 많은 것을 할 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희석 기자

문·파·일·보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001면 1쪽

‘굳히기냐 반전이나’ 마지막 기회

‘6·3 대선’ 오늘 3차 TV토론
정치 주제로 ‘네거티브’ 전망
이재명, ‘1위 유지’ 방어 전략
김문수, 개헌 진정성 등 공세
이준석, 대안세력 존재감 부각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7일 밤 ‘정치’를 주제로 대선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열리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좌우할 막판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28

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깡통이’ 기간에 진입해 이번 토론회가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공개 경합의 장으로, 후보들은 이날 유세 일정 없이 TV토론 준비에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지지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깡어전’에 주력하며 정치개혁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내놓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거론하며 향후 국정운영과 개헌에 관한 구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이재명 후보 개헌안을 검증하는 한편,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는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만큼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일기 문제를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 커피왕가 논란, 거북선 유세 논란에 화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임사태와 ‘정치 양극화’의 책임을 거대 양당에 돌리며 대안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에겐 개헌·탄핵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향해선 민주당의 탄핵·임명 강행 등을 지

적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 것은 만큼 두 자릿수로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단일화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논 김경 관계가 관전 포인트로, 이재명 후보는 이를 ‘불관 단일화’로 규정하고 어공을 펼 가능성이 높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TV 토론회가 대선 일주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자,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라고 말했다. 이은지·최영서 기자
▶ 관련기사 5면

한국경제

2025년 5월 24일 토요일 A01면 1쪽



2차 TV토론 - 주역들 원 대선후보들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6·3 대통령 선거' 2차 TV토론회에 앞서 후보들이 주목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한겨레

2025년 5월 27일 화요일 A35면 1쪽

공약 감감이 대선, 판단 근거 역할 하는 TV 토론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이 열린다. 앞선 두 차례 TV 토론은 경제와 사회를 주제로 했고, 이번에는 정치 분야 토론이 예정돼 있다. 정치 개혁, 개헌, 외교·안보 공약에 대한 각 후보들의 견해를 들어볼 사실상 유일한 기회다.

갑작스레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과 주요 사안에 대한 견해를 확인할 기회를 잘 갖지 못했다. 민주당은 재외 투표가 종료된 이후인 26일에도 공약집을 공개하지 못했다.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26일 저녁 공약집을 발간했고 민주당도 29~30일 사전 투표 전까지는 공약집을 내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읽어볼 새도 없이 투표장에 들어가기야 할 판이다.

2017년 대선도 이번과 같이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졌지만 그래도 투표 열흘 전에는 양당의 공약집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각당이 서둘러 공약집을 냈다가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려는 것일 판 비단도 나오고 있다.

그 사이 한국기자협회가 추진했던 대선 후보 TV 합동 토론회도 이재명 후보가 변경된 일정에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서울시가 진행한 ‘약자와 함께하는 서울’ 토론회에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만 참석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 TV 토론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앞선 두 차례 TV 토론에서 후보들은 추경, 관세 협상, 일자리, 에너지 정책, 임금 개혁 등에 대한 각자의 공약을 설명했다.

후보들이 서로의 욕심·감정 의혹을 제기하거나 단일화, 부정선거에 대한 입장을 묻으며 네거티브 공방을 벌이기도 했지만, 이 또한 각 후보의 여러 면모를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런데도 지상파와 종편을 합한 1·2차 TV 토론의 총 시청률은 역대 대선 처음으로 20% 미만을 기록했다. 더 많은 유권자가 3차 TV 토론을 시청하고 나뉘는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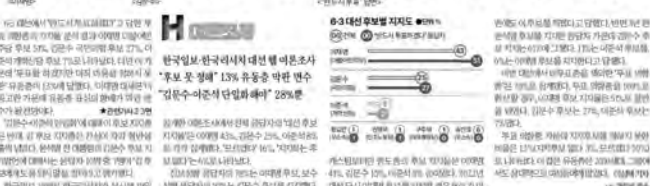
노동주권 실현을 위한
기술결정 의사결정 과정

美 신용등급 강등 충격
트럼프 감세 구상 꼬여
부동산 개발자와 맞 부딪힐 듯 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대한 금융 위기 사태에 직면한 채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 전망이다. 그 결과 미국 내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충격적인 소식을 맞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구상을 꼬여 부동산 개발자와 맞 부딪힐 듯 내리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구상을 꼬여 부동산 개발자와 맞 부딪힐 듯 내리 내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 구상을 꼬여 부동산 개발자와 맞 부딪힐 듯 내리 내릴 전망이다.

글로벌이슈를 볼 것만 주의할 사항
미국 경제, 가계 지출, 정부 지출 모두 위축

李 43% 金 25%... 투표의향층 51% “李 지지”



이재명 “대미 관세 협상 신중히” 김문수 “외교 안보와 연계해 속도전”

2대 대통령 후보 첫 TV토론회
이준석 “한미 우방국 안식 확실해”
권영국 “야당적 통상에 국적 안해”
김문수-이준석 “이재명은 찬성” 협동



이준석(왼쪽)과 김문수(가운데)가 19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 5월 19일 대선 후보 첫 TV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李 ‘4년 연임제’ 개헌 띄우자, 金 “자기 대통령이든 3년만”

후 ‘자기 대통령당에는 연임 규정 내적용’
정신부적조 도입, 국회가 총리 추천을
“대통령을 불초추직권 완전히 폐기” 맞붙

민주 “李 안정적” 국힘 “金 경륜 돋보여” ... 너도나도 “토론 승자”

제2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1차 TV 토론회 이후 각 당의 평가는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안정적이었다”고 자평했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의 경륜이 돋보였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1차 토론에서 드러난 후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조소래 민주당 상근대변인의 공보 단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후보가 (지난 18일 TV 토론에서)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였다”며 “김 후보는 준

민주 “이준석 학예회 같아” 혹평
국힘 “태도, 무지·무책임의 전형”
개혁신당 “토론, 대선 흐름 바꿀 것”

비 안 된 줄속 후보임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자기 내용이나 주장이 없고 학예회 같았다”고 평가했다.

반면 준비한 전략을 100% 발휘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있었다. 민주진 진격자는 통화에서 “이준석 후보 공력에 최대대 대응하지 않은 전략을 준비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보니 준비한 대로만 가지진 않았다”며 “다음 토론에선 이 전략을 제대로 구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를 비판하면서 김 후보가 돋보였다고 분석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의 토론 태도는 무지와 무책임 그리고 준비 안 된 토론의 전형이었다”며 “가업 승강 등 명제나 주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 무책임하게

나쁜짓을 풀어 국민에게 인식 쓰면 된다는 식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경륜이 돋보였고, 행정 책임자로서 안정감을 드러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인사는 김 후보의 존재감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공격한 것만 부각됐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에선 이준석 후보가 존재감을 뽐냈고, 이번 토론이 향후 흐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최창환/이준기/정성현 기자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A06면 10면

시민들, TV토론회 시선집중 27일 서울역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3차 대선후보 TV토론회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2024.11.19 12:10 10.1016/j.aml.2024.101611

〈머핀〉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월 서울 대림이대공원에서 열린 투표 캠페인에서 한 가족이 투표 해법을 하고 있다. 한주영 기자

4. 선거방송토론 관련 법규

- 「공직선거법」
- 「공직선거관리규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부록

공직선거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②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10. 1. 25., 2015. 8. 13., 2022. 1. 21., 2025. 10. 1.>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한국방송공사와 「방송 문화진흥회법」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대출자자인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상파방송사(공영방송사가 아닌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단체로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학계· 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

1의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영방송사, 지상파방송사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미디어통신 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 위원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수를 말한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 중에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개정 2010. 1. 25.>

④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상임위원 1인을 두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정당의 당원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영방송사 또는 관련 기관·단체등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또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⑨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⑩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및 상임위원의 대우, 사무국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4. 1., 1997. 11. 14., 2000. 2. 16., 2002. 3. 7., 2004. 3. 12., 2005. 8. 4.>

1. 삭제 <2004. 3. 12.>

2. 삭제 <2004. 3. 12.>

3. 삭제 <2004. 3. 12.>

②제1항에서 “대담”이라 함은 1인의 후보자 또는 대담자가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하여 사회자 또는 질문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토론”이라 함은 2인 이상의 후보자 또는 토론자가 사회자의 주관하에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사회자를 통하여 질문·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 11. 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최단체명·대표자성명·사무소

소재지·회원수·설립근거 등 단체에 관한 사항과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성명, 대담 또는 토론의 주제, 사회자의 성명, 진행방법, 개최일시와 장소 및 참석예정자수 등을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청할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의 참석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의한 대담·토론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게시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대담·토론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실시하여야 하되, 후보자가 초청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대담·토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2항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다.

⑦제1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는 그 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⑧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의 규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98. 4. 30.>

⑨대담·토론회의 개최신고서와 표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1. 14.>

[제목개정 2000. 2. 16.]

제82조(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5. 8. 4., 2007. 1. 3., 2008. 2. 29., 2009. 7. 31., 2010. 1. 25.>

②제1항의 대담·토론회는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한다.

③제1항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④제71조(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제12항, 제72조(放送施設主管 候補者 演說의 放送)제2항 및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2항·제6항·제7항의 규정은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 2. 16.>

[제목개정 2000. 2. 16.]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3회 이상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2회 이상

②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지정하는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1회 이상

③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④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나.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가.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구의 구역이 변경되어 변경된 구역이 직전 선거의 구역과 겹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그 보궐선거등을 포함한다)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다. 제1호 다목에 의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⑤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의 시간이나 횟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의 초청대상 후보자의 대담·토론회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4항 후단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초청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제10항 또는 제11항의 중계방송을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게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8. 4., 2018. 4. 6.>

⑦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대담·토론회(합동방송 연설회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라 한다)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⑧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에서 후보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거나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자막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⑨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대담·토론회장에서 진행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중지를 명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대담·토론회장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⑩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여야 하되,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는 오후 8시부터 당일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전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22. 1. 21.>

⑪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방송사 또는 지상파방송사가 중계방송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대담·토론회를 텔레비전방송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송시설이용료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 8. 4., 2022. 1. 21.>

⑫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20. 12. 29.>

⑬「방송법」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그의 부담으로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없이 중계방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⑭대담·토론회의 진행절차, 개최홍보, 방송시설이용료의 산정·지급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 3. 12.]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①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이 방송을 통하여 정강·정책을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선거일전 9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의 다음달)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일까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당(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공표한 정당을 제외한다)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하여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토론회”라 한다)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1.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②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제7항 내지 제9항·제10항 본문·제12항 및 제13항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담·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 8. 4.〉

③정책토론회의 운영·진행절차·개최홍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중전 제82조의3은 제82조의4로 이동 〈2004. 3. 12.〉]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1. 25., 2014. 2. 13., 2015. 8. 13., 2017. 2. 8., 2018. 4. 6., 2022. 1. 18., 2023. 8. 30., 2023. 12. 28.〉

3의3.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2025. 5.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28호, 2025. 5. 8., 일부개정]

제143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②법 제261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4. 3. 12., 2010. 1. 25., 2014. 2. 13.〉

【별표3】과태료부과기준 〈개정 2024. 3. 21.〉

과태료부과기준

(단위: 만원)

처분대상	관계법조	법정 상한액	부과기준
3의5.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행위	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3·법 제82조의2제4항	1,000	가. 매회: 1,000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5. 9.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33호, 2025. 9. 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제2조(적용범위)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의 규정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합동방송연설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의 주관·진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8. 4.〉

제2조의2(지상파방송사 등의 범위)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지상파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파방송사: 「방송법」 제2조 및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한다)
2. 지상파방송사가 포함된 단체: 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사만을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단체. 이 경우 해당 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회원수가 많은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3조(협조요구) ①각급토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인력·기술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영방송사 및 지상파방송사(이하

“공영방송사등”이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 기타 관련기관·단체에 대하여 협조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12. 23., 2022. 1. 26.>

②제1항의 협조요구를 받은 공영방송사등과 관련기관·단체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부록

제4조(설치) ①중앙토론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토론위원회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둔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8. 1. 19.>

②시·도토론위원회와 구·시·군토론위원회의 명칭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앞에 해당 행정구역명을 붙여 표시한다. <개정 2010. 1. 25.>

제5조(직무) ①중앙토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 8. 4.>

1.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를 포함한다)의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3. 「정당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관한 사무

②시·도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를 행하며, 구·시·군토론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 8. 4.>

③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이 경우

자치구·시·군의장선거에 있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시장선거에 있어 1개의 선거구의 구역안에 2이상의 토론위원회가 있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2의3에 따라서 시장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토론위원회가 그 사무를 행한다. <개정 2005. 8. 4.>

제5조의2(사무의 대행) ①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관할하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그 관할구역 안의 토론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다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진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해당 구·시·군토론위원회로 보며, 토론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4항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구·시·군토론위원회가 개최할 대담·토론회(합동방송연설회를 포함한다)의 주관·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사무를 대행하거나 인근 구·시·군토론위원회로 하여금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 8. 4.]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0. 1. 2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토론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의뢰받은 정당·공영방송사등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2022. 1. 26.>

③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해임하는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10조에 규정된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11. 11. 30.>

⑤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제목개정 2005. 8. 4.]

제6조의2(지상파방송사의 위원 추천) 법 제8조의7제2항제1호의2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는 지상파방송사는 해당 시·도토론위원회의 관할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할구역”이라 한다)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방송사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구역을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상파방송사가 둘 이상인 때에는 그 관할구역 안의 방송구역이 넓은 방송사가 추천하되, 방송구역이 같은 때에는 지상파방송사간 합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2. 1. 26.]

제7조(위원장) ①위원장은 토론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 1. 25.>

②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토론위원회의 경우에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25.>

제8조(상임위원)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6. 1. 15.>

③상임위원은 중앙토론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방송사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
2. 대학에서 신문방송학·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3년이상 근무한 자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급토론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11. 30.>

제10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19. 11. 22., 2022. 1. 26.>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중앙 및 시·도 토론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공영방송사등이 추천한 위원으로서 그 추천공영방송사등의 요구가 있는 때
6. 법 제8조의7제2항제2호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을 겸하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임·해촉 또는 파면된 때
7.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하는 때

제11조(위원의 대우) ① 각급토론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 3. 24., 2010. 1. 25.>

② 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토론회등의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하는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도토론위원회 및 구·시·군토론위원회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7. 2. 16., 2008. 3. 24., 2025. 9. 12.>

제12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떤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소집) ①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법령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도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구·시·군토론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0. 1. 25.>

제14조(위원회의) ①각급토론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이며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의결사항으로서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각급 토론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간사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2.>

④의안표지·의안대장·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05. 8. 4.>

제15조(위원회회의의 공개) 각급토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토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정족수) 각급토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소위원회) ①각급토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토론회등의 세부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담·토론의 진행방식, 주제·질문에 관한 사항

3.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의 주관·진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토론위원회가 정한 사항

②소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0. 1. 25.>

④소위원회는 그 운영결과를 지체없이 당해 토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자문위원등)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방송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은 토론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는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당해 토론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제3장 사무기구

제19조(중앙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중앙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 토론기획팀과 방송토론팀을 둔다. <개정 2018. 1. 19., 2024. 1. 19.>

②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1. 25., 2013. 11. 25., 2014. 5. 27., 2018. 1. 19.>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 25.>

1. 토론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무
2. 토론회등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사무
3. 토론회등의 평가 및 백서 발간에 관한 사무
4. 토론회등의 기법 연구·개선에 관한 사무

5.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6. 시·도토론위원회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7.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8.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무
 9. 예산의 집행 및 청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0. 보안업무 및 문서관리에 관한 사무
 11. 그 밖에 토론회등을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 ④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제20조(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 ①시·도토론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홍보과장을 두지 아니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8. 1. 19.>

② 시·도토론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과 2명 이내의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8. 1. 19., 2023. 7. 31.>

③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 8. 4.>

1. 대담·토론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 등에 관한 사무
3. 구·시·군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는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5. 단체·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6. 기타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21조(구·시·군토론위원회 간사장 등) ①구·시·군토론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9.>

② 간사장은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 겸임한다. 다만,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두고 있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담당관 또는 지도담당관을 간사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9., 2019. 11. 22., 2021. 10. 22., 2023. 7. 31.>

③ 간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10. 1. 25., 2018. 1. 19.>

1.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및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무
3. 법 제81조 또는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의 지원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민주시민 토론문화의 육성 등을 위한 교육·연수에 관한 사무

[제목개정 2018. 1. 19.]

제4장 토론회등의 운영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 법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언론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3. 7. 31.>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공영방송사와 서울특별시의 안에 있는 지역방송사업자에 한한다)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 가. 해당 선거구역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 나. 해당 선거구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

제23조(대담·토론회) ①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법 제82조의2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정하여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중계방송사 및 법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후보자 등을 지정할 정당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보자는 선거기간개시일의 다음 날까지 참석여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참석확인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해당 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참석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참석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담·토론회 개최일의 다음 날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각급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의 사회자·질문자를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중에서 공정한 자로 선정한다.

④대담·토론회의 주제와 질문사항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언론사·학계·법조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를 수집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도 또는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중앙 또는 시·도토론위원회가 제시하는 주제와 질문사항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⑤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대표자가 법 제82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지정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의 좌석과 발언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이 대리인에게 추첨하게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등 또는 그 대리인이 추첨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토론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후보자등을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⑥대담·토론회는 사회자가 질문한 후 후보자등이 답변하는 형식과 사회자를 통하여

후보자등간 상호 질문·답변하는 형식 등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대담·토론회의 진행방법은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0. 1. 25., 2016. 1. 15.>

⑦ 각급토론위원회는 등록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명부를 제출한 정당을 말한다)의 총수가 2명 이상 4명 이하인 경우에 제2항에 따라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모든 후보자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등을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⑧ 각급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이하 이 항에서 “초청 외 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법 제8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모든 초청 외 후보자가 동의하거나 초청 외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2010. 1. 25., 2019. 11. 22.>

⑨ 각급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2제6항에 따라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게시하여야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각급토론위원회를 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중앙토론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신설 2018. 4. 6.>

제24조(합동방송연설회) ① 구·시·군토론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모든 후보자를 대상으로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1.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수가 1인뿐이거나 5인 이상인 경우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참석확인서를 제출한 후보자수가 법 제82조의2제4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후보자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담·토론회의 개최·진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 및 제23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구·시·군토론위원회가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지체없이 당해 선거관리위원회·후보자 및 중계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일시 및 중계방송사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일시 및 중계방송사로 하되, 일시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③합동방송연설회에서 후보자의 연설순위는 추첨에 의하여 정하며, 후보자가 자기의 연설순위의 시각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제23조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은 합동방송연설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답·토론회”는 “합동방송연설회”로 본다.

제25조(정책토론회) ①중앙토론위원회가 법 제82조의3 또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일 전 7일까지 일시·장소 및 중계방송사 등을 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 제82조의3제1항 또는 「정당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당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8. 1. 19.>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정당은 정책토론회 개최일전 3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에 한한다) 또는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정당의 대표자등”이라 한다)의 참석승낙서를 중앙토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③제23조제2항 후단부터 제6항까지(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정책토론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대답·토론회”는 “정책토론회”로, “해당 토론위원회”는 “중앙토론위원회”로, “후보자”는 “정당의 대표자등”으로 본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제26조(토론회등의 개최시간) 토론회등의 1회 개최시간은 120분 이내에서 후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25. 9. 12.]

제27조(토론회등의 중계방송) ①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을 중계방송하는 때에는 생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없이 녹화방송을 할 수 있다.

②공영방송사등은 협의에 의하여 대담·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선거일전 3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개시일)까지 선거구단위로 정하여 당해 토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③법 제82조의2제11항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선거일 전 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선거인명부작성기간만료일)까지 해당 토론위원회에 방송시설명·이용일자·시간대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2. 1. 26.>

④중앙토론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영방송사등과 협의하여 정책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시설명·이용일자 및 시간대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6.>

⑤중계방송사가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할 때에는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이 방영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중계방송시설 등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 1. 25.>

제28조(토론회등의 공표·홍보) ①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중계방송사명·중계방송일시, 참석후보자등의 성명, 사회자의 성명, 대담·토론의 주제 및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여 개최일전일까지 공표하고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각급토론위원회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③중계방송사는 토론회등의 개최일시·장소 등을 광고 또는 자막방송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29조(방송시설이용료의 지급) ①법 제82조의2제11항 후단에 따른 방송시설이용료는 당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청구를 받아 지급하되, 다음 각호에 의한 금액(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의 금액을 말하며, 합동방송연설회를 중계방송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존의 시설·장비나 무대를 사용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2022. 1. 26.>

1. 삭제 <2022. 1. 26.>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시설이용료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30으로 나눈 값(10 미만의 단수는 10으로 본다)에 당해 선거구의 세대수(그 수가 7만 미만인 경우에는 7만으로 한다)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시설이용료의 청구는 다음 각호의 비용에 의한다.

1. 방송제작비용 : 시설·장비사용료, 무대설치비, 타이틀제작료 및 연출 등 인건비

2. 방송비용 : 송출료

부록

제30조(토론회등의 질서유지) ①토론회등에서 사회자는 참석후보자등이 배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 또는 연설하는 때에는 당해 토론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발언 또는 연설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은 참석후보자등이 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때에는 사회자로 하여금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도록 하고, 자막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각급토론위원회위원장 또는 그가 미리 지명한 위원이나 사회자는 토론회등에서 참석후보자등의 발언 또는 연설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중지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토론회등의 장소 밖으로 퇴장시킬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1조(사무처리 등) 각급토론위원회의 조직·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예산(편성 및 결산)

말한다)·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개정 2005. 8. 4.>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토론회등의 의제설정, 개최·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앙 및 시·도토론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11. 25.>

[제목개정 2013. 11. 25.]

제33조(예산집행) 토론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당해 토론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도 및 구·시·군토론위원회는 당해 토론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제34조(위임규정) 토론회등의 주관·진행 기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급토론위원회가 정한다.

부칙<제633호, 2025.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관리규정

[제명변경 2021. 9. 23.]

제 정	2013.11.1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3-1호
개 정	2017. 1.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7-1호
	2018. 1.1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7-2호
	2019.12.2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19-1호
	2021. 9.23.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고시	제2021-1호

부록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6항에 따라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대담·토론회 및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라 한다)의 주관·진행, 그 밖에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사회자의 선정)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토론위원회”라 한다)는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 등에 토론회의 사회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사회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제3조(질문자의 선정) ① 토론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문자를 둘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일반국민 또는 전문가 중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해당 토론위원회의 위원회의에서 선정한다.

③ 질문자는 해당 토론회 시작 전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토론자(후보자, 해당 정당의 대표자, 정책연구소의 소장 또는 해당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토론자”라 한다) 또는 그 관계자와 토론회에 관한 정보나 의견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개정 2021. 9. 23.>

제4조(토론회 진행방식의 결정 등) ① 토론회의 진행방식은 참석할 토론자의 수를 예상하여 단일 또는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중앙토론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8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토론회의 진행방식을 선거일전 60일(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및 재선거에 있어서는 30일)까지 참석예정 후보자 수별로 각각 결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결정하여 이를 공표·통지한 후 후보자의 사퇴·사망·등록무효, 초청대상 정당의 변경 또는 토론자의 불참 통보 등으로 참석 예정인 토론자 수가 달라지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진행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④ 제3항에 따라 진행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표·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제5조(질문사항의 수집과 공개여부) ① 토론위원회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견 또는 질문을 수집하여 토론회의 질문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토론위원회는 질문사항의 요지 또는 내용의 공개여부를 정하되 토론방법 등에 따라 질문사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6조(토론회장의 설비) ① 토론위원회는 법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정당법」제39조에 따른 참석대상 후보자·정당(이하 “후보자·정당”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토론회장 설비 내용을 개최일 전일까지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토론자와 사회자, 질문자 등의 위치
2. 토론자와 사회자의 대기실 및 분장실 등 기타 토론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삭제 <2021. 9. 23.>

② 토론회장은 토론자간에 차이가 없도록 공평하게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③ 토론위원회는 후보자·정당이 불참을 통보하여 오거나 불참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론자의 좌석 등을 설비하지 아니하며, 토론회장의 설비 후에 불참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토론회 시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좌석 등을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7조(토론회의 청중)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장의 설비나 질서유지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중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9. 23.>

1. 일반 유권자
 2.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단체의 회원 등
 3. 토론위원회가 참석 후보자·정당에게 균등하게 추천을 의뢰한 인원
- ② 청중은 토론회의 진행 중에는 박수를 치거나 발언을 하는 등 토론회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토론자의 착용·부착물) 토론자는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를 착용·부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의 토론자가 법 제68조의 선거운동용 윗옷·어깨띠를 착용·부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 선전구호 등을 게재한 표시물(소속 정당의 배지를 제외한다)을 착용·부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23.>

제9조(참고자료의 사용) ① 토론자는 토론회에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도표·그림·그 밖의 참고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1. 23., 2018. 1. 12.>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가 토론회 진행에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전자기기를 제공한 경우 토론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2., 2019. 12. 24.>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전자기기의 종류,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토론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9. 12. 24.>

[제목개정 2017. 1. 23.]

제10조(토론회의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공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토론진행표의 시간을 조정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질문자는 사전에 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질문사항으로 질문하여야 하며, 이와 다른 질문을 하는 경우 사회자는 질문자의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③ 토론자는 토론회의 진행 중 토론회장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그 토론자는 토론회장에 다시 입장할 수 없다.

④ 토론위원회는 참석대상 토론자가 불참하거나 참석 토론자가 토론회 진행 중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 사회자를 통해 그 사실을 고지하도록 하고 방송자막으로 표출하게 한다.

제11조(중계방송) ① 토론회의 중계를 주관하는 방송사(이하“중계주관방송사”라 한다)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대담·토론회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언론사(법 제8조의5에 따른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한다)의 토론회 중계방송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중계주관방송사가 토론회의 방송화면을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1. 화면구성은 토론자간 최대한 균등하도록 한다.
2. 시작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발언하는 토론자만을 비추도록 한다.
3. 토론회의 중계 도중 선거관련 속보를 자막 등의 형태로 방영할 수 없다.

③ 법 제82조의2에 따른 대담·토론회를 녹화방송으로 방영하는 경우 방영 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자막으로 알릴 수 있다. <신설 2021. 9. 23.>

제12조(재방송 및 다시보기) 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전에 해당 방송사가 동의한 경우 토론회를 재방송하게 하거나, 중앙토론위원회가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론위원회는 토론회의 발언내용 중 법에 명백히 위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토론회의 재방송 및 다시보기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9. 12. 24.]

[전문개정 2019. 12. 24.]

제13조 삭제 <2021. 9. 23.>

부칙 〈제2013-1호, 2013. 11. 1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1호, 2017. 1. 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7-2호, 2018. 1. 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1호, 2019. 12. 24.〉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1호, 2021. 9. 23.〉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

인 쇄 2025년 11월

발 행 2025년 11월

발행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72길 23
전화 : (02)3299-3827
팩스 : 0505-058-1173
[http : //www.debates.go.kr](http://www.debates.go.kr)

가 격 비매품

ISBN 979-11-94430-33-9



2025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방송토론 백서